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927-01

연구용역보고서
2015-02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방안 연구

2015. 12

연구기관

해외건설협회 • 법무법인 세종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927-01

연구용역보고서

2015-02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방안 연구

2015. 12

연구기관

해외건설협회 • 법무법인 세종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 참여 연구진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책임연구원
정종현 연구원
김효은 연구원
손준형 연구보조원

법무법인 세종 김대식 연구원
최우진 연구원

국토교통부 김중한 사무관

목 차

목차	i
그림목차	iv
표목차	v

제1장 연구개요 1

1.1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1.1.1 연구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2
1.1.3 연구의 구성	3
1.2 연구수행 방법	4
1.2.1 개요	4
1.2.2 진출유형별 설문조사	4
1.2.3 기관별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조사	5
1.2.4 현지 조사	6

제2장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 지원 필요성 7

2.1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 보증 현황	7
2.1.1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실태	7
2.1.2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발급 실태 분석	18
2.2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 필요규모	28
2.3 주요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30

제3장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 방안 53

3.1 금융기관의 보증발급 체계 분석	35
3.1.1 금융기관의 보증발급 부진사유	35
3.1.2 금융기관별 보증발급 체계에 따른 내역 분석	41
3.2 기존 보증지원 정책의 효과성	45
3.3 보증지원 대상 및 지원필요성	49
3.4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방안	52

제4장 국내 연기금·공제 현황 및 활용방안과 타산업 진흥기금 사례 분석 6

4.1 국내 연기금·공제 현황	56
4.1.1 국내 연기금 현황	56
4.1.2 국내 공제 현황	56
4.1.3 주요 기금의 법적 근거 및 재원조달방식	58
4.1.4 주요 기금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68
4.2 주요 기금 현황,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	70
4.2.1 타산업진흥기금 현황,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	70
4.2.2 금융성 보증기금 현황,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	78
4.2.3 해외의 건설보증제도	80

제5장 해외건설기금 필요성 및 조성방안 **48**

5.1 해외건설기금 목적 및 활용	84
5.1.1 해외건설기금 조성 필요성	84
5.1.2 해외건설기금 조성주체 및 활용범위	87
5.2 해외건설기금 재원 조달 방안	91
5.2.1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	91
5.2.2 기존 기금의 재원 활용	92
5.2.3 해외건설 기여금 신설	101
5.2.4 수출신용기관(ECA)의 특별출연	102
5.2.5 해외건설 대기업의 특별출연	103
5.2.6 조성규모 및 연간 예상 기금	105
5.3 해외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 방안	113
5.3.1 해외건설기금의 관리 및 운영주체	113
5.3.2 해외건설기금 리스크 관리 방안	115
5.4 해외건설기금의 기대효과 및 관련 법규 정비 방안	116
5.4.1 해외건설기금 기대효과	116
5.4.2 해외건설기금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검토 및 제·개정안	118

제6장 맺음말 **125**

[참고자료1] 중소·중견기업 수주현황	130
[참고자료2] 국내 기금의 종류	135
[참고자료3] 주요 기금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142
[참고자료4] 터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160
[참고자료5]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지	184
[참고문헌]	185

그 립 목 차

<그림 2.1> 중소기업 수주현황(2011년-2015년 6월)	7
<그림 2.2> 중소기업 해외수주 지역·공종별 현황	9
<그림 2.3>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지역·공종별 수주현황	10
<그림 2.4> 중견기업 원도급 기준 지역·공종별 수주현황	11
<그림 2.5>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공종별 수주현황	12
<그림 2.6>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2010~2014년 누계)	14
<그림 2.7>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2010~2014년 누계)	15
<그림 2.8> 수주금액과 매출액 추이	17
<그림 2.9> 기업규모별 보증발급 거래기관	23
<그림 2.10> 보증기관별 요구 담보	24
<그림 2.11> 해외 수주활동별 보증발급 형태	25
<그림 2.12> 복보증·복복보증 활용 이유	26
<그림 2.13> 보증발급 거절 사유	27
<그림 2.14> 필요 이행성 보증액 비교 현황	28
<그림 2.15> 최근 3.5년간 국내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액	31
<그림 2.16> 최근 3.5년간 보증서별 발급 금액	32
<그림 2.17> 최근 3.5년간 기업규모별 보증발급액 및 비율(국내 금융기관)	33
<그림 2.18> 최근 3.5년간 기업규모별 보증발급액 및 비율(국내 부보기관)	34
<그림 3.1> 거래단계별 보증발급	37
<그림 3.2> 수출입은행 해외 공사보증서 문구 샘플	40
<그림 3.3> 중소·중견기업 담보 및 신용도에 따른 보증발급 체계도	51
<그림 5.1>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른 ECA별 지원 대상	85
<그림 5.2> 해외건설 수주금액과 업체수 추이	86
<그림 5.3> 해외건설기금의 활용범위	90
<그림 5.4> 타기금 전입 해외건설기금의 예상 규모 추정	107
<그림 5.5> 정부출연 해외건설기금의 예상 규모 추정	110
<그림 5.6> 해외건설기금의 관리 및 운영	114
<그림 5.7> 해외건설기금의 리스크관리 방안	116
<그림 6.1> 한국과 터키의 보증 발급 순환 구조	128

표 목 차

<표 2.1> 수주금액과 매출액의 상관관계 분석	17
<표 2.2> 최근 3.5년간 해외건설 수주 실적	29
<표 3.1> 국내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발급 이유	36
<표 3.2> 해외건설공사 보증종류	38
<표 3.3> C은행의 자체 신용등급 기준표	41
<표 3.4> A은행과 C은행의 담보비율 비교 (2012-2015.6)	42
<표 3.5> 발급기관별 평균 수수료율 (2012-2015.6)	43
<표 3.6> 기업규모별 발급액 및 비율 (2012-2015.6)	44
<표 3.7> 정책금융기관별 보증지원 확대현황(2014년 기준)	46
<표 3.8> 사업성평가 현황	47
<표 3.9> 보증발급 활성화 위한 정부지원	48
<표 3.10> 중소·중견기업 원/하도급 금융조달별 사업 현황(2012-2014년)	49
<표 4.1> 국내 연기금 운용규모 및 계획	56
<표 4.2> 운영 및 조성 규모 별 기금 분류	63
<표 4.3> 기금의 연도별 자산 규모 분류	66
<표 4.4> 주요기금의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68
<표 4.5>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72
<표 4.6>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73
<표 4.7>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75
<표 4.8>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76
<표 4.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77
<표 4.10> 기술신용보증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79
<표 4.11> 신용보증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80

<표 5.1> 혜택 대상별 기금 분류	88
<표 5.2>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연간조성가능 금액	92
<표 5.3> 국가재정법 제13조	93
<표 5.4>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기금	94
<표 5.5> 전체 기금 중 기금의 규모가 중위값 이상인 기금	95
<표 5.6> 여유재원의 규모가 평균 이상인 기금	97
<표 5.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기금 현황	100
<표 5.8> 기여금 및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	101
<표 5.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시	104
<표 5.10> 해외건설 수주 규모에 따른 필요 보증금액	106
<표 5.11> 해외건설기금의 연간 예상 수수료 및 출연금	107
<표 5.12> 해외건설기금의 연간 예상 규모 추정을 위한 가정	109
<표 5.13> 해외건설 수주 규모에 따른 필요 보증금액 및 수수료 등	110
<표 5.14> 해외건설기금의 연간 예상 규모 추정을 위한 가정	111
<표 5.15> 해외건설기여금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 금액 추산	112
<표 5.16> 해외건설기금을 통한 수주금액 증가 예상	117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1.1 연구배경

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주 감소 심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1년 64.4억 달러였던 실적이 2014년 37.4억 달러로 급감했다.

기업 규모별 수주 불균형도 심화되어 전체 수주액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7%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 수주공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2014년 30억 달러의 수주액 중 해외 도급공사보다는 국내 대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

해외건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부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주감소 추세는 심화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나. 부진한 보증발급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해외건설진흥 제3차 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을 위해 해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건설 진출·수주확대 애로사항 조사결과

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이행성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 사업성보다는 기업의 재무신용도 위주로 보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보증기관의 평가 관행으로 인해 기업별로 책정된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좋더라도 추가적인 보증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현지 사업경험 등은 있으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원활한 보증발급을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1.2 연구의 목적

가. 보증발급 활성화 방안 제시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 보증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증발급 부진사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후, 보증발급 평가체계 개선방안, 신용보강 등 리스크 보완 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원활한 이행성 보증발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보증발급 리스크 분담 및 자원 조달 방안 제시

보증기관이 주로 프로젝트 사업성보다는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위청구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증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드콜(bond call)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드콜로 인한 금전적

리스크를 분담할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증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용보증기금 등 국내 연기금·공제와 같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후, 필요시 해외건설에 특화된 해외건설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1.3 연구의 구성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목적과 수행방법 등을 포함하는 1장 연구개요에 이어 2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지원 필요성 도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주실태 및 이행성 보증발급 실태를 살펴본 후, 이행성 보증 필요규모와 주요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금융기관별 보증발급 현황에 대한 분석과 기존 보증지원정책을 토대로 보증지원 대상 및 보증발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지원 재원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국내 연기금과 공제, 주요 기금의 운용현황, 법적 근거, 재원조달 방식 및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회사의 재무구조나 공사실적보다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근거로 이행성 보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해외건설에 특화된 해외건설기금 조성 필요성, 재원조달 방안,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6장 맺음말에서는 앞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1.2 연구수행 방법

1.2.1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발급 현황,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지원기관, 보증기관, 조합 등 14개사로부터 최근 3년 반(2012년~2015년 6월) 동안의 보증발급 내역을 입수, 분석하였다. 또한, ENR (Engineering News Record) 250대 기업에 매년 다수의 건설사가 포진해있는 터키 건설사들의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보증을 발급받는지 조사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통해 건설사 및 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한편, 보증발급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국내 연기금, 공제, 주요 기금의 법적 근거 및 재원조달 방식, 운용현황,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2.2 진출유형별 설문조사

가. 조사기간: 2015년 8월 12일 ~ 2015년 9월 11일

나. 조사대상

1) 응답업체 수: 해외건설협회 회원사 중 총 60개 업체

2) 업체 분류

-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하여 건설 부문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엔지니어링 부문은 3년 평균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
- 나)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다. 조사내용

중소·중견기업별 해외 수주공사 유형, 이행성 보증서 발급 현황, 보증발급 거래 금융기관, 보증발급 애로사항, 해외인프라기금 출자의향, 공동보증제도 연간 예상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1.2.3 기관별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조사

가. 기간

- 1) 조사기간: 2015. 7. 8 ~ 7. 31
- 2) 이행성 보증 발급 대상기간: 2012년 ~ 2015년 6월

나. 이행성보증 발급현황 조사대상

현재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내·외국계 금융기

관, 보증기관, 조합 중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 1) 금융기관(11): 한국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 2) 보증기관(2): K-sure, 서울보증보험
- 3) 조합(1): 건설공제조합

다. 조사내용

해외건설사를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의 종류, 발급일자, 보증기간, 보증료율, 담보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1.2.4 현지 조사

가. 출장기간: 2015년 11월 9일 ~ 2015년 11월 13일

나. 방문대상

- 1) 현지금융기관(2): Garanti Bank, Turkiye Is Bankasi
- 2) 터키건설사(5): Dogus Construction, Kalyon Construction,
STFA Construction, Yapi Merkezi, Anti Yapi

제2장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 지원 필요성

2.1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 보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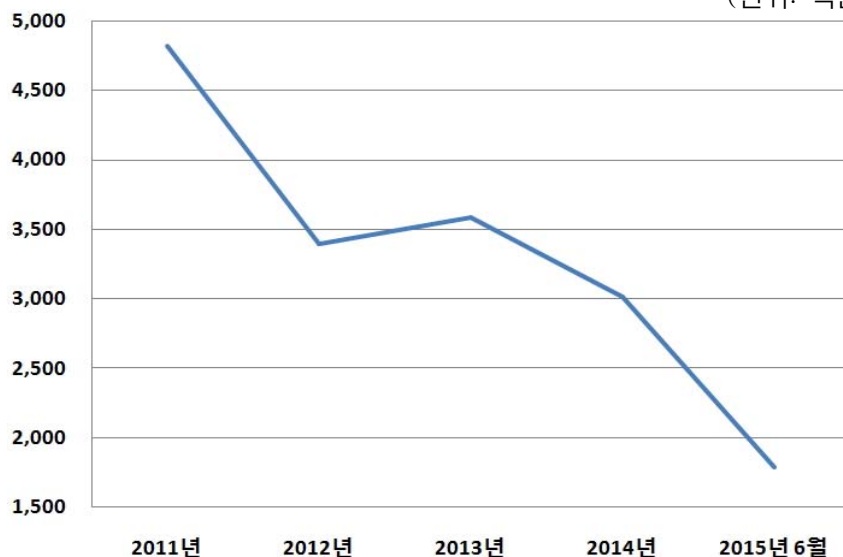
2.1.1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실태

가. 중소기업 해외수주 현황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에 따라 많은 중소건설기업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수주액은 정체되었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1> 중소기업 수주현황(2011년-2015년 6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05년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해외건설의 90%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4%에 불과했다. 2011년 48억 달러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수주액은 2014년 30억 달러까지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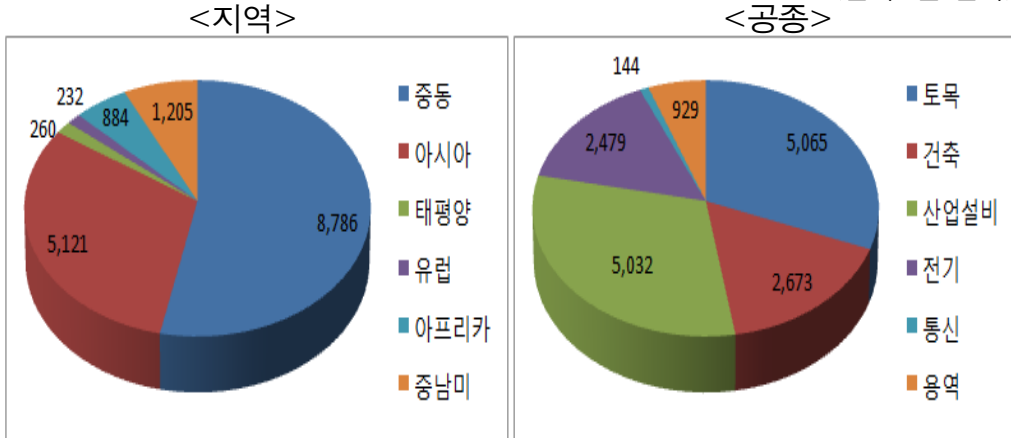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수주비중은 2007년 14.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계속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4.5%까지 급감하였다. 2012년부터는 수주비중이 계속 4-5%대에 머물며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주는 중동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의 약 82% 가량이 중동(45.9%)과 아시아(36.7%)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에 중남미 지역 수주 비중이 11.7%를 기록한 이후 과거에 비해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며 아프리카 지역 수주액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 수주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기업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공종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산업설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토목이 따르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누계기준으로 약 31.4%가 산업설비이며, 토목의 비중이 30.5%로 나타났다. 그 외에 건축이 16.2%, 전기가 15.3%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산업설비 비중이 42.1%까지 달하며 공종 편중화가 심해졌으나, 2014년 토목이 다시 산업설비보다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도 하였다. 이렇듯 공종별 편중화가 심해지는 것은 중동 지역의 사업수주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설비와 토목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중소기업 해외수주 지역·공종별 현황
(2011~2015년 상반기 누계)

(단위: 천 달러)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상세 수치는 참고자료1. 참조

나.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해외수주 현황

해외 발주처 혹은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원도급 수주현황은 2012년부터 감소세에 있는데 2012년 대비 2014년의 수주금액은 무려 30% 가량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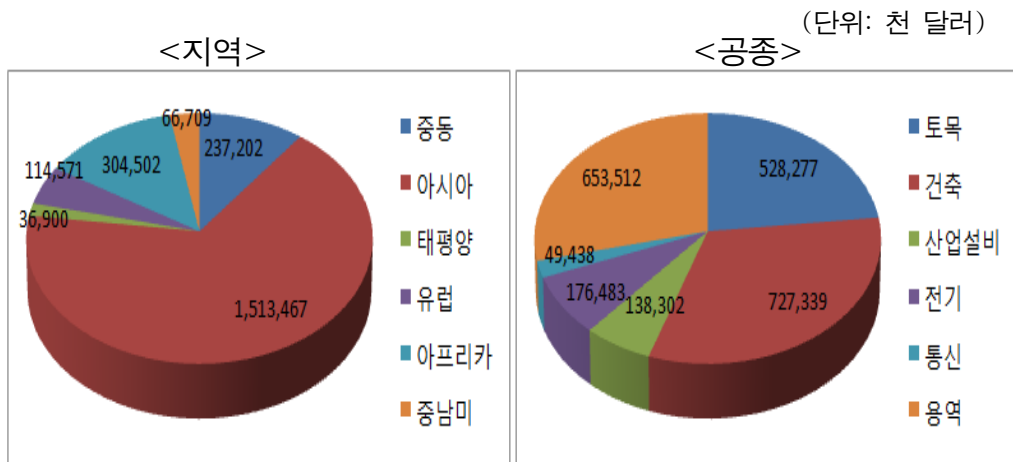
2012-2013년도에는 건축과 용역의 비중이 전체 대비 7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공종별로 수주액의 변화가 있었다. 2014년에는 토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건축, 전기, 용역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15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토목, 건축, 용역이 고르게 차지하여 중소기업들의 원도급 수주 공종이 평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원도급 수주는 최근 3년 이상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2012년 아시아 지역의 수주는 전체 대비 82.1%에 달했고 2014

년에는 72.2%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지역 수주는 2014년까지 감소세에 있다가 2015년 상반기에 전체 대비 24.5%의 비중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아프리카 지역 수주가 늘어난 이유는 인프라 개발수요가 높아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분석과 수업료 지불이 어느 정도 끝나 본격적으로 수주戰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남미 지역은 여전히 5%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신흥시장으로 각광을 받아 증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림 2.3>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지역·공종별 수주현황
(2012~2015년 상반기 누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다. 중견기업 원도급 기준 수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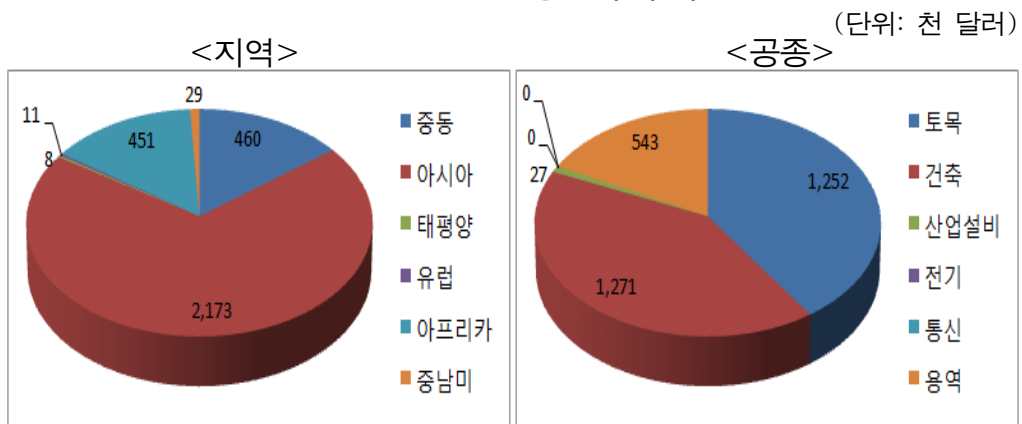
건설업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금 30억 원 초과를 중소

기업 졸업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졸업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즉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원도급 수주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목과 건축 공종에서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고 용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전기 및 통신 공종의 수주는 전무하다. 용역 부문은 2012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의 수주액으로 볼 수 있다.

중견기업의 원도급 지역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4년 아프리카 수주가 늘어나면서 39.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27%에 달하던 중동 지역 수주는 계속 감소하며 2014년 4.6%까지 급감하였다. 태평양·북미, 유럽, 중남미 지역은 여전히 1% 내외를 기록하며 아직 중견기업의 진출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림 2.4> 중견기업 원도급 기준 지역·공종별 수주현황
(2012~2015년 상반기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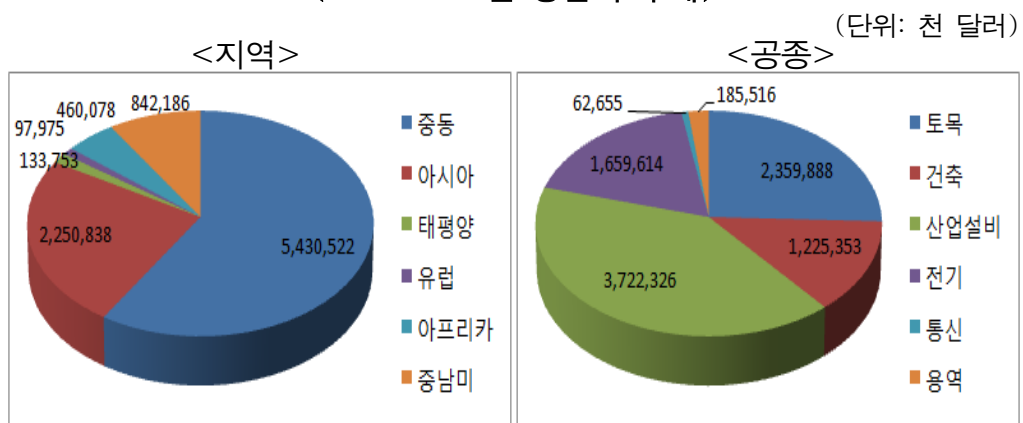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라. 중소 및 중견기업 하도급 기준 수주 현황

하도급 공사란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원도급으로 직접 수주한 후 국내 다른 기업에게 일정 부분 혹은 전부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하청공사는 산업설비 공종이 가장 많았고, 토목이 뒤를 이었다. 용역 공종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를 원도급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비중이 낮게 조사되었다. 전기 공종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사이 수주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도급 기준 중소기업 지역별 수주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중동과 아시아 지역 비중이 80% 내외로 매우 강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의 원도급 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하는 만큼 대기업의 지역별 수주비중과 흡사할 수밖에 없다. 2013년부터는 중남미 지역의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태평양·북미와 유럽 지역은 1% 내외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 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공사는 없으며, 원도급 단독 및 합작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공종별 수주현황
(2012~2015년 상반기 누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역 및 공종의 편중이 지속되면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역 편중이 심화되면 리비아 사태와 같이 지역의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공종 편중이 심화될 경우,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의 견제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후발국들의 추격에 국내 건설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편중이 심화될 경우에 이들의 보증 발급은 어떠할까? 중소중견기업이 어느 특정 지역과 공종에만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이나 공종의 실적이 부족하게 되고, 집중하던 지역 정세가 악화됐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때 보증 발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관련 지역 사업 실적이 부족하고 리스크가 큰 신시장 사업에 선뜻 보증을 발급해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지역 및 공종의 편중은 보증 발급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마. 중소기업 원도급/하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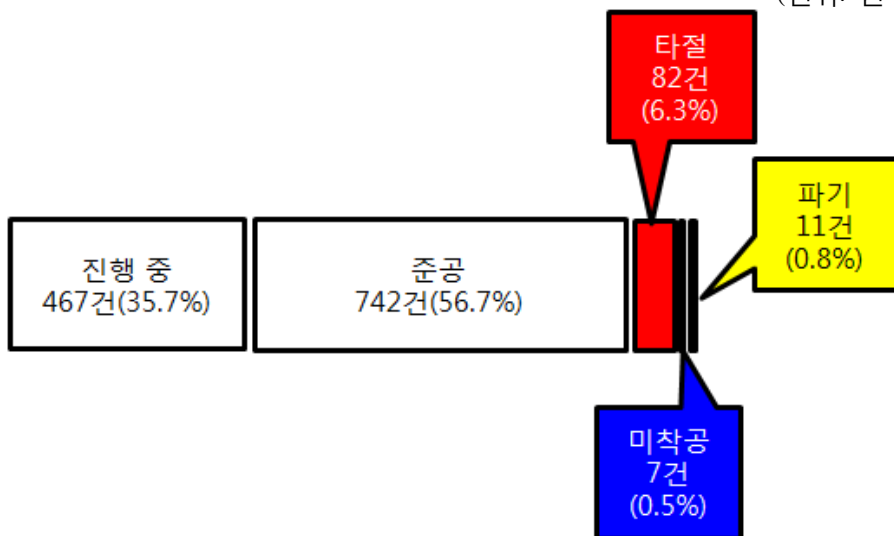
2010년부터 4년간 중소기업이 원도급으로 수주한 공사 건수는 총 1,309건이었다. 이 중 준공된 사업은 총 742건으로 56.7%를 차지하였고, 35.7%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발주처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타절이 되거나 파기된 사업은 총 93건으로 7.1%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2012년 3년간 타절된 사업은 무려 76건이며, 2011년에는 원도급 공사 중 13.4%가 타절된 공사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주처들의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 초기단계에서 계약 시에 명시된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였다. 심지어 보유 업종의 등록 말소로 인한 폐업처리로 타절처리가 된 후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는 등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소기업이 국내 건설기업 하도급이 아닌 직접 원도급 해외 사업에 참여할 때, 약 7%의 확률로 사업이 진행도중 타절 또는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10년-2012년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는 큰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인지 그 비율이 최근 2년 사이 소폭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림 2.6>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2010~2014년 누계)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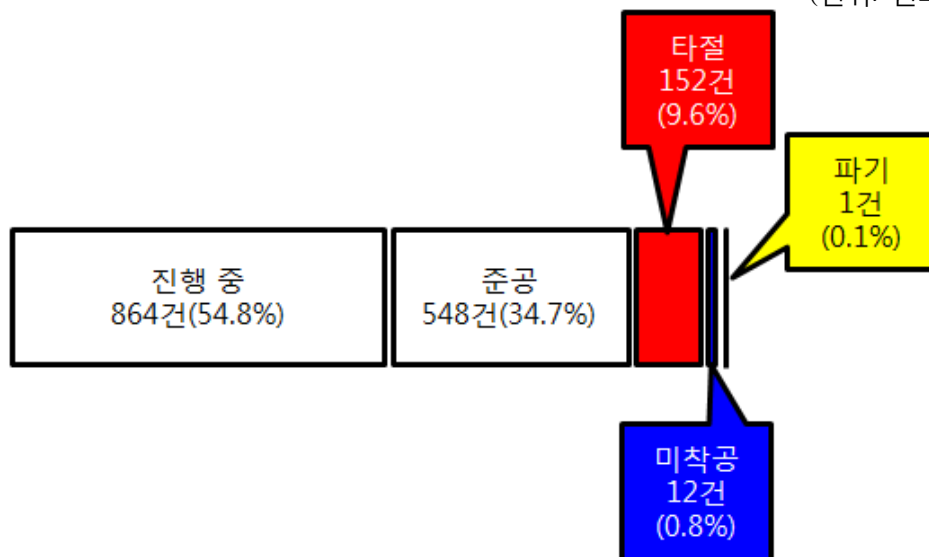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0년부터 4년간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수주건수는 총 1,577건이었다. 이 중 준공된 사업은 총 864건으로 54.8%를 차지하였고, 34.7%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발주처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타절

되거나 파기된 사업은 총 153건으로 9.7%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2012년 3년간 타절된 사업은 무려 130건인데, 그 사유는 주로 원도급사와의 원활하지 못한 계약 관련 협상, 파견 인력 수급의 어려움, 공기연장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등이었다.

<그림 2.7>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2010~2014년 누계)
(단위: 천미불)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그러나 최근 타절 및 파기된 사업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13년-2014년 2년간 타절이나 파기된 사업 비율은 단 3.3%로 최근 중소기업에 위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이 비로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해외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원도급자로서 해외건설 사업에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는 국내 건설기업의 하도급으로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바. 수주금액과 매출액의 유의성 분석

중소기업에 대한 수주지원의 필요성은 건설업의 산업특징에 기인한다. 건설업과 같은 수주산업(order-made production industry)은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처럼 판매량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시설투자 및 인력채용을 할 수가 없다.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인력채용, 시설투자, 자재구매 등의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

건설사가 총 비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를 하거나, 시공현장의 인력을 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미래의 지속적인 수주가능성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시설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비, 인건비 등의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수주잔량(backlog)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향후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²⁾하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일회성 대량수주보다는 지속적인 수주가 발생해야 향후 매출이 증가하고,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의 기업의 투자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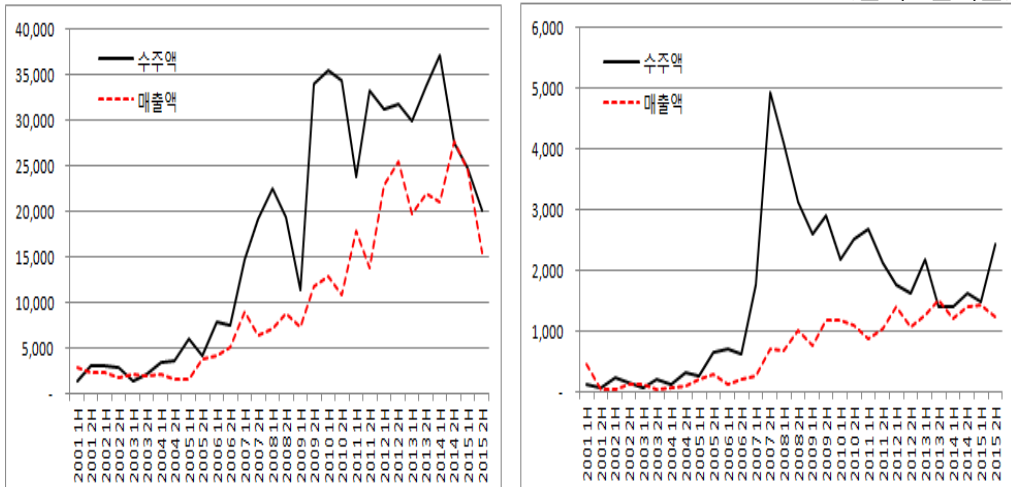
이에 해외건설의 수주가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기 위해 두 가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포함한 통계분석을 했다.

1) $GDP = G(\text{정부의 지출}) + I(\text{기업의 투자}) + C(\text{가계의 소비}) + X(\text{순수출})$, 따라서 기업의 투자(I)와 채용이 적으면 C(소비)가 감소하여 GDP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2) $Revenue(\text{매출}) - Expense(\text{비용}) = Income(\text{수익})$, 매출(R)이 감소하거나 비용(E)이 증가하면 수익(I)은 감소한다. 총 비용 중 변동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비율로 변동비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의 감소는 제한적이나,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수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향후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용은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의 감소율은 더욱 커짐

<그림 2.8> 수주금액과 매출액 추이
<대기업> **<중소기업>**

(단위: 천만원)



자료: 해외건설협회, 2015년 하반기의 매출액은 기업의 공사·보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2.1> 수주금액과 매출액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관찰값	30	30
자유도(Degree of Freedom)	29	29
독립변수(수주액)의 평균(\bar{X})	17,688	1,547
종속변수(매출액)의 평균(\bar{Y})	10,564	706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0.8287	0.5847
결정계수(R^2)	0.6868	0.3418
공분산(covariance)	88,456,727	380,382
절편(intercept) (b_0)	1,282	344
기울기(slope coefficient) (b_1)	0.5248	0.2338
예상 매출액(predicted Y value)	$b_0 + b_i \times X_i$	

※ 오차항의 기대값은 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은 반년 기준

수주금액과 매출액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83%였고, 독립변수의 변화(variance)에 대한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도 69%로 수주액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낮지만 58%의 상관계수와 34%의 결정계수를 보임에 따라 수주액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하반기의 수주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와 결정계수가 낮아졌으나, 이상점(outlier) 제거 후의 상관계수는 79%, 결정계수는 62%로 대기업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행성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가시킨다면 향후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발급 실태 분석

해외공사 계약 시 입찰에서 하자보수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단계별 보증서(Bond, Guarantee)는 계약 성사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계약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발주처에게 제공되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발주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 Call)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담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수주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ECA(Export Credit Agency)에서도 기업별 보증발급 신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한도 초과 시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발급 여부는 수주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증발급 활성화에 적합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행성 보증발급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행성 보증 종류와 보증발급 형태에 대해 살펴본 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증발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이행성 보증 종류 및 발급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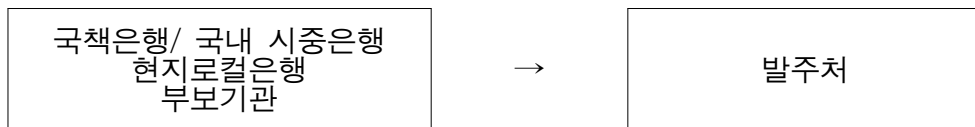
이행성 보증은 해외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해외건설업체가 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므로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금융기관도 수출보증금액의 10%만 위험자산으로 계상되므로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입찰보증(Bid Bond, Tender Guarantee),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Refund Guarantee),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Warranty Guarantee) 등이 부보대상이다.

보증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직접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용 보증보험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

협계약자가 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업자용 보증보험이 있으며 보험료는 보증서의 종류, 기간 및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각 보증에 대한 상세 내용은 3장에 기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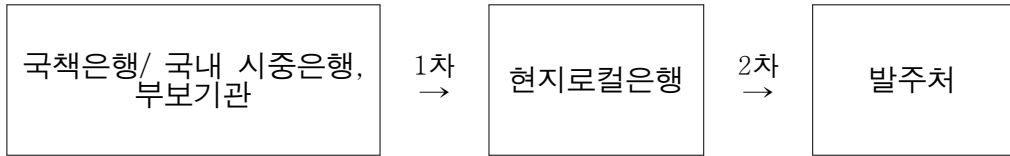
해외건설 이행정 보증발급 형태는 직보증(直保證), 복보증(複保證), 복복보증(複複保證)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보증발급 단계가 많아 질수록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아진다. 직보증의 경우 국내 은행, 발주처가 지정한 현지로컬은행³⁾ 등에서 발주처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부보기관⁴⁾을 통해 발급하기도 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용취급이 불가능하여 국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우므로 현지로컬은행으로부터 직보증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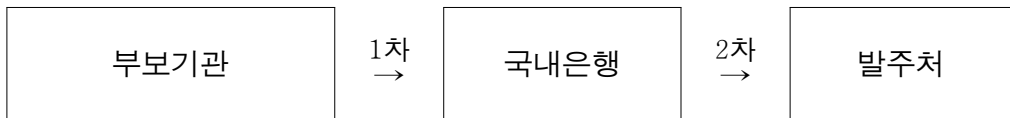
복보증은 보증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으로, 원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발주처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중동 대부분의 발주처가 현지은행이 발급하는 이행정 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나, 발주처가 현지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1차적으로 국책은행, 주거래은행 혹은 부보기관 국내외 지점에서 현지은행 앞으로 복보증서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보증을 말한다.

3) 해당국 현지은행만 의미함. 즉, CITI은행 아부다비 지점은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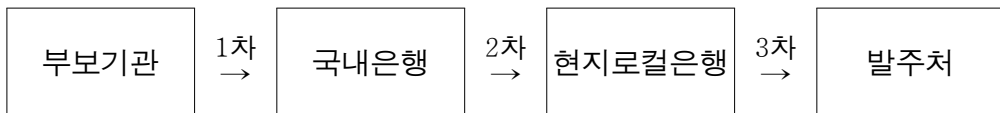
4)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발주처에서 지정한 은행이 없을 경우 건설사는 국책은행을 포함한 주거래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금융기관은 위험분산을 위해 부보기관에서 1차적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복보증보다 보증발급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는 복복보증은 발급절차가 늘어난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많아지지만 신용이 취약하여 보증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부보기관, 국내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로컬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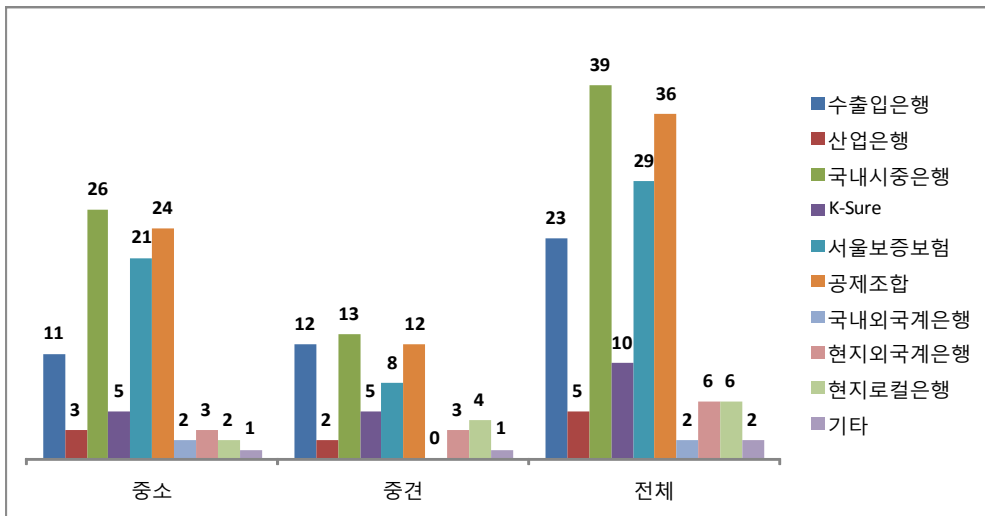
나. 보증발급 거래기관과 요구담보

1) 보증발급 거래기관

중소·중견기업이 보증발급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국내 시중은행,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수출입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한 기업을 개별 기업으로 간주했을 때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 일반 부보기관을 이용하는 기업(65개사, 41.2%)이 수출입은행이나 국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기업(62개사, 39.3%)보다 많았다. 이는 신용도가 낮고 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로서는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만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보기관이 제시하는 담보비율이나 수수료를 등의 거래조건이 은행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해보면, 국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같지만 중소기업은 일반 부보기관인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의 이용비율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은 수출입은행과 공제조합이 공동 차순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한 보증발급이 용이하고 국책은행이 아닌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하도급 공사 수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은행 보증서가 아니더라도 원도급사에 부보기관 부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기업규모별 보증발급 거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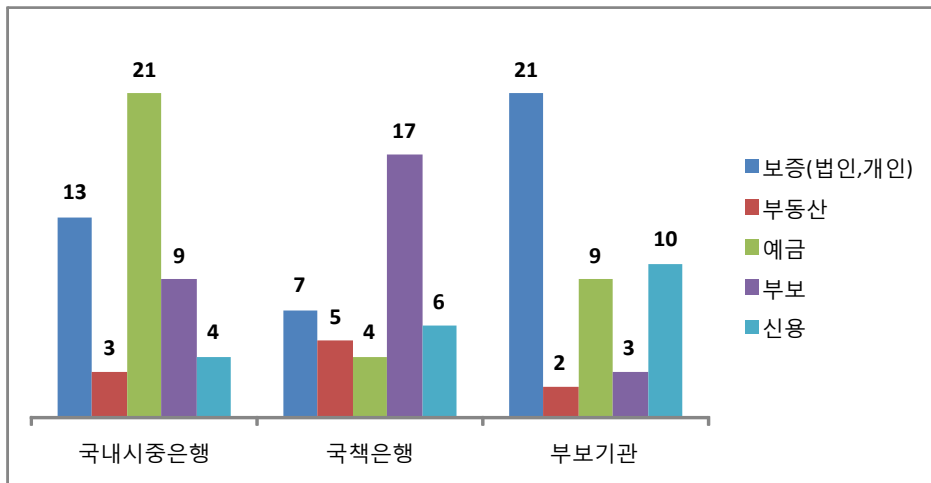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하 유사 그래프 출처 동일)

2) 보증기관별 요구담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보증발급 신청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로 인한 위험부담에 대비한 담보제공을 공공연하게 요구받게 된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담보물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내시중은행은 예금(42%), 국책은행은 K-sure나 서울보증보험 등 부보기관의 부보서(43.6%), 부보기관은 법인이나 개인의 입보(45.7%)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담보요청에 대응하지 못하여 보증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보증발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2.10> 보증기관별 요구 담보



다. 수주형태별 보증발급 유형

원도급 또는 하도급이라는 수주형태에 따라 보증발급 유형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도급의 경우 국내은행 직보증⁵⁾(28.3%)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현지로컬은행을 경유하는 은행복보증(19.6%), 부모기관 직보증(17.4%), 부모기관과 은행을 경유하는 복복보증(17.4%)이 비등하였다. 원도급 공사의 보증발급 형태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모기관 직보증은 중소기업에서만, 현지로컬 직보증은 중견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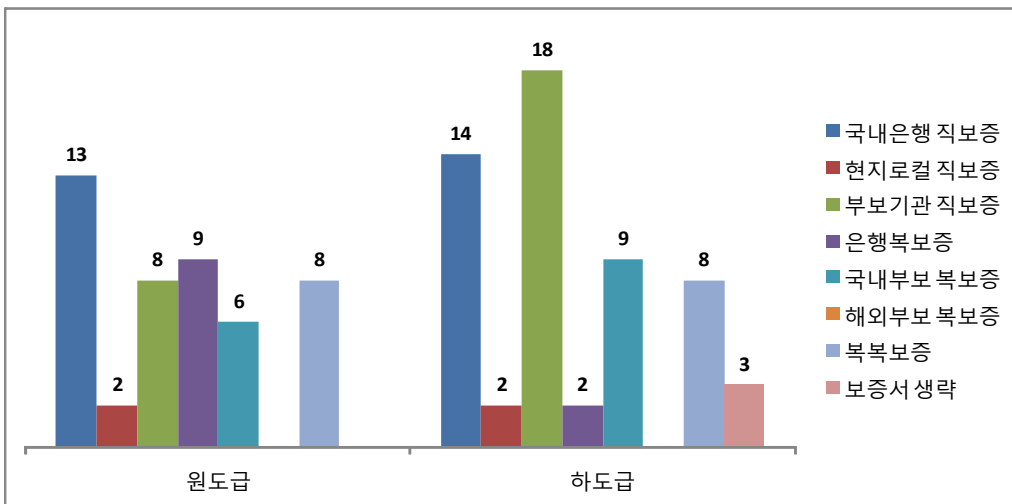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수주하는 원도급 공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은행이나 부모기관의 직보증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5) 직보증(直保證)은 은행이나 부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발주처나 원도급사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보증(複保證)은 보증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으로, 원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발주처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함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국내 보증기관보다는 현지로컬은행을 통한 직보증 혹은 복보증, 복복보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하도급 공사의 대부분이 국내 원도급사의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은 부보기관 직보증(36.7%)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은행 직보증(28.6%)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국내 부보기관을 경유한 국내부보 복보증(18.4%), 복복보증(17.4%)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원·하도급 공사 모두 해외에 설치된 해외부보기관을 경유하여 현지로컬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해외부보복보증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11> 해외 수주활동별 보증발급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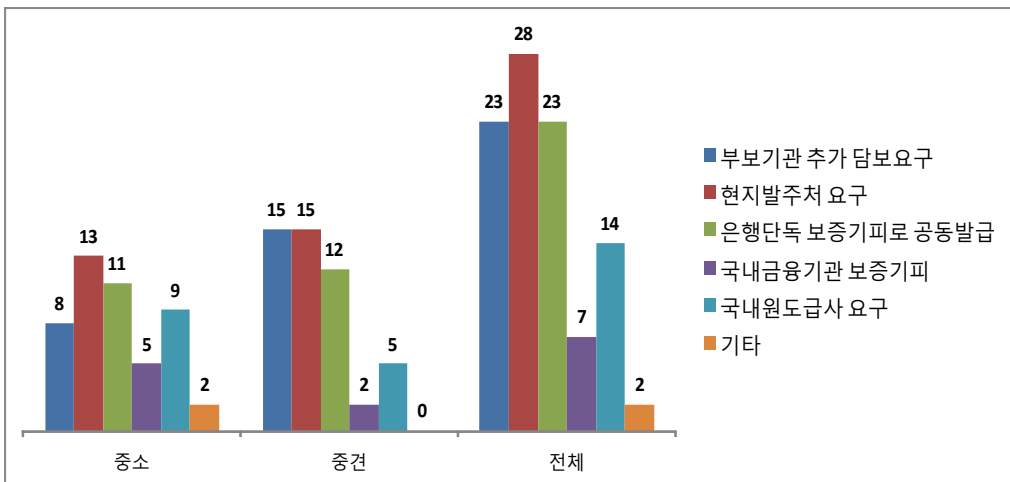


라. 복보증·복복보증 활용이유

중소·중견기업은 낮은 신용도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은행을 통한 보증 발급 시 여전히 부보기관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요구함에 따라 중복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보증이나 복복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지 발주처 요구(28.9%),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부보기관의 추가담보 필요(23.7%), 은행의 단독발급 기피로 인한 공동발급(23.7%) 등이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보증채무 이행청구 규모도 커져 금융기관은 위험분산 차원에서 공동발급을 선호하게 되므로 복보증이나 복복보증 부담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하도급보다는 원도급일 경우 커지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에서 현지 로컬은행을 경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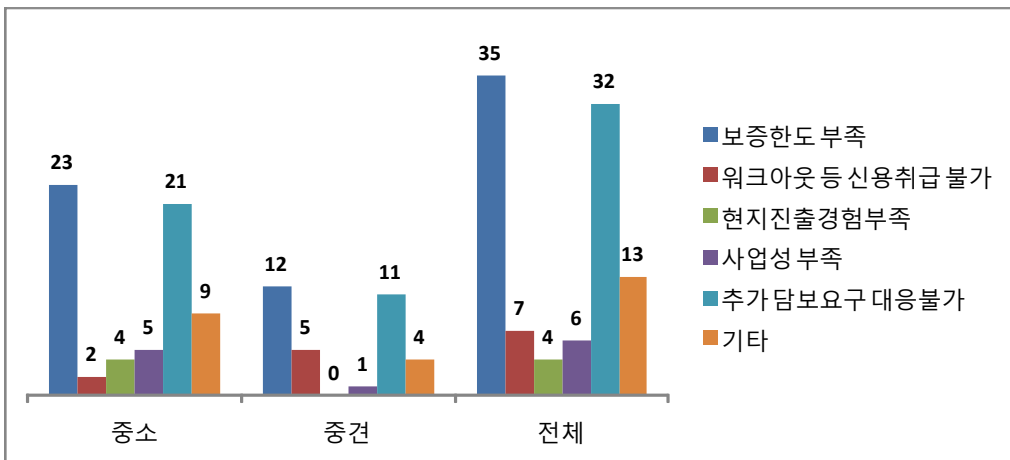
<그림 2.12> 복보증·복복보증 활용 이유



마. 보증발급 거절 발생 사유

중소·중견기업이 보증발급 요청 시 보증기관의 발급거절은 대부분 보증금액이 큰 계약이행보증(61.5%)과 선수금환급보증(32.7%)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보증기관에서 기업 재무신용도에 근거하여 책정한 보증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거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42개사 중 83.3%(35개사)에 달했다. 부족한 보증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담보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6.2%(32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보증담보 제공과 신용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보증기관 이용이 불가능하여 해외 금융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그림 2.13> 보증발급 거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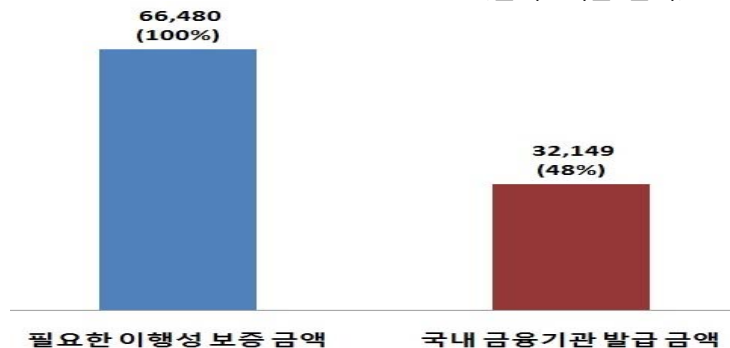
2.2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 필요규모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행성 보증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지원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건설사업을 위한 보증서 발급에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해외 발주처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유수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인지도, 해외 지원경험 부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 미흡한 금융지원 시스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들은 실제로 필요한 이행성 보증 규모만큼 지원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조사 결과, 최근 3.5년(2012-2015.6)간 해외 건설 수주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금액은 66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이 중 48%인 321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나머지 52%는 현지 발주처가 지정한 해외 금융기관이나 기타 지원을 통해 조달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2.14> 필요 이행성 보증액 비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최근 3.5년간 해외건설 수주실적 총금액 2,216억 달러에서 통상적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에 필요한 각 Bond별 비율의 합계인 30%를 적용하여 필요한 이행성 보증 총액을 산정하였다.

<표 2.2> 최근 3.5년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억 달러)

연 도	2012	2013	2014	2015.6	수주 총액
금 액	649	652	660	255	2,216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이행성 보증 발급에 필요한 각 Bond별 비율은 B-bond(입찰) 2%, AP-bond(선수금) 10%, P-bond(계약) 10%, W-bond(하자이행) 8% 총 30%로 계상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필요 보증액을 토대로 수주 예상액을 산출해보면 2016년 수주액을 700억 달러로 예상했을 때 필요 보증액은 30%, 즉 210억 달러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 발급 추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 중 국내 보증 발급액은 101억 달러로 추정된다. 나머지 보증액 109억 달러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화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기업이 필요한 이행성 보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 건설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주요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 발급현황

최근 3.5년(2012-2015.6)간 국내 14개 주요 금융기관이 발급한 총 보증액은 452억 7,2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기조사했던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총 보증액에 비해 약 5.9% 증가하였다. 해외 발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이행성 보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국내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발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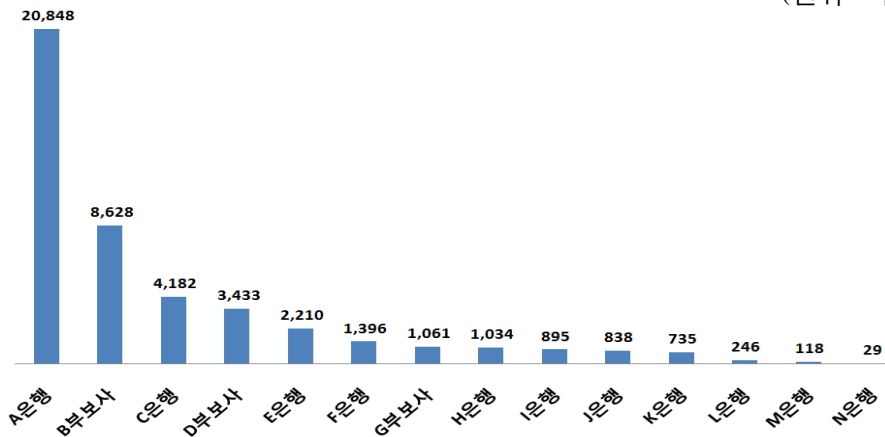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국내 금융기관의 최근 3.5년(2012-2015.6)간 이행성 보증 발급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A은행과 B부보사가 보증발급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A은행이 총 이행성 금융비중의 46%인 208억 4,800만 달러, 부보기관 중에서는 B부보사가 19%인 86억 2,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보기관인 B부보사와 G부보사를 제외한 12개 국내은행이 총 335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했으며, A은행과 C은행(41억 8,200만 달러)에 편중되어 있다.

위의 두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저조한 지원실적의 원인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험 및 지원노력 부족, 자금조달의 한계 외에도 높은 금리 및 수수료율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2.15> 최근 3.5년간 국내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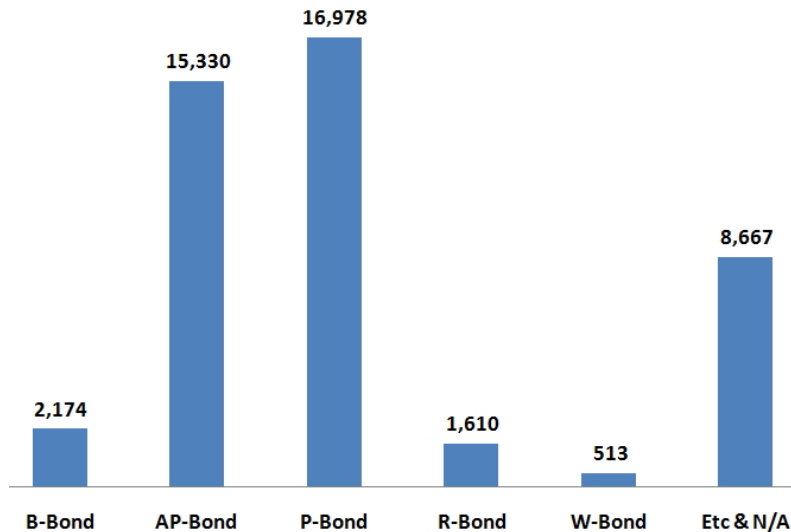
나. 보증서별 발급액과 수수료율

최근 3.5년간 이행성 보증서 발급 추이를 살펴보면 보증서 중 해외건설시장 진출,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조건 불이행시 손해를 담보해주는 P-Bond(계약이행보증)가 발급금액 169억 7,8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 14개 주요 금융기관의 연환산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최소 수수료율의 범위는 최소 0.004%에서 최대 6.000%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국내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0.687%, 부보기관의 평균 수수료율은 0.712%였다.

<그림 2.16> 최근 3.5년간 보증서별 발급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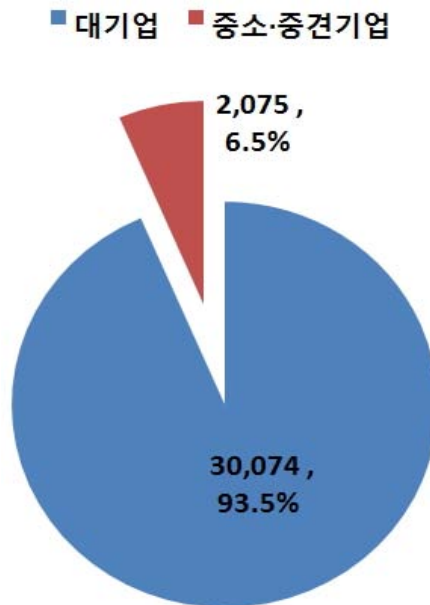
다. 기업규모별 발급액 (국내 금융기관/부보기관)

국내 건설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응답한 설문결과를 볼 때, 낮은 수수료율로 이행성 보증서를 제공하는 B부보사 및 A은행은 대부분 대기업에게 발급하고 있었다.

최근 3.5년간 국내은행이 발급한 321억 4,900만 달러 중에 대기업이 발급한 금액은 307억 7,400만 달러로 93.5%를 차지했다. M은행(0.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대기업에 발급액 비중이 75% 이상이었다. 물론, 추진하는 사업 규모 특성상 금액만 고려하여 대기업에게 편중되었다고 볼 순 없지만, 대기업일수록 낮은 금리, 중소·중견기업일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국내 부보기관이 발급한 131억 2,300만 달러 중에 대기업이 발급한 금액은 95억 2,700만 달러로 72.6%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부보기관은 국내은행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많은 금액의 보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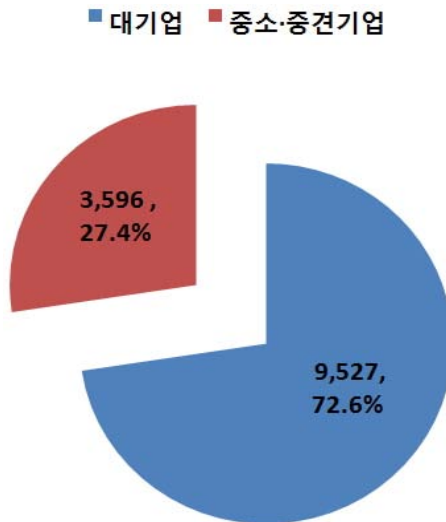
<그림 2.17> 최근 3.5년간 기업규모별 보증 발급액 및 비율(국내 금융기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국내은행에서 발급한 이행성 보증 중 국내 부보기관인 B부보사의 부보를 통해 발급된 것이 확인된 사례는 3.5년간 2,344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총 43억 6,860만 달러로 전체 대비 약 14%를 차지했다. G부보사의 부보를 통해 발급된 사례는 189건이었으며, 발급액은 5억 4,560만 달러로 전체 대비 약 2%에 조금 못 미쳤다.

<그림 2.18> 최근 3.5년간 기업규모별 보증 발급액 및 비율(국내 부보기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라. 보증발급시 담보요구 현황

금융기관들은 이행성 보증서 발급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증서 발급건수 중 14.4%를 예금 및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였다. 그 외 85.6%는 자체 신용으로 발급하였거나, 본사(계열사) 보증, B부보사 및 G부보사의 복보증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소 및 중견건설기업은 금융기관의 담보요구로 인하여 국내 시중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보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건설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주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 방안

3.1 금융기관의 보증발급 체계 분석

금융권에서는 일부 우량 기업을 제외하면 건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사업위험을 가진 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자금 조달(보증발급 포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해외건설은 공사금액이 국내보다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리스크 부담 또한 커지므로 이를 헷지하기 위해 기업의 담보능력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보증 심사 시 담보능력 이외의 주요 평가기준은 기업 규모나 도급순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수주실적을 쌓기 위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저가 수주로 인해 채산성 악화, 유동성 감소 및 단기지급능력 저하 등의 금융제약 위험에 처하게 된다.

3.1.1 금융기관의 보증발급 부진사유

중소·중견기업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증발급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국의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⁶⁾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39.1%)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31.9%)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소버린리스크(Sovereign risk): 한 국가의 정부나 공적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민간부문이 빌린 자금의 지급보증을 했지만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금을 빌려준 측이 안게 되는 위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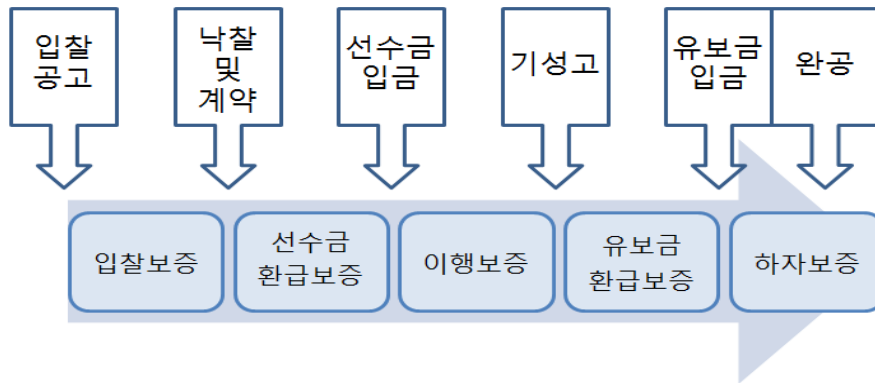
<표 3.1> 국내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발급 이유

이유	빈도	비중(%)	다중응답 백분율(%)
해외건설 이해부족	7	10.1%	12.1%
소버린 리스크 등 상대국 위험도	27	39.1%	46.6%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	31.9%	37.9%
국내 PF부실 등에 따른 위험분산	3	4.3%	5.2%
On-demand 방식으로 인한 본드콜 우려	10	14.5%	17.2%
합계	69	100.0%	119.0%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에서 보증발급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래 단계별로 발급되는 보증의 종류와 보증이 갖는 구속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단계별로 발급되는 보증을 살펴보면, 입찰보증은 입찰공고 이후부터 입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급되고, 선수금환급보증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어 발주자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금이 입금되기 전에 발급된다. 이행 보증은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로서 공사에 대한 의무가 이행 되도록 기성고의 달성 전에 발급된다. 유보금환급보증은 계약체결 시 시공사가 유보금을 입금받기 위해 발급된다. 또한, 하자보증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공한 후 미래 일정 시점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상 하자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고자 발급된다.⁷⁾

7)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실무가이드, 정용혁·지정준, 한국금융연수원, pp 77.

<그림 3.1> 거래단계별 보증발급



자료: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실무가이드, 정용혁·지정준, 한국금융연수원

각 보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입찰보증(Bid bond)은 입찰자가 입찰마감 이후 입찰철회 또는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에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액이 통상 계약금액의 2%에 불과하고 보증기간도 2개월 내외로 단기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 위험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발급이 원활한 보증서이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은 계약체결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경쟁입찰의 재실시, 공사지체 등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다. 계약자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보증기관의 책임 하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납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 계약금액의 10%에 달하고 전체 공사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한다.

선수금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 AP-bond)은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계약자의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금의 약 10%를 선지

급하게 되는데, 계약자가 계약이행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어떤 이유로든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급금환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공사착수금으로 선수금을 받을 경우 매 기성신청에서 먼저 받은 선수금을 단계적으로 발주자에게 환급한다는 보증으로, 보증금액은 선급금 상당액이고 보증기간은 선급금반환방식에 규정된 기간이다.

이외에도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비 충당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기성의 일부를 유보하는데, 건설업체가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에 유보금을 미리 환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R-bond),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완공된 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손실을 일정기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W-bond, Maintenance bond, M-bond) 등이 있다.

<표 3.2> 해외건설공사 보증종류

종류	일반적인 계약액에 대한 비율	비고
입찰보증	5% 이하	단기간의 보증기간 (2개월)
계약이행보증	5-15%	공사기간 전체동안 보증
선급금보증	약 10%	선급금 수령 후 계약불이행시 선급금 대지급
유보금보증	약 10%	기성금 지급시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 해당금액을 보증으로 대신함
하자보증	약 10%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에 대한 보증이며 통상적으로 1년

중소·중견기업들은 보증금액이 크고 보증기간이 장기인 계약이행 보증과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기업들은 경기에 민감하며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원인도 있다. 이에 더해 건설산업이 일부 우량 건설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사업위험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국내건설의 경우 해외건설에 비해 공사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적어 금융사 보증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건설은 공사규모가 크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이 단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는 보증발급단계에서 대출과 다른없는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담보를 요구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이행보증 샘플을 보면 국내건설보증과 달리 발주처에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본드콜 요구 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에 응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Unconditional payment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보증금액이 크고 보증기간이 장기인 계약이행 보증과 선수금환급보증은 본드콜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나 물적 담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성만으로 보증발급을 꺼려하는 이유이다.

<그림 3.2> 수출입은행 해외 공사보증서 문구 샘플

TO: NATIONAL BANK OF KUWAIT SAK, KUWAIT

PLEASE ISSUE YOUR LETTER OF GUARANTEE UNDER OUR FULL RESPONSIBILITY AND OUR COUNTER GUARANTEE NO. XXXX FOR () THE FOLLOWING FORMAT AND DELIVER YOUR ORIGINAL GUARANTEE TO XXXX

BANK'S NAME AND ADDRESS OF ISSUING BRANCH OR OFFICE

() Company Address

Dear Sirs,

At the request of XXXX (hereinafter called "the Contractor") we [name of bank] hereby **unconditionally and irrevocably guarantee to pay you**, notwithstanding any objection by the Contractor, any sum or sums not exceeding in total an amount of ()(representing 10% of the Contract Price) upon receipt of your first written demand thereof in connection with your Contract No.XXXX with the Contractor for XXXX (hereinafter called "the Contract").

Our liability hereunder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signing of the Contract by the parties thereto. The amount of this Bond may from time to time be reduced in accordance the Contract, upon receipt of your written notice stating the amount of such reduction.

Our liability hereunder will expire on 20 Nov. 20XX [anticipated date of issue of last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 6 months] or on our receipt from you of a written notice of the issue of the last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under the Contract whichever is earlier and any demand received by us thereafter shall be null and void.

FOR AND ON BEHALF OF

OVERSEAS CONSTRUCTIONS FINANCE TEAM
PLANT FINANCE DEPARTMEN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3.1.2 금융기관별 보증발급 체계에 따른 내역 분석

가. 금융기관별 기업신용등급 구분 기준

모든 금융기관은 국내 및 해외 여신거래 기업고객에 대한 신용 평가업무, 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등급평가’는 신용조사, 사업성검토 등의 방법으로 개별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종합 분석하여 채무상환 능력의 정도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의 크기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성검토는 기업의 신규사업 또는 사업확장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적기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모델은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대상기업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각 금융기관 개별세칙에 적용되는 신용평가 생략 기업과 별도의 신용등급 적용 기업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시스템에 등록시켜 적용한다.

<표 3.3> C은행의 자체 신용등급 기준표

등급	리스크 정도	정의
1	극소 위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최상으로 여신에 따르는 위험이 없는 업체
2	최소 위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우량한 업체로 여신에 따르는 위험이 거의 없는 업체
3	적은 위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우수하여 여신에 따르는 위험이 적은 업체
4	평균이하 위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양호한 편으로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상환능력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5	평균 위험	원리금 상환 능력은 적정하나 장래 환경변화에 따라 상환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6	평균위험 초과	현재까지는 원리금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아 평균위험을 크게 초과하는 업체
7	요주의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으로 인해 별도의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는 업체
8	고정	부채상환을 위협할 명확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결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생존가능성이 희박하여 은행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확실한 업체
9	회수의문	8등급 업체의 약점을 모두 보유하고 그 위험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원리금 전액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운 업체
10	추정손실	원리금의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업체

자료: C은행

위의 표와 같이 C은행의 경우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기업 신용등급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C은행이 발급한 이행성 보증을 기준으로 신청기업들의 신용등급은 1부터 8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C은행으로부터 7-8등급의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발급 당시 기업 매각설이 유력하였거나, 워크아웃 중인 상황이었다.

<표 3.4> A은행과 C은행의 담보비율 비교 (2012-2015.6)

(단위: 건)

기관	총 발급수	신용	신용도+담보	담보
A은행	2,047 (100%)	1,848 (90.2%)	49 (2.3%)	150 (7.3%)
C은행	1,421 (100%)	1,030 (72.5%)	61 (4.3%)	330 (23.2%)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국내 ECA격인 A은행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2,047건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했으며, 그 중 90.2%는 기업 신용도만 평가하여 발급하였고, 담보는 7.3%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민영은행 중 가장 많이 이행성 보증을 발급했던 C은행의 경우, 전체 보증 발급건수의 23.2%에 담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기업신용도와 함께 담보의 일부를 요구했던 건수까지 합치면 무려 30%에 가까운 27.5%에 달했다. 이는 ECA 성격의 A은행이 민영은행인 C은행보다 보증 발급시 기업의 사업성을 더 중요시 여겨 담보를 적게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나. 발급기관별 평균 수수료율

<표 3.5> 발급기관별 평균 수수료율 (2012-2015.6)

금융기관명	수수료율(%)	부보기관명	수수료율(%)
A은행	0.451	B부보사	0.448
C은행	0.409	D부보사	0.908
E은행	0.823	G부보사	0.780
F은행	0.733	평균	0.712
H은행	0.670		
I은행	0.411		
J은행	0.596		
K은행	0.704		
L은행	0.878		
M은행	1.220		
N은행	0.668		
평균	0.687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국내 금융기관 및 부보기관의 이행성 보증 발급 평균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 평균 0.687%, 부보기관 평균 0.712%를 나타냈다. 보통 부보기관의

수수료율이 금융기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이 0.025%p 낮게 나온 이유로 신용이 높은 대기업들이 ECA인 A은행 혹은 주거래은행(C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건수가 많아 통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보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이들의 보증 발급 문턱을 낮춰줘야 할 것이다.

다. 기업규모별 발급액 및 비율

<표 3.6> 기업규모별 발급액 및 비율 (2012-2015.6)

(단위: 천 달러)

기관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A은행	19,583,745 (92.5%)	884,100 (7.5%)
B부보사	7,297,679 (84.6%)	1,330,476 (15.4%)
C은행	4,031,878 (96.4%)	149,849 (3.6%)
D부보사	1,517,146 (44.2%)	1,916,241 (55.8%)
G부보사	711,956 (67.1%)	349,413 (32.9%)
M은행	563 (0.5%)	117,377 (99.5%)

자료: 2015년 금융기관 이행성 보증 내역 조사, 해외건설협회

지난 3년 6개월 간 주요 금융 및 부보기관들의 기업규모별 발급액을 조사하였더니, 중소·중견기업의 금융기관(11개) 발급 비율은 금액 기준 6.5%에 불과했으나, 부보기관(3개) 발급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중소·중견기업의 보증 발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보기관인만큼 그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D부보사는 55.8%에 달했다.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M은행은 전체 금액의 99.5%를 중소·중견기업에게 발급하고 있었다. 금액 기준이기는

하나, 국내 ECA인 A은행의 대기업 비중이 예상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접근하기엔 아직 벽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기존 보증지원 정책의 효과성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2008.7), ‘해외개발사업 금융조달 개선방안’(2011), ‘해외개발사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2012),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2013.8) 등 지난 몇 년간 다수의 해외건설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 등 대부분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의 보증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해외건설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대책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보증지원책을 제시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주 정보와 원스톱(One-stop)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정책 금융지원센터를 설치(2014.1)하는 한편, 신용도 부족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건설·플랜트정책 금융지원센터의 협약기관들이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공동보증제’를 시행(2015.7)하게 되었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서 정부는 보증발급 체계의 문제점을 보증규모, 보증수수료, 보증심사 기준, 워크아웃기업 보증발급 어려움 4가지로 진단했다. 보증지원의 절대적인 규모가 부족하여 일부 중소기업이 보증발급 어려움으로 해외사업을 포기하게 되므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K-sure)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이행

성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는 동시에 재무신용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보증보험 심사방식을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입은행과 K-sure의 보증규모와 보증수수료는 수치상 점차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는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2014년 보증지원 확대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2,911억 원이고, K-sure의 보증보험 지원액은 4,2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수출입은행의 보증수수료 또한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0.12%, 중견기업은 0.13%로 인하되었고, K-sure의 보증보험료 할인율도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15%로 확대되었다.

<표 3.7> 정책금융기관별 보증지원 확대현황(2014년 기준)

구 분		수출입은행	K-sure
보증규모		2,911억원 (전년대비 12% 증가)	4,207억원 (전년대비 14% 증가)
보증비용	중소	0.18%p 인하 (0.3%→0.12%)	10%p 할인 (15%→25%)
	중견	0.07%p 인하 (0.2%→0.13%)	5%p 할인 (10%→15%)

자료: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15.3.11),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 보증 발급 시 회사 신용도보다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금융지원 기준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사업성평가의 활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사업성평가가 금융권의 평가기준으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사업성평가 현황

(단위 : 공사건수)

구분	1998~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발급	255	1	6	5	5	4	276
발급대기	—	—	—	—	1	4	5
철회 /반려	156	6	1	5	3	8	179
접수건수	411	7	7	10	9	16	460

출처 : 해외건설협회

이 같은 결과가 불가피한 것은 사업성만으로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심사의 벽을 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몇몇 중견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인한 Bond Calling으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신용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보증제는 해외건설·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B등급(A-D등급) 이상의 양호한 사업성의 프로젝트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센터의 협약기관이 동일한 비율로 보증하고,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필요시 수출입은행 또는 산업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대신하여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사전 협의를 통해 협약기관 간 보증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보증

제 시행 3개월 만의 첫 지원사례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회사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하도급사인 성장이앤씨에게 P-bond(388만 달러), AP-bond(582만 달러) 등 총 970만 달러 규모의 이행정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직 그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발표 이전인 2013년 4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보증발급 거절사유가 보증한도 부족(61.7%), 담보부족(22.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동일한 설문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보증제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서 부정적인 답변(29개사, 50.9%)과 긍정적인 답변(28개사, 49.1%)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관별 내부 심사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심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보증발급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기업별 신용한도를 확대(34.8%)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성에 기반을 둔 평가체계 유도(34.8%)라고 답변했다.

<표 3.9> 보증발급 활성화 위한 정부지원

필요지원	빈도	비중(%)	다중응답 백분율(%)
기업별 신용한도 확대	24	34.8%	42.1%
국가별 신용등급 상향조정	4	5.8%	7.0%
본드콜 발생시 자금지원	9	13.0%	15.8%
사업성 기반 평가체계 유도	24	34.8%	42.1%
해외건설전문 금융인력 양성	8	11.6%	14.0%
합계	69	100.0%	121.1%

3.3 보증지원 대상 및 지원필요성

가. 원·하도급 금융조달별 사업 안정성

표<3.10>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원도급 및 하도급의 금융조달별 사업 현황을 나타낸다. 4년간의 실적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원도급으로 ODA사업을 수행했을 때보다 MDB사업을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4년간 중소·중견기업이 ODA사업을 원도급으로 진행하는 동안 타절과 파기된 사업은 없었으며, MDB 사업을 수주했을 경우 공사진행 중 타절이나 파기될 확률은 4.5%로 조사되었다.

<표 3.10> 중소·중견기업 원/하도급 금융조달별 사업 현황(2012-2014년)

구분	금융조달	사업건수	시공중	준공	타절	파기
원도급	ODA	87	58	29	0	0
	MDB	44	39	3	0	2
하도급	국내	983	633	282	1	62
	해외	933	340	543	4	42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하도급: 중견기업 실적 제외

그러나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했을 시 총 983건 중 63건, 즉 6.4%의 사업이 타절이나 파기되었으며, 해외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했을 시에는 46건으로 약 4.9%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원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사업은 ODA사업이며, MDB 채원사업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했을 시에도 사업이 도중에 중지될 가능성이 존재(약 5.6%)했는데, 이는 공사 중 사고로 잔여역무를 하도급사 대신 원도급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발주처의 사정, 일방적인 사업 취소, 원도급사와의 의견 차이 등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과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사업을 원도급으로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아직 쌓지 못한 것을 짐작해보면 타절과 파기가 그들의 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할 순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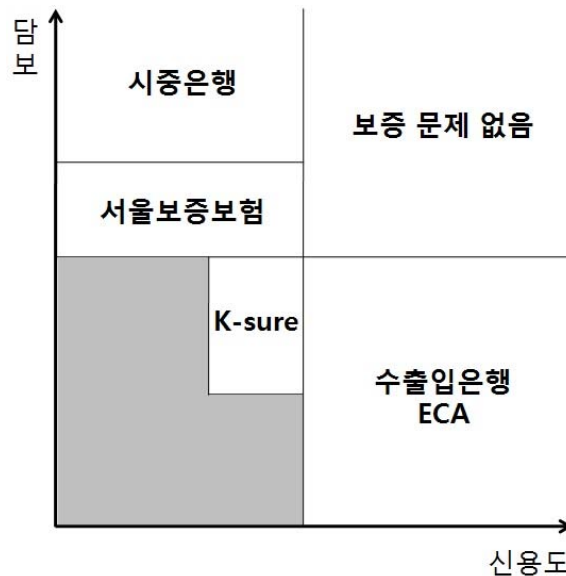
해외건설협회에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중소·중견기업 88개사, 대기업 17개사)를 분석해보면 중소·중견기업 88개사 중 해외현장에서 예외상황 발생 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원도급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소기업인 하도급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수행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시행한 부분도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 혹은 해외의 하도급 사업 방식으로 초도 진출을 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ODA와 MDB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지원 필요대상 기업

기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대비 낮은 신용도, 경험 부족, 해외담당 인력 부족, 자금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와 Focus Group 인터뷰를 통해 보증발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기업들의 경우 그림<3.3>의 Grey-zone(그레이존)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 중소·중견기업 담보 및 신용도에 따른 보증발급 체계도



담보능력이 되고 신용도도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보증 발급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신용도는 높으나 담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국내 ECA기관인 수출입은행을 이용한다. 반대로 담보력은 높으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예금을 담보로 맡겨둔 주거래 은행(시중은행)이나 부보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발급받고 있다. 담보력과 신용도 모두가 평균보다 낮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마지막 보루로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발급받는다. 하지만 K-sure의 문턱도 넘기 힘든 그레이존의 기업들은 보증발급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이들의 보증 발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bond call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이며, 금융기관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보나 부보사의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율의 발급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레이존에 있는 기업처럼 시중은행, 부보사, ECA를 보증발급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의 보증을 요청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보증발급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 성격을 지닌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3.4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 방안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행성 보증서의 발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원도급 공사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하도할 경우 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서를 정식 담보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중소·중견 플랜트 기업들은 국내 하도급 공사 수행 시 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협회)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지만, 대부분의 은행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조차 이를 정규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 등 부보기관에 따라 보증서가 선별 수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제정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제3항에 원사업자 갑은 수급사업자 을에게 보증서 납부 관련 ‘특정 기관을 지정·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호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증서 발급기관 제1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상 동 조항이 충실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의 보증발급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발주하는 대기업들이 각종 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서를 정식 담보로 인

정해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협력기관 대표체 독점권한 부여, 만장일치제 기준 완화 등 공동보증제의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동보증제는 해외건설·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 소속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동보증제의 수요자는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있더라도 기존의 보증한도로 인해 추가 보증이 어려운 기업 등이다. 공제조합의 출자금 증액이나 추가 담보 제공 등을 통해 보증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동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공동보증제도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동보증제의 협력기관 대표체가 각 금융기관별 심사 및 승인기준을 초월한 독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본사에서는 이들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주어야 한다. 협력기관 대표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면 보증발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 오히려 여러 기관의 심사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역설적으로 단일 기관을 접촉할 때보다 보증발급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심사기간도 더 소요됨에 따라 제도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공동보증 발급을 위해 모든 기관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만장일치제 승인기준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제조건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5개 기관 대표체의 의견조율 및 합의도출에 긴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간 상 제한이 있는 기업들은 동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기관을 접촉하는 것보다 많은 준비서류, 절차상 복잡성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동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있으려면 승인기준을 만장일치제에서 과반수 찬성 등으로 완화하여 적용시키는 등 개별 기관보다 완화된

정부 주도 지원제도의 본 목적이 충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금융기관 보증발급 심사 시 사업성평가(Project Appraisal) 제도 활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하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CA 특별승인으로 이행성 보증발급을 의무화시키도록 한다. 신용으로 상당 부분 발급 가능한 입찰보증과 달리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은 내부 여신심사 방법에 근거하여 업체별 한도를 설정하거나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주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평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사업성평가제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국내 금융기관과 건설업체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발주처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국내 시중은행이 BIS 자기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보증발급을 기피하게 되자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긴급현안과제로 해외건설보증확대를 선정, 그 해 3월부터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사업성평가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사업성평가제도는 주로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맺은 후 진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 등이 실제 수주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 평가 외에 사업수행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에도 K-sure의 보증보험 심사기준에 사업성 평가배점을 신설하여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 프로젝트 사업성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표<3.8> 사업성평가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이후에도 신청사업의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성평가결과에 따라 보증을 발급한 건수는 2015년 말 기준, 총 276건이며 이 가

운데 본드콜이 발생한 사업은 단 1건이다. 또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원도급사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로, 기업신용평가등급, 현금흐름등급, 시공능력, 주요 공사의 시공실적 등 원도급사가 미리 설정해둔 평가기준을 충족시킨 후에야 협력업체로 등록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낮아 본드콜 발생 가능성이 낮고 특히 계약이행보증이나 선수금환급보증과 달리 본드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입찰보증 발급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완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n-demand 보증방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본드콜(bond call)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성보다는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위청구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증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인력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술력이나 현지 사업경험 등은 있으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시키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드콜로 인한 금전적 리스크를 분담할 재원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보증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기금 조성 필요성, 조성주체, 활용범위, 재원조달 방안, 운영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5장에서 이어진다.

제4장 국내 연기금·공제 현황 및 활용방안과 타산업진흥기금 사례 분석

4.1 국내 연기금·공제 현황

4.1.1 국내 연기금 현황

국내 연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있고, 정부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참고자료에 따르면, 위 각 기금의 2015년 운용규모 및 2016년 운용계획 규모는 아래 표<4.1>과 같다.

<표 4.1> 국내 연기금 운용규모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운용규모 (A)	2016년 계획안 (B)	2015년 대비	
			(B-A)	%
국민연금기금	97,291,551	104,561,873	7,270,322	7.5
군인연금기금	2,972,681	3,086,682	114,001	3.8
공무원연금기금	19,872,930	20,618,972	746,045	3.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0,523,582	10,620,100	96,518	0.9

4.1.2 국내 공제 현황⁸⁾

현재 국내에는 60여개의 공제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⁹⁾ 편의상 이들을 다음과 같이 기능별로 나눠보았다.

8)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주간금융브리프/ 22권 47호, 2013. 11. 30~ 2013. 12. 6.

첫째, 특정직역 대상 소속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장기저축상품, 보험상품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회가 있는데, 그 예로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가 특정계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즉 세제, 재정 측면에서 특정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제회가 있는데, 그 예로 소상공인에게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노란우산공제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과학기술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개인이 아닌 특정단체나 법인을 조합원으로 공제회에 가입하게 하고, 특정단체나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 등과 같은 유사보증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제회가 있는데, 그 예로 건설업체를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인 건설업체로 하여금 보증, 용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설공제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험 유사 사업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공제회가 있는데, 그 예로 신용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을 들 수 있다.

공제회들은 다양한 금융, 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한다. 대형 공제회로서 자금운용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는 공제회는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 소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손인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주로 거론하지만, 공제회도 연기금 정도 규모에 이르는 대형 기관투자자인 셈이다.

9)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1

10)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주간금융브리프/ 22권 47호, 2013. 11. 30~ 2013. 12. 6.

4.1.3 주요 기금의 법적 근거 및 재원조달방식

가. 법적 근거, 목적 및 조달방식

기금	근거법률	목적	재원조달
고용보험 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내지 제86조	고용보험사업에 필요 한 재원충당	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 익금과 그 밖의 수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공공자금관 리기금법 제2조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 합관리하여 이를 재 정융자 등 공공목적 에 활용하고 국고채 권의 발행 및 상환과 재정차관자금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총괄 계정·융자계정·차관계 정을 구분	1. 예수금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다 른 계정 등으로 부터의 전 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예탁금 원리금 수입 5. 채권 등 유가증권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 8. 융자금 원리금수입 9. 재정차관 자금 등
공무원연 금기금	공무원연금 법 제73조	공무원 및 유족의 생 활안정과 복리향상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과학기술 진흥기금	과학기술기 본법 제22조	과학기술진흥과 과학 기술문화 창달에 대 한 효율적 지원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

기금	근거법률	목적	재원조달
			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1. 정부의 출연금 2. 카지노부담금 3. 출국납부금 4. 융자 이자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국민주택기금	주택법 제60조 제1항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 자체재원 :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 정부내부지출 : 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 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37조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책임준비금,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증진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에 필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근거법률	목적	재원조달
	제87조	한 경비 확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 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 입금 4. 타기금 차입금 5. 보증료, 구상금, 자연이자 6.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7.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 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 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기금운용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농지관리 기금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 제31조	영농규모적정화, 농 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 적 관리와 해외농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의 조달·공급	1. 정부출연금 2.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38조에 따 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 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 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 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대외경제 협력기금	대외경제협 력기금법 제3조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하고 우리나라와의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금	근거법률	목적	재원조달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진흥을 도모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	근거법률	목적	재원조달
		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30조	SOC시설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의 채무를 보증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 반시설의 확충과 국 민경제 발전에 기여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기 금법 제1조	1.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위한 각종 채 무보증 2.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 서의 확립 3.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 기여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 의 자의 출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나. 운영 및 조성 규모별 기금 분류

운영 및 조성 규모에 따라 기금을 분류하면 아래 표<4.2>와 같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조성이 다른 기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기금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의 운용 및 실적이 위 세 기금에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4.2> 운영 및 조성 규모 별 기금 분류

(단위 : 억원)

기금명	운 용			조 성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2012년말 (누계)	2013년말 (누계)	2014년 계획	
						당년도	누 계
1 고용보험기금	81,347	82,511	112,910	38,320	44,649	12,511	57,160
2 공공자금관리기금	1,138,462	1,570,759	1,566,984	3,804,065	4,796,635	1,232,493	6,029,128
3 공무원연금기금	152,145	153,762	182,622	45,904	58,158	10,927	69,085
4 공적자금상환기금	22,409	167,483	89,729	5	5	1,295	1,300
5 과학기술진흥기금	1,753	2,993	5,083	1,706	1,320	△369	951
6 관광진흥개발기금	8,282	9,073	8,930	16,009	16,715	1,781	18,496
7 국민건강증진기금	19,936	20,703	23,314	537	771	1,609	2,380
8 국민연금기금	919,337	971,691	1,056,202	3,554,510	3,879,398	353,128	4,232,526
9 국민주택기금	453,722	526,803	465,128	1,455,363	1,803,009	218,536	2,021,545
10 국민체육진흥기금	9,268	10,968	12,013	10,018	9,172	298	9,470
11 국유재산관리기금	9,175	11,940	10,340	1,944	4,777	854	5,631
12 국제교류기금	2,185	1,458	1,096	1,649	1,533	△64	1,469
13 군인복지기금	7,548	10,838	9,294	8,960	9,077	596	9,673
14 군인연금기금	26,837	27,674	29,191	7,057	8,624	398	9,022
15 근로복지진흥기금	4,336	3,807	2,832	3,655	2,838	193	3,031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068	1,176	1,148	112	150	△7	143
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14	2,281	2,212	107	74	97	171
18 남북협력기금	15,232	17,439	15,973	32,918	32,729	△156	32,573
1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298	26,211	28,705	41,748	41,068	292	41,360
20 농어업재해보험기금	3,017	723	1,398	87	483	663	1,146
21 농지관리기금	21,188	18,718	16,956	47,734	53,302	5,270	58,572
22 대외경제협력기금	7,587	7,486	8,081	31,285	33,848	6,067	39,915
23 문화예술진흥기금	2,394	2,686	6,147	2,522	2,395	△191	2,204
24 문화재보호기금	1,377	1,300	1,306	233	363	15	378
25 방송통신발전기금	8,815	11,414	10,785	6,000	8,589	859	9,448
2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064	9,609	16,656	37,326	41,138	6,734	47,872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17	676	594	262	276	24	300
28 보훈기금	3,394	4,333	6,101	10,627	10,507	△17	10,490
29 복권기금	40,933	42,650	42,861	990	944	18	962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4,318	70,369	104,955	132,692	143,235	10,894	154,129
31 사학진흥기금	3,671	3,372	4,354	12,330	12,724	535	13,259
3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4,796	67,446	118,854	75,635	87,221	19,642	106,863
33 석면피해구제기금	336	408	406	235	290	1	291
34 수산발전기금	6,790	7,456	7,931	8,725	9,366	803	10,169
3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40	283	605	1,325	1,366	17	1,383

기 금 명	운 용			조 성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2012년말 (누계)	2013년말 (누계)	2014년 계획	
						당년도	누 계
36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297	624	2,196	105	31	1	32
37 양곡증권정리기금	4,637	11,838	5,042	△4,854	△5,247	3	△5,244
38 언론진흥기금	603	648	512	436	480	△133	347
39 여성발전기금	1,126	1,333	1,632	46	53	10	63
4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39	889	870	114	105	36	141
41 영화발전기금	2,755	3,067	3,653	2,981	3,109	100	3,209
42 외국환평형기금	386,494	855,799	720,680	835,346	820,971	△52,261	768,710
4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35	2,171	2,493	345	71	235	306
44 응급의료기금	2,505	2,286	2,181	610	471	△24	447
45 임금채권보장기금	5,663	6,729	10,495	4,293	6,099	2,005	8,104
4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489	5,993	6,620	7,722	8,202	1,315	9,517
4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169	5,323	5,288	1,325	1,967	379	2,346
48 전력산업기반기금	22,980	24,851	31,496	16,002	19,412	6,973	26,385
49 정보통신진흥기금	11,991	12,025	12,107	6,989	6,209	334	6,543
5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6,178	90,884	85,591	165,608	169,370	611	169,981
51 지역신문발전기금	263	179	131	132	29	△42	△13
52 청소년육성기금	807	808	886	606	541	△59	482
53 축산발전기금	8,147	9,208	11,767	15,910	17,599	2,499	20,098
5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24	125	148	219	226	2	228
55 한강수계관리기금	4,774	4,988	4,780	418	652	120	772
기금소계	3,703,067	4,908,267	4,880,264	10,446,948	12,167,099	1,847,850	14,014,949
56 구조조정기금	33,750	15,896	25,562	6,595	4,588	△3,353	1,235
57 기술신용보증기금	27,227	25,557	27,749	25,437	23,784	△73	23,711
5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217	21,072	16,860	22,504	26,132	△2,723	23,409
59 농어가복합지원자축장려기금	1,083	1,012	999	103	16	5	21
60 무역보험기금	24,922	28,987	31,873	10,630	11,420	1,456	12,876
6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918	4,720	3,124	5,683	6,025	536	6,561
62 신용보증기금	68,567	67,055	62,269	61,870	58,201	1,525	59,726
6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1,391	116,999	71,654	△15,540	△6,346	△17,361	△23,707
6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217	26,966	33,978	33,118	39,220	5,319	44,539
금 융 성 소 계	288,292	308,264	274,068	150,400	163,040	△14,669	148,371
합 계	3,991,359	5,216,531	5,154,332	10,597,348	12,330,139	1,833,181	14,163,32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다. 기금의 연도별 자산규모 분류

아래 표<4.3>에 의하면, 2005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고용보험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꾸준히 총 기금 자산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단계적으로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가입의무화 정책 및 농지 등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농지 등에 대한 육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능하는 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 등의 막대한 재원은 이에 상응한 투자처 내지 활용처를 필요로 한다. 아래 표<4.3>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재원은 약 428조원에 이르는데, 위 광대한 재원은 메자닌 펀드 등 주로 위험도가 낮은 투자처를 선별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막대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외건설사업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의 초기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재원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 기금의 연도별 자산 규모 분류

(단위 : 억원)

	2005년말 (실적)	2006년말 (실적)	2007년말 (실적)	2008년말 (실적)	2009년말 (실적)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실적)	2012년말 (실적)	2013년말 (실적)
1 고용보험기금	102,086	104,390	102,922	95,395	81,571	72,420	73,256	81,913	91,115
2 공공자금관리기금	1,847,647	2,157,936	2,554,730	2,450,673	2,881,714	3,181,314	3,470,287	3,727,682	4,119,414
3 공무원연금기금	38,295	42,229	48,043	46,861	51,873	58,307	60,105	81,419	152,271
4 공적자금상환기금	3,417	281	742	765	74	70	144	34	8,150
5 과학기술진흥기금	8,642	8,619	8,687	7,791	3,539	2,733	2,125	1,750	1,280
6 관광진흥개발기금	10,577	12,183	13,436	13,875	14,340	14,902	15,538	16,044	16,763
7 국민건강증진기금	2,900	2,600	2,433	3,282	3,610	4,952	4,668	5,935	6,049
8 국민연금기금	1,641,850	1,897,262	2,201,279	2,489,303	2,830,972	3,256,650	3,504,581	3,929,243	4,276,704
9 국민주택기금	555,825	607,485	637,420	677,606	773,182	847,956	890,656	951,784	1,040,369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1,009	11,293	13,609	15,407	17,445	17,545	17,442	18,516	18,437
11 국유재산관리기금								3,692	2,841
12 국제교류기금	2,813	2,954	2,885	2,359	2,342	1,909	1,666	1,721	1,603
13 군인복지기금	8,583	8,722	9,353	10,510	10,030	11,256	13,329	14,569	14,653
14 군인연금기금	2,659	3,410	4,740	4,766	4,654	3,844	6,207	7,057	8,624
15 근로복지진흥기금	4,990	4,556	4,345	4,032	6,293	6,191	5,784	4,623	3,722
16 금강수계관리기금	281	254	214	244	268	999	764	924	1,073
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44	306	331	363	281	1,677	1,376	1,631	1,776
18 남북협력기금	27,070	30,327	31,078	39,358	38,054	37,463	37,695	36,969	36,747
1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3,672	35,850	36,944	38,143	38,881	39,979	41,651	42,860	42,701
20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91	440	647	917	1,270	1,702	1,654	87	490
21 농지관리기금	44,533	46,160	54,157	66,396	69,122	65,335	72,635	81,150	84,345
22 대외경제협력기금	17,662	19,307	21,236	23,131	24,735	26,524	28,088	31,309	33,884
23 문화예술진흥기금	5,755	5,978	5,760	5,073	4,733	4,358	7,640	7,349	7,233
24 문화재보호기금	-	-	-	-	-	654	743	873	1,233
25 방송통신발전기금	3,264	3,309	3,597	3,953	4,103	4,298	6,991	6,465	7,834
2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9,571	43,398	46,670	37,326	41,138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	-	-	-	159	221	133
28 보훈기금	7,706	8,191	8,435	8,623	8,750	8,931	10,374	10,627	10,507
29 복권기금	2,188	2,359	2,290	3,636	4,670	6,677	7,307	3,181	3,142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6,786	84,175	93,766	94,297	105,876	119,885	127,450	140,865	150,680
31 사학진흥기금	7,345	7,341	7,271	7,754	8,470	10,074	11,926	12,509	12,883
3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30,108	33,737	43,687	52,387	63,134	75,306	87,599	85,536	97,513
33 석면피해구제기금							142	246	303
34 수산발전기금	6,662	7,011	7,496	7,852	7,988	8,127	8,725	9,379	10,067

	2005년말 (실적)	2006년말 (실적)	2007년말 (실적)	2008년말 (실적)	2009년말 (실적)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실적)	2012년말 (실적)	2013년말 (실적)
3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90	227	528	873	1,171	1,203	1,325	1,366
36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098	167	291	321	1,022	378	37	108	31
37 양곡증권정리기금	311	101	271	344	433	789	306	400	7
38 언론진흥기금	-	-	-	-	-	544	542	524	563
39 여성발전기금	549	463	300	187	134	79	63	46	53
4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90	138	109	150	128	1,791	1,344	1,445	1,545
41 영화발전기금	-	-	3,219	3,885	4,101	4,277	5,512	5,993	6,090
42 외국환평형기금	499,331	540,567	647,591	861,824	916,802	1,028,384	1,144,075	1,191,446	1,323,309
4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89	181	307	147	154	213	249	345	71
44 응급의료기금	396	509	490	543	621	846	1,197	1,107	1,065
45 임금채권보장기금	4,186	4,698	5,126	5,076	4,649	5,498	6,690	8,345	10,373
4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489	1,612	2,017	2,747	4,647	4,606	5,370	7,723	8,212
4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681	3,804	3,860	3,354	2,748	2,156	3,435	3,680	4,296
48 전력산업기반기금	15,588	15,277	16,030	14,396	14,405	15,133	14,716	16,002	19,412
49 정보통신진흥기금	21,052	17,378	14,926	12,538	9,787	6,727	10,419	7,033	6,240
5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39,405	141,670	141,214	144,173	177,303	170,475	164,235	161,216	164,979
51 지역신문발전기금	184	325	423	472	427	346	280	185	82
52 청소년육성기금	3,262	2,885	2,349	1,856	1,519	1,103	639	606	541
53 축산발전기금	23,480	22,220	20,145	19,198	17,215	17,494	17,869	15,913	17,602
5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99	288	281	268	259	245	199	219	227
55 한강수계관리기금	842	635	1,590	1,522	866	6,105	6,074	6,598	7,768
기금 소 계	5,220,184	5,901,673	6,782,299	7,248,281	8,259,638	9,203,796	9,949,831	10,785,748	11,879,500
56 구조조정기금	-	-	-	-	9,768	40,569	54,326	32,655	23,954
57 기술신용보증기금	11,017	14,265	16,801	20,519	29,458	30,933	33,194	32,297	33,542
5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154	11,356	8,677	12,521	21,659	23,532	25,666	28,286	30,619
5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15	491	210	373	272	279	342	103	15
60 무역보험기금	24,894	25,283	25,854	39,525	30,123	26,853	26,277	29,958	33,443
6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429	2,838	3,163	3,528	4,541	5,051	5,480	5,906	6,246
62 신용보증기금	39,723	43,753	42,179	45,193	72,463	76,171	81,143	77,976	77,526
6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90,267	261,479	216,344	113,341	154,973	165,875	105,621	113,432	124,343
6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501	10,110	11,377	16,006	20,813	25,934	30,629	36,844	43,044
금 용 성 소 계	392,800	369,575	324,605	251,006	344,070	395,197	362,678	357,457	372,732
합 계	5,612,984	6,271,248	7,106,904	7,499,287	8,603,708	9,598,993	10,312,509	11,143,205	12,252,232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4.1.4 주요 기금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표 4.4> 주요기금의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¹¹⁾

(단위: 백만원)

기금	규모 (2015년 총수입 기준)	운용계획 (2016년 기준/ 2015년 대비 %)	시사점
고용보험 기금	11,226,098	총수입 16.7% 증가, 사업비지출 19.7% 증가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반영
공공자금 관리기금	165,642,332	총수입 29.2% 증가, 사업비지출 11.7% 감소, 정부내부지출 53.6% 증가	운용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상당금액이 정부내부지출로 소비될 예정
공무원 연금기금	19,827,930	총수입 3.8% 증가, 사업비지출 5.5% 증가, 정부내부지출 100% 감소, 차입금 원금상환 312.5% 증가	기금간, 계정간 정부내부지출재원을 모두 차입금상환으로 소비할 예정/ 2015년 운용 시 대규모 차입발생 시사
과학기술 진흥기금	240,838	사업비 22.1% 감소, 총 지출 37.0% 감소	2016년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광진흥 개발기금	1,185,857	총 지출 37.7% 증가, 정부내부수입 443.7 대폭 증가	기금 간 정부내부수입을 증대시킴,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관심 확인 가능
국민연금 기금	97,291,551	사업비 11.3% 증가 재산 수입외 15년 대비 감소수치 없음	국민연금재원규모가 다른 기금에 비해 막대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

11)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자료 - 주요 기금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상 각 연기금
별 수입 및 지출 총괄표 참조

주택도시 기금	53,144,347	총 수입 17.4%까지 증가시킬 예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안정적, 대규모 재원확보 상태
국제교류 기금	70,776	총 수입을 55.1% 확대하지만 예상 총 수입 합계는 109,752에 그칩	총 수입을 55.1%확대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소규모재원으로 운영됨
군인연금 기금	2,972,681	합계 3.8% 증가예정이지만 변동치 미미	현 운영현황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 진흥기금	315,996	총 13.6% 자금규모확대, 차입금 이자상환금 15.4%감소	자금 규모 확대, 하지만 총 자금규모변화는 미미, 현 운영현황 유지할 것으로 보임
기술신용 보증기금	2,539,767	1.2% 운영규모 축소하나 전체적으로 변화 미미	현 운영현황 유지할 것으로 보임
농지관리 기금	1,342,371	정부내부수입이 48,941에서 653,123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을 갖고 정부출연금을 대폭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음
대외경제 협력기금	923,591	여유자금회수금이 141.5%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 합계는 4.3% 증가에 불과	현 운영현황 유지할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10,523,582	정부내부수입을 21.1%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나 합계는 0.9%증가에 불과	현 운영현황 유지할 것으로 보임
사학진흥 기금	489,586	여유자금운용치가 78% 감소, 경상사업비가 39.3% 감소	부족한 재원을 융자사업비를 6.7%증가시켜 보완할 예정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금	336,840	합계 4.8%증가에 그치고 변화 미미	최근 활발한 SOC시설 투자사업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신용보증 기금	5,654,188	정부내부수입 81.5%감소, 운용여유자금 35.2%감소 예정	2016년 계획안의 총 운영규모 4,771,567로 802,621감소, 정부출연금을 감소 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원자력 기금	256,558	자체수입을 56%까지 증가시킬 예정	총 규모가 다른 기금에 비해 작은 편이나 총 규모를 48.3%까지 증가시킬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4.2 주요 기금 현황,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

4.2.1 타산업진흥기금 현황,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

가. 타산업진흥기금 현황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기금현황’에 따르면 타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1. 과학기술진흥기금 2. 관광진흥개발기금 3. 문화예술진흥기금 4. 방송통신발전기금 5. 수산발전기금 6. 언론진흥기금 7. 영화발전기금 8. 전력산업기반기금 9. 정보통신진흥기금 1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 지역신문발전기금 12. 축산발전기금이 있다.

이 중 과학기술진흥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을 알아본다.

나.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다음이 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3항 각호).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은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성되며,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위 그 밖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수입금에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다는 점이고¹²⁾, 2013년까지 조성된 자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5>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부담금	운영수입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 (억원)	1,582	3,329	—	12,114	14,787	31,812	30,492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원 조성의 특징으로서는 차입금 및 운영수입 비중이 높다는 것이며, 복권기금에서의 전입, 공자기금에서의 차입도 원활한 편이고, 조성대비 사용액 비율도 높다.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1.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12) 다만 실제 수입 내역에서는 법상 규정된 복권기금 및 공자기금에서만 내역이 있음.

유치 지원, 2. 관광상품개발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 3. 국내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4.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등 용자지원이 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1. 정부의 출연금, 2. 카지노부담금, 3.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 조성되며(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2항), 2013년까지 조성된 재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6>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부담금	운영수입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억원)	802	0	37,437	7,812	46,051	29,336	16,71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특징으로는 주요 재원 조성 방식으로 카지노 부담금 부분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유휴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다(2013년 말 기준 1,315억원).

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방송통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다음이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

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7.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8.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9.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10.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용 지원 12.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3.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4.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5.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8.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용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은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3년까지 조성된 재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7>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부담금	운영 수입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 (억원)	0	483	34,320	2,311	140	37,254	28,665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원 조성의 특징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없으며, 부담금 형태의 자원 조성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며, 유희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다는 것이다(2013년말 기준 1,200억원).

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다음이 있다(전기사업법 제49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은 1.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3년까지 조성된 재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8>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부담금	운영수입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억원)	0	0	154,975	12,983	571	168,529	149,117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 역시, 부담금 의지 비율이 절대적이다.

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2. 연수사업 등 경상지출 3. 모태조합출자 등 자본지출이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은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

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3년까지 조성된 자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자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부담금	운영수입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 (억원)	60,140	181	3,708	502,162	137,118	703,309	533,93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목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확실한 목적성이 있으므로, 정부 출연금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정부, 지자체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사. 소결론

타산업진흥기금은 설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의 출연금, 부담금, 차입금, 운영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각 기금의 사업 또는 법상 정하여진 기금에 예탁, 전출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금의 자원 조달 방식은 해당 산업의 특징 및 공공성, 정부 지원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해당 산업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정부 출연 비중이 높고,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전혀 없으며, 해당 산업체에게 부담금 등을 징수하기 힘들고 오히려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엔 차입금의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공공성(지원의 필요성), 자체 산업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위한 해외건설 보증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증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부과한다 하여도 보증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공공성을 보아 정부의 출연금 비중을 높이든지,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법령에서 건설 유관 기금(주택도시기금 등)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전입, 예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¹³⁾

4.2.2 금융성 보증기금 현황, 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식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13) 법에 근거 없이도 국가재정법상 특정 기금을 제외하고 여유 재원으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13조 제1항 본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 기술보증 2. 기술평가 3. 보증연계투자 4. 구상권관리 5. 기술·경영지도 등이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1.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그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2013년까지 조성된 재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10> 기술신용보증기금 재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부담금	운영 수입	평가 계정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 (억원)	65,380	4,193	61,912	48,127	172	179,784	155,999	23,784

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1.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위한 각종 채무보증, 2.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 3.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 기본재산관리 2. 신용보증 3. 보증연계투자 4. 경영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 6. 구상권행사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2013년까지 조성된 재원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신용보증기금 자원 조성 현황(누계, 2013년)

항목	출연금		운영수입	소계	사용액	순조성액
	정부	민간				
금액 (억원)	98,546	133,393	136,811	368,750	310,549	58,201

4.2.3 해외의 건설보증제도

가. 해외의 건설보증제도 개관

신용보증기금제도(Credit Guarantee Fund)는 물적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경제주체간 신용거래에 개재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금융시스템이다.¹⁴⁾

전통적으로 유럽식 상호보증제도(MGS¹⁵⁾)는 보통 유럽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들이 상호부조적인 차원에서 회원기업의 단체를 결성하고 회원기업에 대하여 보증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며,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증에 대한 재보증 또는 직접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며, 공적지원이 뒷받침되는 경우 신용보증제도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¹⁶⁾

아시아식 공공기관보증제도(PGS¹⁷⁾)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14) 최창열 외 2,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운용에 대한 연구」, 『생산성논집』, 한국생산성학회(2008), 130쪽

15) Mutual Guarantee System

16) 성은중, 「건설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2011년 2월), 16쪽 - 17쪽

17) Public Guarantee System

대만 등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신용보증제도로써 보증의 당사자인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적보증기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공적지원이 비교적 강하다. 또한 재원 조성의 상당 부분을 정부 출연 내지 출자에 의존하며, 최종적인 보증채무의 이행 책임을 정부 등 공적부분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¹⁸⁾

미국식 용자보증제도(LGS¹⁹⁾)는 위 두 제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서, 보증대상과 보증 상대방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두고, 요건에 부합된 대출에 따른 은행 등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²⁰⁾ 이하에서 미국(미주 대륙 포함), 일본의 건설보증제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나. 미국(미주대륙 포함)

미국을 포함한 미주에서는 슈어티보증증권(Surety Bond)가 주로 이용되고 있고, 이는 Bank Guarantee가 아니며, 증권의 종류는 계약보증과 비계약보증으로 나뉜다. 미국에서는 잦은 건설사업 수행 실패의 경험에 의하여 1935년 Miller Act가 제정되어,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보증을 의무로 요구해 오고 있고, 이는 효과적으로 건설기업의 자질을 평가하고 적정하게 위험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²¹⁾

Surety Bond와 은행보증의 차이점은 은행이 발행하는 P-bond의

18) 성은중, 위의 논문, 17쪽

19) Loan Guarantee System

20) 성은중, 위의 논문, 17쪽

21) 김종호,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에스크로우 계약을 통한 보증의 확대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2013. 11), 153쪽

경우 독립성이 있어 발주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증인에게 무조건적인 이행의무가 인정되지만, Surety Bond는 건설회사(채무자)의 파산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일응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행청구(Calling)가 가능하고, 부종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증회사가 공사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건설회사에게 보증증권을 발행하면 보증회사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보증서 발급시 보증회사(보증인)는 자체적인 심사 방법을 동원하여 신인도, 시공능력, 재무적 관점 등 엄격한 기준으로 건설기업을 평가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로 기능하고 있다.²²⁾

다. 일본

일본은 1952년 전불금 보증사업법을 제정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전불금(선급금)제도와 이를 보증하는 건설업 보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52년 건설업자와 금융기관이 주로 출자한 동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서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북해도건설업 신용보증주식회사를, 2000년에는 중일본건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일본에는 공사완성보증인 제도가 있어 보증기관이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1995년부터 건설업보증회사가 계약보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 및 은행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³⁾

한편, 일본에 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이 있으나, 채무 보증은 이

22) 성은중, 앞의 논문, 57쪽

23) 성은중, 앞의 논문, 59쪽

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사업 협동조합 및 건설업 및 건설 관련업 단체 등이 공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등에만 한정되고, 개업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보증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²⁴⁾

라. 소결론

아시아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원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건설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발달하였으며, 제도상으로는 유럽의 보증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미주 대륙에서는 아시아권과 유럽의 보증제도가 아니라 보증증권이 발달하였다.

각 지역의 건설보증제도는 역사적 전통과 법체계 속에서 발달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장기간·다액으로 진행되는 건설수주 특성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증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http://www.kensetsu-kikin.or.jp/saimu/saimuhoshou.html>, 保証を受けられる者:: 当基金に対して出えんしている事業協同組合並びに建設業及び建設関連業の団体等 です。

제5장 해외건설기금 필요성 및 조성방안

5.1 해외건설기금 목적 및 활용

5.1.1 해외건설기금의 조성 필요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이행성 보증발급이 원활해져야 하나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용도가 낮고 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이나 공적수출신용기관²⁵⁾만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금이나 부보기관의 보증서 등 담보요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증의 대지급²⁶⁾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외건설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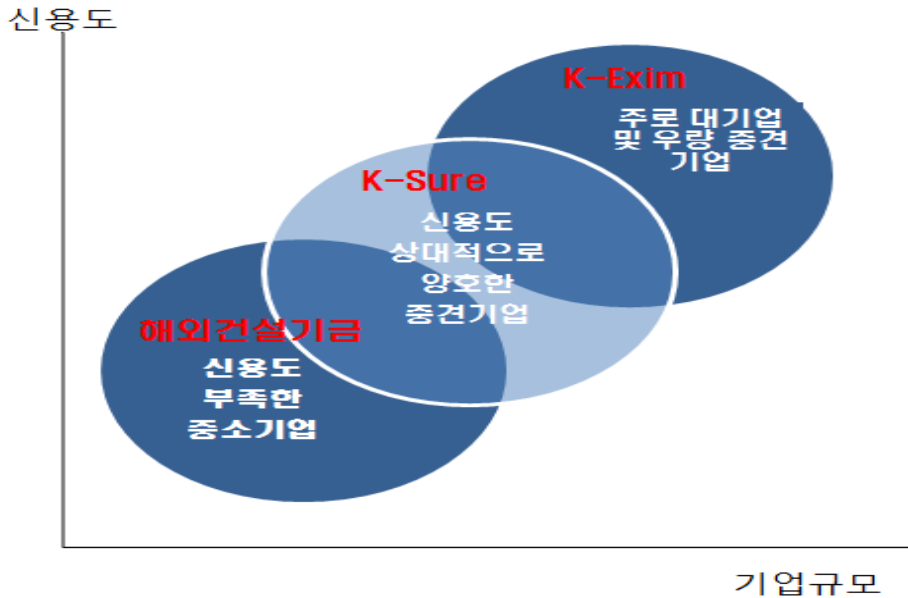
해외건설기금 설립의 가장 큰 필요성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증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보증발급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군에 대한 지원주체

25)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 및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국, 수입자 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있다.

26) 은행 등의 지급보증으로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뒤, 그 특정업자가 불이행하였을 때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가 없다. 재무건전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무관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해외건설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림 5.1>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른 ECA별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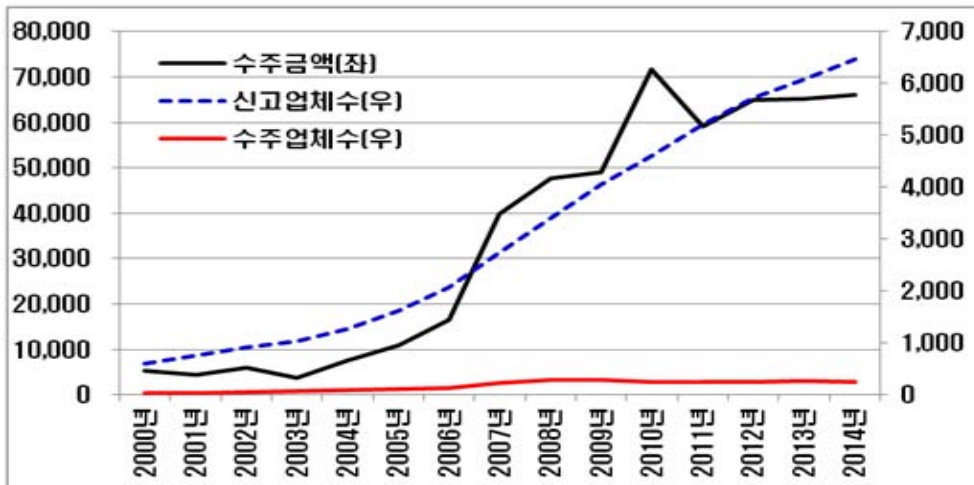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이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부족해 ECA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라도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우량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와 무관하게 이행성 보증을 발급해줄 주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실적이 부족해 담보 없이는 이행성 보증 발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5.2> 해외건설 수주금액과 업체수 추이

[단위 : 백만불, 개]



자료: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률은 둔화하는 반면 해외건설시장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해외건설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건설사²⁷⁾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실제로 수주로 연결하는 회사²⁸⁾는 2007년(226개사)이나 2014년(242개사)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해외건설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향후 해외건설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참여자가 원활한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실적이 부족하거나 없는 기업은 규모가 작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으면 이행성 보증 발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

27)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업체 수

28) 해당연도에 해외건설 신규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하청제외, 기존계약의 금액변경에 따른 증액도 포함)

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사업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우수하고 국내사업을 통해 회사의 영속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만한 회사의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담당해줄 중소·중견기업을 잘 육성해야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1.2 해외건설기금 조성주체 및 활용범위

가. 해외건설기금 조성주체

4장에서 살펴본 주요 기금들의 재원조달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기금을 기금의 수혜대상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²⁹⁾과 수혜대상 중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³⁰⁾, 공익적 목적의 기금³¹⁾으로 분류했다.

기금의 수혜대상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의 재원은 보험료(적립금)와 기금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수혜대상 중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과 공익적 목적의 기금은 정부 혹은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29)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이 수혜대상이 특정한 기준(근무연수)을 갖추면 모두 혜택(연금수령)이 돌아가는 기금

30) 과학기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조성된 기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실업급여 등)이 돌아가는 기금

31)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의 설립목적 및 용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금

<표 5.1> 혜택 대상별 기금 분류

구분	사례예시	기금조성방식	기금
수혜가능대상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수혜가능대상으로, 납입기간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	보험료(적립금), 기금운용수익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수혜가능대상 중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이 수혜가능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직한 사람에게만 지급	정부 혹은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고용보험 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등
공익적 목적의 기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		공공자금, 관리기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등

자료: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2015.10.27. 현재, 하도급 제외

이 밖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교류기금은 위에 분류한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불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해외건설기금의 특성을 보면, 수혜대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립한다면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하고 향후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른 기금들과의 형평성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행성 보증의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서도 일부 출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 해외건설기금 활용범위

해외건설기금의 활용범위는 첫째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정보증 발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건설기금의 주목적인 해외건설 수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의 주 대상은 주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이 어려운 기업을 위주로 발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외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협력에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생협력제도 중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대기업³²⁾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보증서는 전체 대출금액 중 일부를만 보증하는 부분보증이지만, 상기 지원제도는 보증재원을 대기업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게는 100% 전액보증을 해주고, 보증료도 기존 수수료대비 25% 감면해준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서 진출하는 것인데, 이 경우 국내 대기업에서 상생협력을 위해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고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대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폭 낮아질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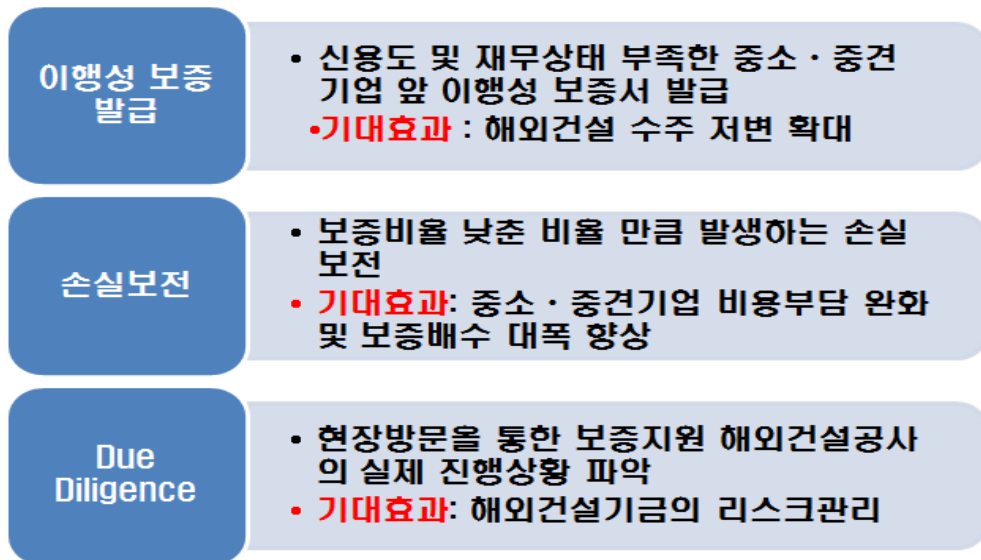
32)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POSCO,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등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2곳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잠정 중단 상태임

고, 해외건설기금의 보증배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기금의 리스크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보증비율 감면 대상은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중소·중견 기업의 보증비율도 해외건설기금 출연금의 일정 배수 수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관련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해외건설은 공사 진행상황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는 시공상황 보고로만 파악할 수 있는데 시공상황 보고는 해당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위여부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해외건설기금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에 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5.3> 해외건설기금의 활용범위



5.2 해외건설기금 자원 조달 방안

5.2.1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

해외건설의 수출은 단순히 자동차, TV 등 상품의 판매와는 달리 학교, 병원, 도로, 발전소 등의 인프라시설을 수출하는 것으로 그 단위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인력, 문화를 복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건설사업의 성공은 비단 개별건설사의 수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프로젝트는 해당국가와의 우호도 증진, 건설한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동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해외건설기업의 출연금에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합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금 중 수혜대상 중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과 공익적 목적의 기금은 정부의 출연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해외건설의 무형의 수익 창출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정부에 대한 출연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성의 주체 중 하나인 해외건설기업은 납입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초 보증지원시 일정금액의 출연을 의무화 하고, 이후 보증지원 공사 매출액의 0.5% 정도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연간 조성가능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5년 평균 연간 수주금액³³⁾ 약 3.5

33)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연도별 수주액에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을 나누어서 계산. 하도급 공사를 포함함

조원의 20% 수준(0.7조원)을 기금에서 보증 지원한다는 가정이다.

또 다른 주체인 정부에서는 특별조성기금 출연 방식으로 기업 출연금의 3배수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한다. 이 경우 연간 조성가능 금액은 35억원의 3배수인 105억으로 기업과 정부의 출연금의 합인 연간 140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5.2>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연간조성가능 금액

구분	정부	기업	계
조성방식	기업 출연금의 3배수를 매칭 방식으로 출연	보증지원 공사 매출액의 0.5%를 출연	-
조성금액	105억원	35억원	140억원
비고	기업의 출연금 $\times 3$	$3.5\text{조원} \times 20\% \times 0.5\%$	정부출연금 + 기업출연금

5.2.2 기존 기금의 자원 활용

가. 해외건설기금의 초기 필요자원 및 기존기금의 활용근거

운영 초기에 일정수준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최근 5년 평균 원화기준 연간 수주금액인 3.5조의 20%만 동 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해도 사업 초년도에 약 2,110억원이 필요³⁴⁾하다. 따라서 동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천억원 이상의 초기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동기금의 수혜자인 건설사들은 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

34) $3.5\text{조원} \times 20\%$ (보증 지원 공사규모) $\times 30\%$ (P-bond 15%, AP-Bond 15%)

건기업으로 거액의 초기 출연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재정법 제13조에는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 및 전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초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저금리 경제구조에서는 여유기금의 활용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는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보다는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³⁵⁾와도 같이 기존에 설립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면 국가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 기금의 초기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 5.3> 국가재정법 제13조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35) 이원희, 나경덕, 정아름, 회계기금간여유재원통합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0

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획재정부에 따르면³⁶⁾, 우리나라에는 총 64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체 조성 규모는 2014년말 기준 1,343조에 달한다. 이 중 국가재정법 제13조의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금 중 해외건설기금의 초기 자원 조성을 위한 기금의 전입이 가능한 기금을 살펴보았다.

<표 5.4>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으로 자원 조달이 가능한 기금³⁷⁾

기금명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36) 2015년도 기금현황, 기재부

37) 자원조달 방법에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예수금이 명기되어 있는 기금 및 기금의 자산내역에 타기금예탁이 존재하는 기금

나. 해외건설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기존기금

기존 기금에서 해외건설기금으로 전입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기금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 기금의 규모대비 여유재원³⁸⁾의 비율이 전체 기금의 평균대비 높으면서도 규모도 커서 해외건설기금에 출연이 가능해야 하며, 세 번째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³⁹⁾되지 않는 기금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외건설기금의 초기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기금이어야 한다.

기금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기준은 64개의 전체기금 중 자산규모가 중위값(median) 이상의 기금⁴⁰⁾을 의미하고, 기금의 규모 대비 여유재원의 비율은 전체 기금자산 중 단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전입이 가능한 기금은 자산운용실적(성과)에 대한 평가등급이 보통 이하인 기금으로 한정하였다. 기금의 전입 가능성은 기금의 설립목적과 여유재원의 활용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립목적과 크게 상이하지 않으면서도 여유재원의 활용에 대한 제약을 검토했다.

<표 5.5> 전체 기금 중 기금의 규모가 중위값 이상인 기금

(단위 : 십억원)

구분	기금명	자산규모	중위값
사회보험성기금	국민연금기금	470,626	8,019
계정성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454,593	

38)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상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분류되는 자산

39)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상 ‘자산운용실적(성과)’가 보통 이하인 기금

40) 국민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초대형 기금의 영향으로 평균값을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왜곡된 왜도(negative skewness)를 가짐에 따라 median을 기준으로 잡음

일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149,298
사업성기금	주택도시기금	114,832
사업성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6,325
사회보험성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5,717
사회보험성기금	공무원연금기금	15,709
사회보험성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126
사회보험성기금	고용보험기금	10,544
사업성기금	농지관리기금	9,219
금융성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107
금융성기금	신용보증기금	7,988
금융성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972
사업성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516
사업성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124
금융성기금	무역보험기금	3,738
사업성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3,632
사업성기금	남북협력기금	3,617
금융성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3,340
금융성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828
사업성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2,607
사업성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134
사업성기금	축산발전기금	2,010
사업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1,798
사업성기금	군인복지기금	1,462
사업성기금	사학진흥기금	1,367

사업성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1,242	
사업성기금	수산발전기금	1,078	
사업성기금	보훈기금	1,051	
사회보험성기금	군인연금기금	1,030	
사업성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828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음영으로 표시한 기금은 조건 미충족

우선 자산규모가 중위값(8,019억원) 이상인 기금의 내역은 위의 표와 같다. 그러나 31개의 기금⁴¹⁾ 중 국민연금 등 음영으로 표시된 7개의 기금은 국가재정법제13조에서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제외하는 기금으로 실질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기금의 수는 24개이다.

<표 5.6> 여유재원의 규모가 평균 이상인 기금

(단위 : 십억원)

기금명	자산규모	단기운용평잔	전체운용평잔	단기비중
공공자금관리기금	454,593	3,352	3,352	100%
외국환평형기금	149,298	—	—	—
주택도시기금	114,832	3,253	21,462	1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6,325	88	88	100%
농지관리기금	9,219	296	371	8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107	933	933	100%
신용보증기금	7,988	28	5,875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972	11	3,775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124	167	167	100%

41) 기금의 수는 64개이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재부의 기금현황에서 제외되어 전체 62개의 기금만으로 중위값 산출

무역보험기금	3,738	212	2,388	9%
대외경제협력기금	3,632	163	201	81%
남북협력기금	3,617	353	793	45%
기술신용보증기금	3,340	10	2,392	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828	14	2,311	1%
전력산업기반기금	2,607	351	882	40%
국민체육진흥기금	2,134	250	557	45%
축산발전기금	2,010	46	46	100%
관광진흥개발기금	1,798	135	177	76%
군인복지기금	1,462	52	338	15%
사학진흥기금	1,367	27	27	100%
임금채권보장기금	1,242	17	640	3%
수산발전기금	1,078	75	174	43%
보훈기금	1,051	11	221	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828	97	97	100%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기금자산운용 현황, 음영으로 표시한 기금은 조건 미충족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24개의 기금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조건을 테스트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기금별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전체 기금의 자산운용규모는 일평균기준 524조원⁴²⁾이고 이 중 단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19조원으로 약 4%에 해당한다. 따라서 4% 이상을 단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은 여유재원이 많다

42)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금들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18개의 기금인데 단기운용자산이 적은 기금의 경우 재원의 전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다수의 기금으로부터 전입받을 경우 해외건설기금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기금을 단기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인 기금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후보를 압축하면 결국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만이 최종 후보에 남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기금을 대상으로 세 번째 조건을 테스트 하고자 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자산운용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의 효율성만을 검토했다. 2014년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보면 동기금⁴³⁾은 자산운용실적이 아주미흡으로 나타나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기금 모두 해외건설기금의 초기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설립목적과 제약조건들을 검토하여 해외건설기금의 초기재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설립 목적 및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동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1조는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한다’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조의2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해외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43)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

의 용자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기금은 이미 다양한 기금에 동기금의 재원을 예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기금을 해외건설기금의 초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5.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기금 현황⁴⁴⁾

구분	기금명
예수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탁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수산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설립 목적 및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동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타기금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용자가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용자가 가능한 기금의 범위에 해외건설기금을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법 제9조제4항에서 정의하고 동기금의 여유자금운용범위에 해외건설기금을 포함시키는 것도 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44) ‘예수기금’은 조성재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명시된 기금과 기금의 용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명시된 기금을 의미하며, ‘예탁기금’은 여유자금 운용범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이 명시된 기금을 의미

향후 해외건설기금이 설치된다면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내부협의를 통해 동기금을 해외건설기금의 초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등 국가재정법제13조에서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제외하는 기금이라고 할지라도 해외건설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법령에 타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면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해외건설기금을 설치할 때 근거법령에 모든 타기금·예산의 자금을 예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삽입하면 기금의 재원조달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5.2.3 해외건설기여금 신설

해외건설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의 유입이 요구된다.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발급한 이행정보증서에 대해 본드콜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일정부분 손실액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금들은 기금의 목적달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표 5.8> 기여금 및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

기금	재원조달
과학기술진흥기금	복권수익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부담금, 출국납부금
국민주택기금	복권기금전입금
국제교류기금	국제교류기여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복권수익금
농지관리기금	농지관리부담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일례로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으로 활용하듯이 해외건설기금도 해외건설기여금 항목을 신설하여 해외건설이행정보증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건설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해외건설기여금을 신설하여 해외건설기금의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해외건설기금이 사용되는 대상이 모두 해외건설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일치하며, 기여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 주체로부터의 저항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CA 등 다른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해외건설기금의 기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한국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등 해당 ECA의 근거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ECA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주무부처간 정책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5.2.4 수출신용기관(ECA)의 특별출연

기업과 정부의 출연금과 타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원 전입 이외의 해외건설기금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ECA의 특별출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3년 8월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ECA들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해당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군에 대한 이행성 보증 발급을 해외건설기금에서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일 ECA들이 특별출연 방식으로 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여신건전성을 관리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ECA의 출연금액은 사전에 정해놓기 보다는 기금에서 필요한 규모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발주 보증요율을 낮춰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대기업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손실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ECA에서 특별출연 형식으로 출연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5.2.5 해외건설 대기업의 특별출연

해외건설기금에 지속적인 재원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이 해외건설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을 해외건설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법인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대기업의 해외건설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이 아직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의

근거규정을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이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해외건설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 역시 이 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5.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시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호내지 제2호 생략

3. 협력중소기업의 해외건설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기금(이하 이 조에서 “해외건설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해외건설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해외건설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이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관련부처 및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법인세율 인상 및 법인세 감면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인세 감면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해외건설기업의 수주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및 투자 및 고용촉진 등 감세가 아닌 경제성장 및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5.2.6 조성규모 및 연간 예상 기금

가. 타기금에서 전입한 재원으로 조성

해외건설기금의 조성주체는 기금의 직접수혜를 받는 해외건설기업, 기금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한 정부, 타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ECA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기금의 재원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선 초기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이나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재원은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보면, 초기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단기 운용평잔인 3조 3,520억원의 5%인 1,676억원과 주택도시기금의 단기 운용평잔인 3조 2,530억원의 5%인 1,627억원을 초기재원으로 조달하면 총 3,303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초년도 보증지원사업 규모는 앞서 추정했던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수주금액 중 약 20%를 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5년 평균 연간 수주금액인 약 3.5조원의 20% 수준(7,000억원)에 보증비율 약 30%를 곱한 금액인 2,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증발급 지원을 통한 해외건설수주증가분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해외건설수주 증가에 따른 필요재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0> 해외건설 수주 규모에 따른 필요 보증금액

필요금액	중소비중	해외건설 수주 금액		
		500억 달러	750억 달러	1,000억 달러
달러	5%	1.5억 달러	2.3억 달러	3.0억 달러
	6%	1.8억 달러	2.7억 달러	3.6억 달러
	7%	2.1억 달러	3.2억 달러	4.2억 달러
원화	5%	1,650억원	2,475억원	3,300억원
	6%	1,980억원	2,970억원	3,690억원
	7%	2,310억원	3,465억원	4,620억원
계산방식	$\text{수주금액} \times \text{중소비중} \times \text{담당비율} \times \text{보증비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20%) (30%) </div>			

* 담당비율은 중소기업의 수주금액 중 기금에서 보증발급해주는 비율을 의미, 보증비율은 P-bond 15%, AP-bond 15%로 가정, 원/달러 환율은 1,100원 가정

보증사업 시작 이후 발생하는 신규조성금액은 보증수수료와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보증발급을 받은 기업의 출연금과 기업 출연금의 3배수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정부의 출연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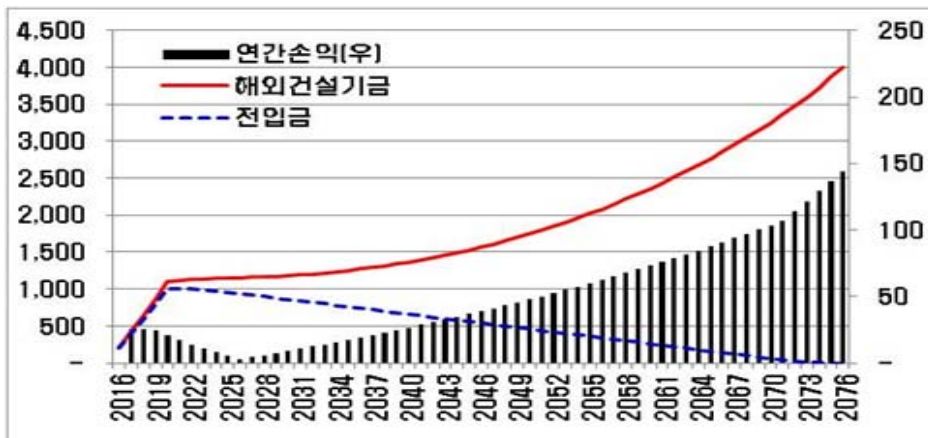
<표 5.11> 해외건설기금의 연간 예상 수수료 및 출연금

예상금액	중소비중	해외건설기금 조성 금액		
		500억 달러	750억 달러	1,000억 달러
수수료	5%	33.0억원	49.5억원	66.0억원
	6%	39.6억원	59.4억원	79.2억원
	7%	46.2억원	69.3억원	92.4억원
출연금	5%	33.0억원	49.5억원	66.0억원
	6%	39.6억원	59.4억원	79.2억원
	7%	46.2억원	69.3억원	92.4억원
계산방식	수수료: 보증금액(1,650억)의 2% (보증보험 1%, 사업성평가 0.1% 포함) 출연금: 기업 (공사금액의 0.5%, (A)) + 정부 ((A)×3)			

이를 토대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향후 60년 동안의 해외건설의 예상 설정규모를 추정해왔다. 단일기간의 항상성장모형⁴⁵⁾을 사용하였으며, 출연금과 보증수수료에 기금운용수익을 더하고 타기금 전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과 사업비를 감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5.4> 타기금 전입 해외건설기금의 예상 규모 추정

[단위 : 억원]



45) Constant Growth Model : 매 기간 동일한 성장률을 시현한다는 가정, $D_1 = D_0 \times (1+r)$

연간 해외건설 수주를 500억 달러로 가정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5%로 가정했을 때, 필요 보증금액은 1,650억원인데, 위험관리를 위해 보증배수를 10배 이하로 통제할 경우 해외건설기금의 연간손익과 기금의 규모, 전입금은 위의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초기에는 보증 수수료 및 출연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타기금의 전입은 매년 200억씩 5년간 분할해서 전입하고, 5년간 거치 후 5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로 설정했다. 전입되는 타기금에 대한 이자는 전입기금의 단기자산운용수익률(2.7%) 대비 10% 높은 3%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증수수료는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선수금보증과 이행보증의 평균 수수료인 2.45% 대비 약 20% 할인된 2%로 가정하였는데, 이 중 1%는 본드 콜(Bond Call) 발생시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0.1%는 사업성평가 수수료로 지급해 0.9%만 기금의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기금의 수수료 수익과 유동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은 상당부분 인건비와 Due Diligence 비용, 간접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는 2022년부터는 기금의 연간손익이 매년 감소하지만 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7년부터는 원리금 상환금액의 감소 및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의 증가로 인해 연간손익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리금 상환 규모와 수수료 및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보증 수수료나 출연금을 인하하는 다단계성장모형⁴⁶⁾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단일성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정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46) Multiple Stage Growth Model : 매 기간 다른 성장률을 시현한다는 가정

<표 5.12> 해외건설기금의 연간 예상 규모 추정을 위한 가정

항목	가정	근거
타기금 원금상환	매년 200억씩 5회 전입 5년거치, 50년 분할 상환	보증배수 10배 이하로 관리, 사업수익 적은 초기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타기금 이자상환	이자율 3%	단기자산운용수익률 2.7%
출연금	보증서 발급금액의 2% 기업(0.5%), 정부(1.5%)	기업 및 정부 출연금 참조
수수료	총 보증수수료 2% 중 1%는 보증보험 가입 (추후 타기금 전입금에 대한 원리금이 전부 상환될 경우 인하 가능) 0.1%는 사업성평가 수수료	중소·중견기업 평균 P-bond 와 AP-bond 의 평균합산보증수수료 (2.45%) 대비 약 20%할인
사업비	20억과 보증수수료 + 기금운용수익의 70% 중 큰 금액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Due Diligence, 간접비 등
연간손익	수수료 +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 - 원리금 상환 - 사업비	
보증규모	최초 1,650억원에서 매년 2%씩 증가 가정	표 5.11의 가장 보수적인 기준 적용

나. 정부 재원으로 조성

다음으로 정부의 재원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가정해 보았다. 이 경우 타기금의 여유재원에서 전입하는 방식에 비해 초기 조성금이 확연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초년도 기금의 보증발급 금액은 타기금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의 보증지원 규모대비 약 60% 수준인 990억원으로 가정하였다.

<표 5.13> 해외건설 수주 규모에 따른 필요 보증금액 및 수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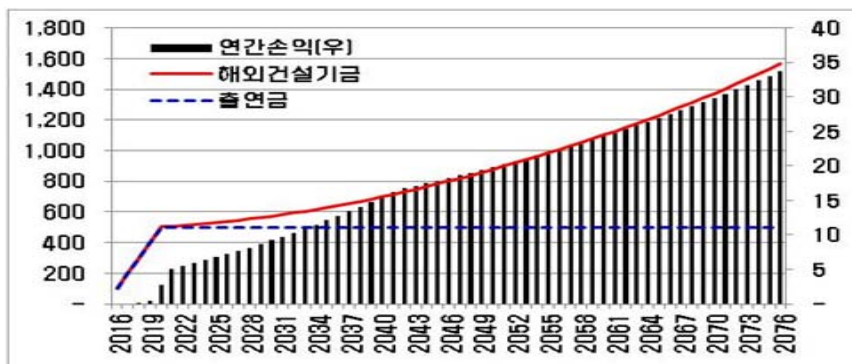
필요금액	중소비중 / 요율	해외건설 수주 금액		
		500억 달러	750억 달러	1,000억 달러
달러	5%	0.9억 달러	1.4억 달러	1.8억 달러
원화	5%	990억원	1,540억원	1,980억원
수수료	2%	19.8억원	30.8억원	39.6억원
출연금	0.75%	25억원	37.5억원	50억원
계산방식	수주금액 × 중소비중 × 담당비율 × 보증비율			
	(12%) (30%)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의 2% (보증보험 1%, 사업성평가 0.1% 포함)			
	출연금(기업) : 공사금액의 0.5%			

* 담당비율은 중소기업의 수주금액 중 기금에서 보증발급해주는 비율을 의미, 보증비율은 P-bond 15%, AP-bond 15%로 가정, 원/달러 환율은 1,100원 가정

보증사업 시작 이후 발생하는 신규조성금액은 보증수수료와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보증발급을 받은 기업의 출연금이다.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매칭방식의 추가출연은 제외했다. 이를 토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향후 60년 동안의 해외건설의 예상 설정규모를 추정하였으나, 사업비 등 고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의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초기 대손충당금은 기금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임의로 조정하였다.

<그림 5.5> 정부출연 해외건설기금의 예상 규모 추정

(단위 : 억원)



연간 해외건설 수주를 500억 달러로 가정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5%로 가정했을 때, 필요 보증금액은 1,650억원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성되는 기금 규모의 차이로 인해 필요금액의 60%만 동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으로 해외건설기금의 연간손익과 기금의 규모, 출연금을 추정해 보면 위의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국가의 출연은 매년 100억씩 5회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국가의 출연 혹은 출자는 증여이기 때문에 이자 및 원금상환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의 출연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기금 설립시 정관에 국가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동일하게 2%로 가정하고, 이 중 1%는 본드 콜(Bond Call) 발생시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0.1%는 사업성평가 수수료로 지급해 0.9%만 기금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구체적인 가정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5.14> 해외건설기금의 연간 예상 규모 추정을 위한 가정

항목	가정	근거
기금조성 및 상황	매년 100억씩 5회 전입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정부의 출연 및 출자는 증여의 개념으로 상환의 고려대상 아님. 그러나 향후 기금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일시 상환 가능
이자상환	고려하지 않음	수익사업 아님
출연금	수주금액의 0.5%(기업)	초기 재원조성이 정부 출연금이기 때문에 매칭방식의 추가출연은 고려하지 않음
수수료	총 보증수수료 2% 중 1%는 보증보험 가입 (추후 타기금 전입금에 대한 원리금이 전부 상환될 경우 인하 가능) 0.1%는 사업성평가 수수료	중소·중견기업 평균 P-bond 와 AP-bond 의 평균합산보증수수료 (2.45%) 대비 약 20%할인

사업비	20억과 보증수수료 + 기금운용수익의 70% 중 큰 금액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Due Diligence, 간접비 등
연간손익	수수료 +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 - 사업비	
보증규모	최초 1,000억원에서 매년 2%씩 증가 가정	타기금 전입 대비 약 60% 수준

다. 해외건설기여금으로 조성

정부부처간 협의 및 법 개정이라는 선제적인 해결과제가 있지만, 해외건설기여금을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정부의 지원없이 하고 기여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가정해 보았다. 앞서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간 700억 달러를 수주했을 때, 필요보증금액은 수주액 중 30% 수준이다. 국내금융기관의 발급비중은 48%를 유지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이행성보증서의 금액은 약 101억 달러이다.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1~2bp의 해외건설기여금을 부과한다면, 해외건설기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년 약 12.1억원에서 24.2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5.15> 해외건설기여금을 통한 자원 조달 가능 금액 추산

수주액	700억 달러
필요보증 비율	× 30%
필요보증 금액	= 210억 달러
국내금융기관의 이행성보증서 발급비중	× 48%
국내금융기관의 이행성보증서 발급금액	= 100.8억 달러
기여금 부담률	× 0.01% ~ 0.02%
기여금	= 1,008천 달러 ~ 2,016천 달러
환율(1200원 가정)	× 1,200
기여금(원화환산)	= 12.1억원 ~ 24.2억원

해외건설기여금을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가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른 재원조달방법 없이 해외건설기여금만으로 해외건설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이나 정부의 출연 등 다른 재원조성방법을 통해 초기재원을 마련하고 기여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5.3 해외건설기금 관리 및 운영 방안

5.3.1 해외건설기금의 관리 및 운영 주체

해외건설기금이 설립되면 보증발급업무 이외에도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여유재원운용, 진행상황 점검, 리스크관리 등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해외건설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고,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해외건설협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보증발급 등 실제운영은 무역보험공사 등 기존 해외건설 이행성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중견 해외건설업자를 위한 이행성보증서 발급’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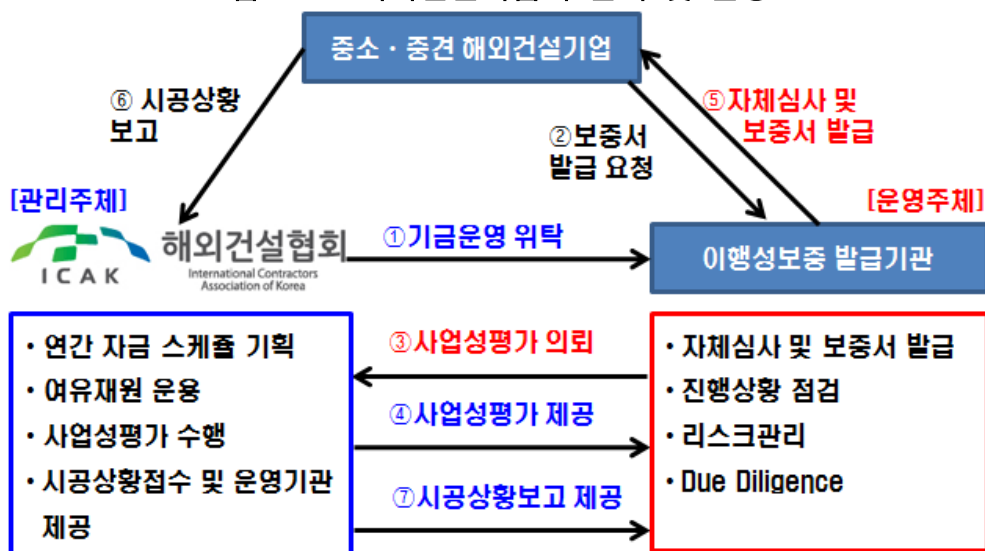
기금의 관리업무는 사업성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상황 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략적인 공사진행상황을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해외건설협회를 활용하고, 보증서발급 등의 운영업무는 기존 이행정보증 발급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따른 신규 조직을 구성할 필요 없이, 기존 조직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연간자금 스케줄을 계획하고, 여유재원을 운용하며, 사업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보증서 발급 이후에는 기업으로부터 보고받는 시공상황을 위탁운영기관에 제공하여 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위탁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와 자체심사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 회사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는 시공상황보고를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전달받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실사 등의 Due Diligence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그림 5.6> 해외건설기금의 관리 및 운영



5.3.2 해외건설기금 리스크 관리 방안

해외건설기금이 중소기업의 해외수주 증가에 오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행정보증의 특성상 한 건의 대형공사에서 본드콜이 발생할 경우 자칫 기금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건설기업은 수주상황, 계약체결, 시공상황, 공사내용변경 및 준공에 대해서 국토부(해외건설협회 위탁)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금의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보증기관, 보증금액, 수수료율, 보증조건 등 이행성 보증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 이행성 보증 지원 사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증발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최대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5년 평균 손실률이 4.6%인데, 해외건설기금의 최대 손실한도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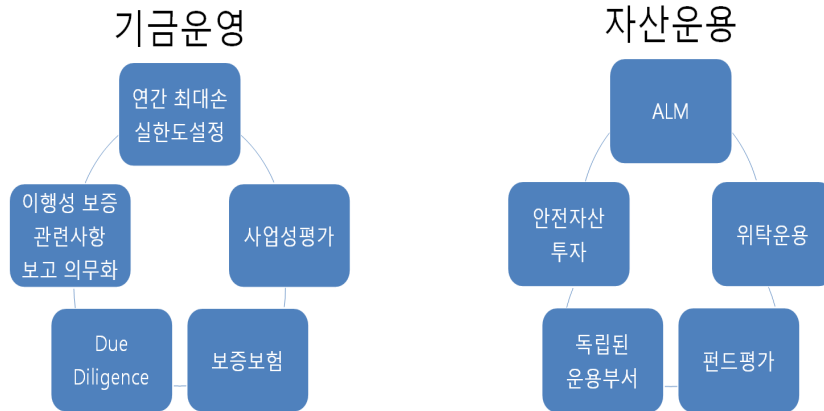
아울러 기금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약정한 기업에 한해 사업성평가를 거쳐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발급한 보증서는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

또한 보증지원 이후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건설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공사상황 및 프로젝트의 재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기금의 자산은 독립된 운용부서에서 적절한 ALM⁴⁷⁾을 통해 집합

투자업자에게 위탁운용하고 필요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활용하여 리스크관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5.7> 해외건설기금의 리스크관리 방안



5.4 해외건설기금의 기대효과 및 관련 법규 정비 방안

5.4.1 해외건설기금 기대효과

해외건설기금은 해외건설 수주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중견건설사에게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행성 보증 발급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용도 및 담보능력 그리고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사에게는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해외

47) Asset Liability Management,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조절 등을 통해 합리적인 리스크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건설 수주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해외건설기금의 규모별로 증가할 수 있는 해외건설 수주금액을 계산해봤다.

<표 5.16> 해외건설기금을 통한 수주금액 증가 예상

기금규모	연간보증발급 가능금액	연간추가수주 가능금액	
		원화	달러
2,000억원	3,960억원	1.3조원	12억 달러
3,000억원	5,940억원	2.0조원	18억 달러
4,000억원	7,920억원	2.6조원	24억 달러
5,000억원	9,900억원	3.3조원	30억 달러
6,000억원	11,880억원	4.0조원	36억 달러
7,000억원	13,860억원	4.6조원	42억 달러
8,000억원	15,840억원	5.3조원	48억 달러

* 보증배수는 10배 적용. 단 발급 가능금액은 공사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조성기금의 20%만을 연간 보증발급에 사용. P-bond와 AP-bond만을 대상으로 각각 15%로 계산. 수주가능금액은 보증발급 가능금액에서 역산해서 산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적용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에서 수행하지 않는 Due Diligence 등의 리스크관리를 통해 손실비율을 관리하여 해외건설이 위험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가 될 수 있다.

5.4.2 해외건설기금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검토 및 제·개정안 제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전부개정으로 구 해외건설촉진법(법률 제3316호)에 도입되었으나, 해외건설진흥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상 공공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법률 제5901호, 1999.2.8., 일부개정으로 폐지되었다⁴⁸⁾.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 등 금융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기금들의 근거 법령, 규정 및 기금의 운용 실태를 보았을 때 기존 기금의 재원을 활용한 해외건설업 지원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구 해외건설촉진법에 해외건설진흥기금을 규정했던 것과 유사하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해외건설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해외건설진흥기금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해외건설기금 도입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48) 구 해외건설촉진법(법률 제5815호) 상 해외건설진흥기금 관련 규정{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하였다.

해외건설촉진법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기금

제20조(해외건설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해외건설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해외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해외건설협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며, 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기금운영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1(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0조의2(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4. 정부의 출연금
5. 해외건설업자의 출연금
6. 보증발급으로 생기는 수입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기금의 육성 및 해외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20조의4(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제20조의5(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해외건설업자가 발주처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차액보증금
4. 지급보증금
5. 하자보수보증금

②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해외건설공사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외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금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6(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20조의5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외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해외건설업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해당 발주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7(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해외건설업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해외건설업자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해외건설업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20조의8(통지의무)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의9(보증채무의 이행) ① 발주자는 보증을 받은 해외건설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0(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

을 때에는 해당 해외건설업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20조의11(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0조의12(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해외건설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외건설업자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기금

제26조의3(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외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기금의 운용) 법 제2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외건설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6조의5(해외건설업자의 출연)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가 부담할 출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 또는 법인세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해외건설업자의 수주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기금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금액

제26조의6(보증의 한도) ①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제26조의7(보증료) ①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해외건설업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건설업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8(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20조의9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해외건설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해외건설업자가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 [*]

제26조의9(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20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

2. 발주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제26조의10(손해금) 법 제20조의10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6장 맺음말

최근 해외건설은 업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방향도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는 ‘질적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해외건설 관련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제3차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및 진출 지역·분야 다변화 집중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정책으로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기능강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 보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지원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사업성 평가 중심의 심사방식 전환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여러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보증을 발급하는 공동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프로젝트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방식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발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공동보증제 시행 후 중소·중견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주요 건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면, 신용평가보다 사업성 평가결과 우선 적용, 협약기관 대표체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전권 행사, 협약기관 중 일부가 공동보증 거부 시 타 기관이 거부기관의 보증지분을 인수하는 추가보증제 시행, 절차 및 준비서류 간소화 등이다. 공동보증제의 심사체계 및 기준을 개선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입찰부터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해외공사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서 발급 시 중소·중견기업들은 직보증의 어려움으로 복보증, 복복보증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보증을 발급받게 되고, 보증발급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작게는 과도한 보증수수료, 크게는 수주 실패로 초래되는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듯이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수주 애로사항인 보증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주불균형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증발급을 거절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의 보증 대지급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기업의 재무신용도에 근거하여 보증한도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예금이나 부보기관 보증서 등의 담보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등을 요구하나 중소·중견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시중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신용도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성이 우량한 프로젝트의 보증을 요청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사업수행역량만을 근거로 보증발급을 해줄 수 있으려면 신용보강 기능을 담당하는 자금원으로서 해외건설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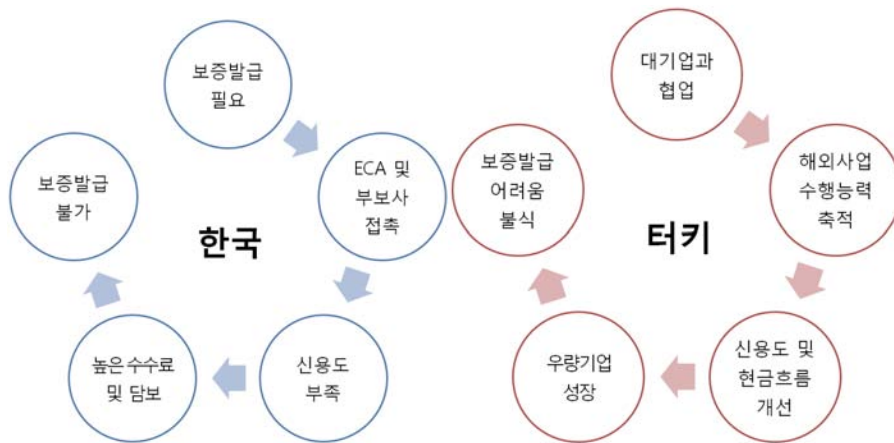
정부 및 ECA 출연, 타기금 전입,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기업출연 등을 통해 조성 가능한 해외건설기금은 이행성 보증 발급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가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보증전액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해외건설의 질적 성장은 일부 기업군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으

로 유지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을 든든히 지지해줄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으므로 대기업은 단기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제3국 기업에게 하도급을 주기보다는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공동수주인 경우 보증수수료를 인하해주거나, EDCF 수원국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선택 시 수원국에게 차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 업체 선정을 유도하는 등의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터키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중소·중견기업의 보증 발급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는 반면, 보증 발급을 담당하는 터키 민영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리스크가 높은 국가의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증 발급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 터키는 지원 정책도 없이 Engineering News Record(ENR)에서 뽑은 상위 250대 기업 내에 자국 건설기업 43개사(한국 12개사)를 진입시킬 수 있었을까?

터키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 역량을 넘어서는 해외사업은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았으며,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대기업들의 하도급 공사를 도맡아하면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현금흐름을 개선하며 신용도를 높이고 있었다. 터키 대기업들도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이 내실을 다지면서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해외사업 진출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6.1> 한국과 터키의 보증 발급 순환 구조



위 그림은 한국과 터키 중소·중견기업의 보증 발급을 구조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보증 발급을 필요로 하여 ECA, 시중은행 및 부보기관을 접촉하면 신용도 부족의 이유로 높은 수수료와 담보를 요구받는다. 결국 수수료와 담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보증 발급 불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반면, 터키는 대기업 하도급 공사 참여를 통해 수행능력을 쌓고 기업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터키의 사례와 같이 우리 대기업들이 산업적 약자인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수주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보증제, 해외건설기금 조성 등과 같은 방안들이 물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신용도 향상을 통한 보증 발급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보증제와 해외건설기금의 성공적인 운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제로 활용되는 사업성평가의 공신력과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업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주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데 단기간에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성 평가의 특성상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여력이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사업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 또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이행성 보증서 발급 시 사업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K-sure나 건설공제조합 등 부보기관의 보증 커머 비율을 100% 이상 요구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은 자체 신용으로 지원하는 등의 업무관행이 정책되어야 한다. 100% 이상 담보를 확보한 경우에도 과도한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보증발급 수수료로 인한 이익만을 취하기보다는 해외건설 보증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향후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ODA 및 MDB 재원사업 위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서 제3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원도급으로 ODA 및 MDB사업에 참여 시 도중에 타절이나 파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했을 시에는 발주처, 원도급사 혹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도중에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일반 해외 발주처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ODA나 MDB사업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며,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출국에 대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보증발급 기관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1]

중소기업 해외수주 공종별 현황

(단위: 천 달러)

공종	2011	2012	2013	2014	2015.6	누계
토목	2,162	846	754	988	300	5,065
	44.9%	24.9%	21.0%	32.8%	17.6%	30.5%
건축	718	733	559	370	293	2,673
	14.9%	21.6%	15.6%	12.3%	17.3%	16.2%
산업 설비	1,172	949	1,509	890	512	5,032
	24.3%	27.9%	42.1%	29.5%	39.2%	31.4%
전기	643	450	545	545	296	2,479
	13.3%	13.2%	15.2%	18.1%	20.1%	15.3%
통신	32	42	8	53	9	144
	0.7%	1.2%	0.2%	1.8%	0.5%	0.9%
용역	91	378	212	170	80	929
	1.9%	11.1%	5.9%	5.6%	5.2%	5.7%
합계	4,818	3,398	3,587	3,016	1,489	16,3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이하 동일

중소기업 해외수주 지역별 현황

(단위: 천 달러)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6	누계
중동	3,118	1,706	1,829	1,385	748	8,786
	64.7%	50.2%	51.0%	45.9%	50.3%	53.9%
아시아	1,357	1,202	1,015	1,107	441	5,121
	28.2%	35.4%	28.3%	36.7%	29.7%	31.4%
태평양 북미	89	39	70	46	15	260
	1.8%	1.1%	2.0%	1.5%	1.0%	1.6%
유럽	20	94	30	84	4	232
	0.4%	2.8%	0.8%	2.8%	0.3%	1.4%
아프리카	120	293	223	131	117	884
	2.5%	8.6%	6.2%	4.3%	7.9%	5.4%
중남미	115	63	420	265	164	1,205
	2.4%	1.9%	11.7%	8.8%	10.8%	6.3%
합계	4,818	3,398	3,587	3,016	1,489	16,3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공종별 수주현황

(단위: 천 달러)

공종	2012	2013	2014	2015.6	누계
토목	127,662	102,957	243,862	53,796	528,277
	15.4%	16.2%	43.8%	21.2%	23.2%
건축	315,517	243,467	96,114	72,241	727,339
	38.1%	38.3%	17.3%	28.5%	32.0%
산업설비	-13,519	48,012	55,057	48,752	138,302
	-1.6%	7.6%	9.9%	19.2%	6.1%
전기	76,044	43,623	38,314	18,502	176,483
	9.2%	6.9%	6.9%	7.3%	7.8%
통신	24,388	5,425	19,541	84	49,438
	2.9%	0.9%	3.5%	0.0%	2.2%
용역	297,685	191,836	103,558	60,433	653,512
	36.0%	30.2%	18.6%	23.8%	28.7%
합계	827,777	635,320	556,446	253,808	2,273,351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천 달러)

지역	2012	2013	2014	2015.6	누계
중동	-66,268	179,789	61,659	62,022	237,202
	-8.0%	28.3%	11.1%	24.4%	10.4%
아시아	679,853	308,639	401,877	123,098	1,513,467
	82.1%	48.6%	72.2%	48.5%	66.6%
태평양 북미	3,849	26,032	5,873	1,146	36,900
	0.5%	4.1%	1.1%	0.5%	1.6%
유럽	63,766	29,690	29,304	-8,189	114,571
	7.7%	4.7%	5.3%	-3.2%	5.0%
아프리카	125,018	66,193	51,173	62,118	304,502
	15.1%	10.4%	9.2%	24.5%	13.4%
중남미	21,559	24,977	6,560	13,613	66,709
	2.6%	3.9%	1.2%	5.4%	2.9%
합계	827,777	635,320	556,446	253,808	2,273,351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견기업 원도급 기준 공종별 수주현황

(단위: 천 달러)

공종	2012	2013	2014	2015.6	누계
토목	472	437	195	148	1,252
	43.8%	51.7%	26.6%	33.9%	40.5%
건축	415	241	403	212	1,271
	38.5%	28.5%	55.0%	48.5%	41.1%
산업설비	0	0	0	27	27
	0.0%	0.0%	0.0%	6.2%	0.9%
전기	-	-	-	-	-
	-%	-%	-%	-%	-%
통신	-	-	-	-	-
	-%	-%	-%	-%	-%
용역	191	167	135	50	543
	17.7%	19.8%	18.4%	11.4%	17.6%
합계	1,078	845	733	437	3,093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견기업 원도급기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천 달러)

지역	2012	2013	2014	2015.6	누계
중동	291	77	34	58	460
	27.0%	9.1%	4.6%	12.2%	14.7%
아시아	720	718	400	335	2,173
	66.7%	85.0%	54.6%	70.7%	69.4%
태평양 북미	0	6	1	0	8
	0.0%	0.7%	0.1%	0.0%	0.2%
유럽	6	1	4	0	11
	0.6%	0.1%	0.5%	0.0%	0.4%
아프리카	48	39	287	77	451
	4.4%	4.6%	39.2%	16.2%	14.4%
중남미	14	4	7	4	29
	1.3%	0.5%	1.0%	0.8%	0.9%
합계	1,079	845	733	474	3,131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공종별 수주현황

(단위: 천 달러)

공종	2012	2013	2014	2015.6	누계
토목	718,696	650,790	744,526	245,876	2,359,888
	28.0%	22.1%	30.2%	19.9%	25.6%
건축	417,019	315,351	274,365	218,618	1,225,353
	16.2%	10.7%	11.1%	17.7%	13.3%
산업설비	962,365	1,461,462	835,391	463,108	3,722,326
	37.5%	49.5%	33.9%	37.6%	40.4%
전기	373,964	501,305	507,085	277,260	1,659,614
	14.6%	17.0%	20.6%	22.5%	18.0%
통신	17,456	2,307	33,754	9,138	62,655
	0.7%	0.1%	1.4%	0.7%	0.7%
용역	80,112	19,947	66,345	19,112	185,516
	3.1%	0.7%	2.7%	1.5%	2.0%
합계	2,569,612	2,951,162	2,461,466	1,233,112	9,215,352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천 달러)

공종	2012	2013	2014	2015.6	누계
중동	1,772,296	1,649,487	1,323,105	685,634	5,430,522
	69.0	55.9	53.8	55.6	58.9
아시아	522,181	706,013	704,645	317,999	2,250,838
	20.3	23.9	28.6	25.8	24.4
태평양 북미	35,604	43,546	40,482	14,121	133,753
	1.4	1.5	1.6	1.1	1.5
유럽	30,269	124	54,944	12,638	97,975
	1.2	0.0	2.2	1.0	1.1
아프리카	168,096	156,949	80,113	54,920	460,078
	6.5	5.3	3.3	4.5	5.0
중남미	41,166	395,043	258,177	147,800	842,186
	1.6	13.4	10.5	12.0	9.1
합계	2,569,612	2,951,162	2,461,466	1,233,112	9,215,352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 원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계
총 건수	147	284	255	311	312	1,3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진행중	38	85	93	126	125	467
	25.9%	29.9%	36.5%	40.5%	40.1%	35.7%
준공	90	157	138	182	175	742
	61.2%	55.3%	54.1%	58.5%	56.1%	56.7%
미착공	0	2	0	3	2	7
	0.0%	0.7%	0.0%	1.0%	0.6%	0.5%
타절	15	38	23	0	6	82
	10.2%	13.4%	9.0%	0.0%	1.9%	6.3%
파기	4	2	1	0	4	11
	2.7%	0.7%	0.4%	0.0%	1.3%	0.8%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 공사 진행 상태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계
총 건수	318	276	297	354	332	1,5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진행중	122	95	138	231	278	864
	38.4	34.4	46.5	65.3	83.7	54.8
준공	139	136	126	102	45	548
	43.7	49.3	42.4	28.8	13.6	34.7
미착공	1	3	1	0	7	12
	0.3	1.1	0.3	0.0	2.1	0.8
타절	56	42	32	20	2	152
	17.6	15.2	10.8	5.6	0.6	9.6
파기	0	0	0	1	0	1
	0.0	0.0	0.0	0.3	0.0	0.1

[참고자료2]

국내 기금의 종류

가. 고용보험기금

설치근거 법률	고용보험법 제78조 내지 제86조		
설치년도	1995년	운용개시년도	1995년
설치목적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재원조달방식	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근거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설치년도	1993년	운용개시년도	1994년
설치목적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재정차관자금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계정·용자계정·차관계정을 구분		
재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내지 5조(기금의 재원) 1. 예수금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다른 계정 등으로 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예탁금 원리금 수입 5. 채권 등 유가증권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 8. 용자금 원리금수입 9. 재정차관 자금 등 		

다. 공무원연금기금

설치근거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설치년도	1960년	운용개시년도	1960년

설치목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재원조달방식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라.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근거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설치년도	1992년	운용개시년도	1992년
설치목적	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대한 효율적 지원		
재원조달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근거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설치년도	1972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설치목적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재원조달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2. 카지노부담금 3. 출국납부금 4. 융자 이자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바. 국민연금기금

설치근거 법률	국민연금법 제101조		
설치년도	1988년	운용개시년도	1988년
설치목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재원조달방식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

사. 국민주택기금

설치근거 법률	주택법 제60조 제1항		
설치년도	1981년	운용개시년도	1981년
설치목적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재원조달방식	○ 자체재원 :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 정부내부지출 : 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아. 국제교류기금

설치근거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설치년도	1991년	운용개시년도	1992년
설치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재원조달방식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자. 군인연금기금

설치근거 법률	군인연금법 제37조		
설치년도	1960년	운용개시년도	1963년
설치목적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재원조달방식	책임준비금,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차.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근거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설치년도	1993년	운용개시년도	1994년
설치목적	근로복지증진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에 필요한 경비 확보		
재원조달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타기금 차입금 5.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7.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기금운용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카. 농지관리기금⁴⁹⁾

설치근거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설치년도	1981년	운용개시년도	1981년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p>○ 목적 :</p> <p>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p> <p>○ 주요사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은행사업(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지조성사업) 3. 해외농업개발사업 4. 농지재개발사업, 농지제도,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사업 등 		

49) 농지관리기금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 관련 지원 자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자세히 기재함.

재원조달방식	1. 정부출연금 2.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	--

타.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근거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설치년도	1986년	운용개시년도	1987년
설치목적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재원조달방식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라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근거 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		
설치년도	1974년	운용개시년도	1975년
설치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재원조달방식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하. 사학진흥기금

설치근거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설치년도	1989년	운용개시년도	1990년
설치목적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진흥을 도모		
재원조달방식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거.원자력연구개발기금

설치근거 법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		
설치년도	1986년	운용개시년도	1997년
설치목적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재원조달방식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너. 기술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 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설치년도	1989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
설치목적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재원조달방식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 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설치년도	1994년	운용개시년도	1995년
설치목적	SOC시설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재원조달방식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러. 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목적)		
설치년도	1976년	운용개시년도	1976년
설치목적	1.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위한 각종 채무보증 2.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 3.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재원조달방식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참고자료3]

주요 기금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⁵⁰⁾

가. 고용보험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8,873,219	8,873,219	10,690,737	1,817,518	20.5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회수	60,752	60,752	77,307	16,555	27.3
	- 재산수입	90,927	90,927	280,353	189,426	208.3
	- 기타	8,721,540	8,721,540	10,333,077	1,611,537	18.5
	○ 정부내부수입	70,718	70,718	70,718	-	-
	- 기금회계간	70,718	70,718	70,718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2,282,161	2,282,161	2,336,465	54,304	2.4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2,282,161	2,282,161	2,336,465	54,304	2.4
	- 기타	-	-	-	-	-
합 계		11,226,098	11,226,098	13,097,920	1,871,822	16.7
지 출	○ 사업비	7,663,105	8,561,070	9,173,609	1,510,504	19.7
	- 경상사업비	7,607,835	8,505,800	9,060,510	1,452,675	19.1
	- 용자사업비	55,270	55,270	113,099	57,829	104.6
	○ 기금운영비	102,311	102,311	102,087	△224	△0.2
	- 인건비	37,082	37,082	38,559	1,477	4.0
	- 기타운영비	65,229	65,229	63,528	△1,701	△2.6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3,460,682	2,562,717	3,822,224	361,542	10.4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3,460,682	2,562,717	3,822,224	361,542	10.4

50) 정부발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참고자료 내용 참조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490,503	1,490,503	942,629	△547,874	△36.8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회수	1,130,983	1,130,983	653,860	△477,123	△42.2
	- 재산수입	355,500	355,500	288,547	△66,953	△18.8
	- 기타	4,020	4,020	222	△3,798	△94.5
	○ 정부내부수입	52,057,491	52,133,528	90,568,737	38,511,246	74.0
	- 기금회계간	13,649,712	13,719,988	19,679,036	6,029,324	44.2
	- 기금간	36,447,682	36,453,443	67,567,622	31,119,940	85.4
	- 계정간	1,960,097	1,960,097	3,322,079	1,361,982	69.5
	○ 보전수입	102,758,749	112,018,301	110,449,864	7,691,115	7.5
	- 차입금	102,683,272	111,942,824	110,407,697	7,724,425	7.5
	- 여유자금회수	75,477	75,477	42,167	△33,310	△44.1
	- 기타	-	-	-	-	-
합 계		156,306,743	165,642,332	201,961,230	45,654,487	29.2
지 출	○ 사업비	3,404,896	3,404,896	3,005,409	△399,487	△11.7
	- 경상사업비	3,347,757	3,347,757	2,987,719	△360,038	△10.8
	- 용자사업비	57,139	57,139	17,690	△39,449	△69.0
	○ 기금운영비	69	69	67	△2	△2.9
	- 인건비	-	-	-	-	-
	- 기타운영비	69	69	67	△2	△2.9
	○ 정부내부지출	74,278,111	83,533,704	114,093,622	39,815,511	53.6
	- 기금회계간	36,338,581	44,575,813	43,378,341	7,039,760	19.4
	- 기금간	35,979,433	36,997,794	67,393,202	31,413,769	87.3
	- 계정간	1,960,097	1,960,097	3,322,079	1,361,982	69.5
	○ 차입금이자상환	18,914,489	18,994,485	20,547,109	1,632,620	8.6
	○ 보전지출	59,709,178	59,709,178	64,315,023	4,605,845	7.7
	- 차입금원금상환	59,667,011	59,667,011	64,275,351	4,608,340	7.7
	- 여유자금 운용	42,167	42,167	39,672	△2,495	△5.9

다. 공무원연금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3,315,699	13,315,699	14,226,445	910,746	6.8
	- (법정)부담금	-	-	-	-	-
	- 융자원금회수	1,474,262	1,474,262	1,425,785	△48,477	△3.3
	- 재산수입	409,056	409,056	952,851	543,795	132.9
	- 기타	11,432,381	11,432,381	11,847,809	415,428	3.6
	○ 정부내부수입	3,521,442	3,521,442	3,476,340	△45,102	△1.3
	- 기금회계간	3,510,606	3,510,606	3,476,275	△34,331	△1.0
	- 기금간	10,836	10,836	65	△10,771	△99.4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3,035,789	3,035,789	2,916,190	△119,599	△3.9
	- 차입금	20,548	20,548	15,081	△5,467	△26.6
	- 여유자금회수	3,015,241	3,015,241	2,901,109	△114,132	△3.8
	- 기타	-	-	-	-	-
합 계		19,872,930	19,872,930	20,618,975	746,045	3.8
지 출	○ 사업비	15,321,973	15,321,973	16,158,530	836,557	5.5
	- 경상사업비	14,023,398	14,023,398	14,944,721	921,323	6.6
	- 융자사업비	1,298,575	1,298,575	1,213,809	△84,766	△6.5
	○ 기금운영비	79,424	79,424	82,394	2,970	3.7
	- 인건비	42,633	42,633	43,912	1,279	3.0
	- 기타운영비	36,791	36,791	38,482	1,691	4.6
	○ 정부내부지출	10,000	10,000	-	△10,000	△100.0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0,000	10,000	-	△10,000	△100.0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18,956	18,956	14,689	△4,267	△22.5
	○ 보전지출	4,442,577	4,442,577	4,363,362	△79,215	△1.8
	- 차입금원금상환	42,622	42,622	175,814	133,192	312.5
	- 여유자금 운용	4,399,955	4,399,955	4,187,548	△212,407	△4.8

라. 과학기술진흥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5,009	15,009	14,867	△142	△0.9
	- (법정)부담금	-	-	-	-	-
	- 융자원금회수	4,150	4,150	4,150	-	-
	- 재산수입	6,252	6,252	5,906	△346	△5.5
	- 기타	4,607	4,607	4,811	204	4.4
	○ 정부내부수입	220,781	220,781	115,662	△105,119	△47.6
	- 기금회계간	107,295	107,295	-	△107,295	△100.0
	- 기금간	113,486	113,486	115,662	2,176	1.9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5,048	5,048	21,080	16,032	317.6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5,048	5,048	21,080	16,032	317.6
	- 기타	-	-	-	-	-
합 계		240,838	240,838	151,609	△89,229	△37.0
지 출	○ 사 업 비	77,142	77,142	60,072	△17,070	△22.1
	- 경상사업비	77,142	77,142	60,072	△17,070	△22.1
	- 융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876	876	893	17	1.9
	- 인건비	-	-	-	-	-
	- 기타운영비	876	876	893	17	1.9
	○ 정부내부지출	146,652	146,652	83,524	△63,128	△43.0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46,652	146,652	83,524	△63,128	△43.0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6,168	16,168	7,120	△9,048	△56.0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6,168	16,168	7,120	△9,048	△56.0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849,546	849,546	914,951	65,405	7.7
	- (법정)부담금	510,248	510,248	548,501	38,253	7.5
	- 융자원금회수	281,332	281,332	314,893	33,561	11.9
	- 재산수입	40,115	40,115	30,223	△9,892	△24.7
	- 기타	17,851	17,851	21,334	3,483	19.5
	○ 정부내부수입	40,465	298,826	220,000	179,535	443.7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40,465	298,826	220,000	179,535	443.7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37,485	37,485	142,100	104,615	279.1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37,485	37,485	142,100	104,615	279.1
	- 기타	-	-	-	-	-
	합 계	927,496	1,185,857	1,277,051	349,555	37.7
지 출	○ 사업비	907,430	1,179,407	974,563	67,133	7.4
	- 경상사업비	457,430	499,407	424,563	△32,867	△7.2
	- 융자사업비	450,000	680,000	550,000	100,000	22.2
	○ 기금운영비	514	514	464	△50	△9.7
	- 인건비	-	-	-	-	-
	- 기타운영비	514	514	464	△50	△9.7
	○ 정부내부지출	-	2,261	59,669	59,669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2,261	59,669	59,669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9,552	3,675	242,355	222,803	1,139.5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9,552	3,675	242,355	222,803	1,139.5

바. 국민연금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54,396,465	54,396,465	56,659,663	2,263,198	4.2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회수	22,370	22,370	28,233	5,863	26.2
	- 재산수입	15,787,461	15,787,461	15,400,944	△386,517	△2.4
	- 기타	38,586,634	38,586,634	41,230,486	2,643,852	6.9
	○ 정부내부수입	10,033	10,033	10,045	12	0.1
	- 기금회계간	10,033	10,033	10,045	12	0.1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42,885,053	42,885,053	47,892,165	5,007,112	11.7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42,885,053	42,885,053	47,892,165	5,007,112	11.7
	- 기타	-	-	-	-	-
합 계		97,291,551	97,291,551	104,561,873	7,270,322	7.5
지 출	○ 사 업 비	16,864,466	16,866,777	18,771,210	1,906,744	11.3
	- 경상사업비	16,837,466	16,839,777	18,737,010	1,899,544	11.3
	- 용자사업비	27,000	27,000	34,200	7,200	26.7
	○ 기금운영비	413,026	413,026	479,848	66,822	16.2
	- 인건비	282,834	282,644	321,604	38,770	13.7
	- 기타운영비	130,192	130,382	158,244	28,052	21.5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80,014,059	80,011,748	85,310,815	5,296,756	6.6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80,014,059	80,011,748	85,310,815	5,296,756	6.6

사. 주택도시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Δ121,745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6,048,806	16,048,806	16,357,183	308,377	1.9
	- (법정)부담금	900	900	22	Δ878	Δ97.6
	- 융자원금회수	12,914,800	12,914,800	13,100,700	185,900	1.4
	- 재산수입	3,078,106	3,078,106	3,199,461	121,355	3.9
	- 기타	55,000	55,000	57,000	2,000	3.6
	○ 정부내부수입	1,407,573	1,407,573	3,613,570	2,205,997	156.7
	- 기금회계간	709,012	709,012	587,267	Δ121,745	Δ17.2
	- 기금간	698,561	698,561	2,986,203	2,287,642	327.5
	- 계정간	-	-	40,100	40,100	-
	○ 보전수입	35,687,968	35,687,968	42,426,062	6,738,094	18.9
	- 차입금	10,500,000	10,500,000	15,000,000	4,500,000	42.9
	- 여유자금회수	9,753,568	9,753,568	10,578,762	825,194	8.5
	- 기타	15,434,400	15,434,400	16,847,300	1,412,900	9.2
합 계		53,144,347	53,144,347	62,396,815	9,252,468	17.4
지 출	○ 사업비	16,115,801	18,748,101	16,846,193	730,392	4.5
	- 경상사업비	2,285,594	2,871,794	3,454,072	1,168,478	51.1
	- 융자사업비	13,830,207	15,876,307	13,392,121	Δ438,086	Δ3.2
	○ 기금운영비	501	501	730	229	45.7
	- 인건비	-	-	-	-	-
	- 기타운영비	501	501	730	229	45.7
	○ 정부내부지출	5,270,203	5,270,203	6,225,647	955,444	18.1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5,270,203	5,270,203	6,185,547	915,344	17.4
	- 계정간	-	-	40,100	40,100	-
	○ 차입금이자상환	2,057,542	2,057,542	2,312,248	254,706	12.4
	○ 보전지출	29,700,300	27,068,000	37,011,997	7,311,697	24.6
	- 차입금원금상환	19,404,100	19,404,100	22,473,015	3,068,915	15.8
	- 여유자금 운용	10,296,200	7,663,900	14,538,982	4,242,782	41.2

아. 국제교류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48,322	48,322	51,171	2,849	5.9
	- (법정)부담금	39,407	39,407	44,800	5,393	13.7
	- 용자원금회수	-	-	-	-	-
	- 재산수입	3,276	3,276	500	△2,776	△84.7
	- 기타	5,639	5,639	5,871	232	4.1
	○ 정부내부수입	1,028	1,028	30,975	29,947	2,913.1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028	1,028	30,975	29,947	2,913.1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21,426	21,426	27,606	6,180	28.8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21,426	21,426	27,606	6,180	28.8
	- 기타	-	-	-	-	-
	합 계	70,776	70,776	109,752	38,976	55.1
지 출	○ 사업비	37,169	37,169	36,625	△544	△1.5
	- 경상사업비	37,169	37,169	36,625	△544	△1.5
	- 용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11,690	11,690	12,042	352	3.0
	- 인건비	7,478	7,478	7,703	225	3.0
	- 기타운영비	4,212	4,212	4,339	127	3.0
	○ 정부내부지출	10,000	10,000	30,000	20,000	200.0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0,000	10,000	30,000	20,000	200.0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1,917	11,917	31,085	19,168	160.8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1,917	11,917	31,085	19,168	160.8

자. 군인연금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539,963	539,963	587,372	47,409	8.8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회수	-	-	-	-	-
	- 재산수입	13,929	13,929	13,971	42	0.3
	- 기타	526,034	526,034	573,401	47,367	9.0
	○ 정부내부수입	2,332,718	2,332,718	2,399,310	66,592	2.9
	- 기금회계간	2,332,718	2,332,718	2,399,310	66,592	2.9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100,000	100,000	100,000	-	-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100,000	100,000	100,000	-	-
	- 기타	-	-	-	-	-
합 계		2,972,681	2,972,681	3,086,682	114,001	3.8
지 출	○ 사업비	2,858,210	2,858,210	2,986,145	127,935	4.5
	- 경상사업비	2,858,210	2,858,210	2,986,145	127,935	4.5
	- 용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542	542	537	△5	△0.9
	- 인건비	-	-	-	-	-
	- 기타운영비	542	542	537	△5	△0.9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13,929	113,929	100,000	△13,929	△12.2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13,929	113,929	100,000	△13,929	△12.2

차. 근로복지진흥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10,178	110,178	142,507	32,329	29.3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회수	86,456	86,456	115,490	29,034	33.6
	- 재산수입	10,008	10,008	10,670	662	6.6
	- 기타	13,714	13,714	16,347	2,633	19.2
	○ 정부내부수입	39,877	39,877	41,993	2,116	5.3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33,370	33,370	34,007	637	1.9
	- 계정간	6,507	6,507	7,986	1,479	22.7
	○ 보전수입	165,941	165,941	174,392	8,451	5.1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165,941	165,941	174,392	8,451	5.1
	- 기타	-	-	-	-	-
	합 계	315,996	315,996	358,892	42,896	13.6
지 출	○ 사업비	133,795	157,733	137,296	3,501	2.6
	- 경상사업비	33,427	33,365	37,296	3,869	11.6
	- 용자사업비	100,368	124,368	100,000	△368	△0.4
	○ 기금운영비	12,235	12,235	12,439	204	1.7
	- 인건비	8,824	8,824	9,248	424	4.8
	- 기타운영비	3,411	3,411	3,191	△220	△6.4
	○ 정부내부지출	6,507	6,507	7,986	1,479	22.7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6,507	6,507	7,986	1,479	22.7
	○ 차입금이자상환	13	13	11	△2	△15.4
	○ 보전지출	163,446	139,508	201,160	37,714	23.1
	- 차입금원금상환	62	62	68	6	9.7
	- 여유자금 운용	163,384	139,446	201,092	37,708	23.1

카. 기술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048,370	1,048,370	1,077,860	29,490	2.8
	- (법정)부담금	488,000	488,000	490,700	2,700	0.6
	- 용자원금회수	-	-	-	-	-
	- 재산수입	52,128	52,128	37,145	△14,983	△28.7
	- 기타	508,242	508,242	550,015	41,773	8.2
	○ 정부내부수입	5,437	45,437	55,507	50,070	920.9
	- 기금회계간	-	40,000	-	-	-
	- 기금간	5,437	5,437	55,507	50,070	920.9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1,445,960	1,445,960	1,335,675	△110,285	△7.6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1,445,960	1,445,960	1,335,675	△110,285	△7.6
	- 기타	-	-	-	-	-
합 계		2,499,767	2,539,767	2,469,042	△30,725	△1.2
지 출	○ 사업비	1,103,122	1,109,122	1,114,434	11,312	1.0
	- 경상사업비	1,103,122	1,109,122	1,114,434	11,312	1.0
	- 용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158,666	158,666	162,866	4,200	2.6
	- 인건비	108,427	108,427	113,438	5,011	4.6
	- 기타운영비	50,239	50,239	49,428	△811	△1.6
	○ 정부내부지출	-	-	50,000	50,000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50,000	50,000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237,979	1,271,979	1,141,742	△96,237	△7.8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237,979	1,271,979	1,141,742	△96,237	△7.8

타. 농지관리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107,213	1,107,213	1,020,696	△86,517	△7.8
	- (법정)부담금	658,617	658,617	562,157	△96,460	△14.6
	- 용자원금회수	280,800	280,800	290,828	10,028	3.6
	- 재산수입	105,048	105,048	110,280	5,232	5.0
	- 기타	62,748	62,748	57,431	△5,317	△8.5
	○ 정부내부수입	48,941	48,941	653,123	604,182	1,234.5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48,941	48,941	653,123	604,182	1,234.5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186,217	186,217	101,499	△84,718	△45.5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186,217	186,217	101,499	△84,718	△45.5
	- 기타	-	-	-	-	-
합 계		1,342,371	1,342,371	1,775,318	432,947	32.3
지 출	○ 사업비	1,012,438	1,012,438	926,513	△85,925	△8.5
	- 경상사업비	366,459	366,459	287,605	△78,854	△21.5
	- 용자사업비	645,979	645,979	638,908	△7,071	△1.1
	○ 기금운영비	64,341	64,341	66,515	2,174	3.4
	- 인건비	938	938	966	28	3.0
	- 기타운영비	63,403	63,403	65,549	2,146	3.4
	○ 정부내부지출	250,000	250,000	361,623	111,623	44.6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250,000	250,000	361,623	111,623	44.6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5,592	15,592	420,667	405,075	2,598.0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5,592	15,592	420,667	405,075	2,598.0

파. 대외경제협력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140,041	140,041	137,810	△2,231	△1.6
	- (법정)부담금	-	-	-	-	-
	- 융자금회수	86,374	86,374	91,580	5,206	6.0
	- 재산수입	53,598	53,598	45,867	△7,731	△14.4
	- 기타	69	69	363	294	426.1
	○ 정부내부수입	766,415	766,415	784,143	17,728	2.3
	- 기금회계간	766,415	766,415	784,143	17,728	2.3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17,135	17,135	41,381	24,246	141.5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17,135	17,135	41,381	24,246	141.5
	- 기타	-	-	-	-	-
합 계		923,591	923,591	963,334	39,743	4.3
지 출	○ 사 업 비	851,730	851,730	909,233	57,503	6.8
	- 경상사업비	13,730	13,730	15,581	1,851	13.5
	- 융자사업비	838,000	838,000	893,652	55,652	6.6
	○ 기금운영비	12,915	12,915	14,645	1,730	13.4
	- 인건비	9,859	9,859	11,283	1,424	14.4
	- 기타운영비	3,056	3,056	3,362	306	10.0
	○ 정부내부지출	17,565	17,565	17,238	△327	△1.9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7,565	17,565	17,238	△327	△1.9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41,381	41,381	22,218	△19,163	△46.3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41,381	41,381	22,218	△19,163	△46.3

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4,549,830	4,549,830	5,220,898	671,068	14.7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금회수	1,703,559	1,703,559	1,799,553	95,994	5.6
	- 재산수입	692,100	692,100	772,780	80,680	11.7
	- 기타	2,154,171	2,154,171	2,648,565	494,394	23.0
	○ 정부내부수입	655,239	655,239	793,444	138,205	21.1
	- 기금회계간	655,239	655,239	793,444	138,205	21.1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5,318,513	5,318,513	4,605,758	△712,755	△13.4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5,318,513	5,318,513	4,605,758	△712,755	△13.4
	- 기타	-	-	-	-	-
합 계		10,523,582	10,523,582	10,620,100	96,518	0.9
지 출	○ 사업비	4,021,125	4,028,010	4,144,509	123,384	3.1
	- 경상사업비	2,554,653	2,561,538	2,714,850	160,197	6.3
	- 용자사업비	1,466,472	1,466,472	1,429,659	△36,813	△2.5
	○ 기금운영비	83,294	83,294	69,310	△13,984	△16.8
	- 인건비	16,897	16,897	17,054	157	0.9
	- 기타운영비	66,397	66,397	52,256	△14,141	△21.3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6,419,163	6,412,278	6,406,281	△12,882	△0.2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6,419,163	6,412,278	6,406,281	△12,882	△0.2

거. 사학진흥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227,351	227,351	231,899	4,548	2.0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 회수	166,030	166,030	174,233	8,203	4.9
	- 재산수입	60,203	60,203	56,161	△4,042	△6.7
	- 기타	1,118	1,118	1,505	387	34.6
	○ 정부내부수입	142,242	142,242	126,232	△16,010	△11.3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42,242	142,242	126,232	△16,010	△11.3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119,993	119,993	51,630	△68,363	△57.0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 회수	119,993	119,993	51,630	△68,363	△57.0
	- 기타	-	-	-	-	-
합 계		489,586	489,586	409,761	△79,825	△16.3
지 출	○ 사 업 비	224,285	250,285	238,818	14,533	6.5
	- 경상사업비	1,185	1,185	719	△466	△39.3
	- 용자사업비	223,100	249,100	238,099	14,999	6.7
	○ 기금운영비	4,946	4,946	5,064	118	2.4
	- 인건비	3,158	3,158	3,412	254	8.0
	- 기타운영비	1,788	1,788	1,652	△136	△7.6
	○ 정부내부지출	140,625	140,625	139,485	△1,140	△0.8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140,625	140,625	139,485	△1,140	△0.8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119,730	93,730	26,394	△93,336	△78.0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119,730	93,730	26,394	△93,336	△78.0

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37,578	37,578	33,184	△4,394	△11.7
	- (법정)부담금	-	-	-	-	-
	- 용자원금회수	-	-	-	-	-
	- 재산수입	22,253	22,253	19,142	△3,111	△14.0
	- 기타	15,325	15,325	14,042	△1,283	△8.4
	○ 정부내부수입	18,000	18,000	18,000	-	-
	- 기금회계간	18,000	18,000	18,000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281,262	281,262	301,836	20,574	7.3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281,262	281,262	301,836	20,574	7.3
	- 기타	-	-	-	-	-
합 계		336,840	336,840	353,020	16,180	4.8
지 출	○ 사업비	18,056	18,056	20,113	2,057	11.4
	- 경상사업비	18,056	18,056	20,113	2,057	11.4
	- 용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10,578	10,578	9,469	△1,109	△10.5
	- 인건비	1,552	1,552	1,586	34	2.2
	- 기타운영비	9,026	9,026	7,883	△1,143	△12.7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308,206	308,206	323,438	15,232	4.9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308,206	308,206	323,438	15,232	4.9

더. 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2,249,371	2,249,371	2,111,681	△137,690	△6.1
	- (법정)부담금	835,700	835,700	856,500	20,800	2.5
	- 용자원금회수	-	-	-	-	-
	- 재산수입	157,097	157,097	108,510	△48,587	△30.9
	- 기타	1,256,574	1,256,574	1,146,671	△109,903	△8.7
	○ 정부내부수입	62,417	142,417	11,569	△50,848	△81.5
	- 기금회계간	50,000	130,000	-	△50,000	△100.0
	- 기금간	12,417	12,417	11,569	△848	△6.8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3,262,400	3,262,400	2,648,317	△614,083	△18.8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3,262,400	3,262,400	2,648,317	△614,083	△18.8
	- 기타	-	-	-	-	-
	합 계	5,574,188	5,654,188	4,771,567	△802,621	△14.4
지 출	○ 사업비	2,393,368	2,393,368	2,593,795	200,427	8.4
	- 경상사업비	2,393,368	2,393,368	2,593,795	200,427	8.4
	- 용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314,267	314,267	321,512	7,245	2.3
	- 인건비	205,170	205,170	213,454	8,284	4.0
	- 기타운영비	109,097	109,097	108,058	△1,039	△1.0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2,866,553	2,946,553	1,856,260	△1,010,293	△35.2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2,866,553	2,946,553	1,856,260	△1,010,293	△35.2

러. 원자력기금

□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계획안(B)	'15대비	
		당초 (A)	수정		(B-A)	%
수 입	○ 자체수입	205,930	205,930	321,329	115,399	56.0
	- (법정)부담금	201,330	201,330	306,142	104,812	52.1
	- 용자금회수	-	-	-	-	-
	- 재산수입	400	400	500	100	25.0
	- 기타	4,200	4,200	14,687	10,487	249.7
	○ 정부내부수입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보전수입	50,628	50,628	59,093	8,465	16.7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50,628	50,628	59,093	8,465	16.7
	- 기타	-	-	-	-	-
	합 계	256,558	256,558	380,422	123,864	48.3
지 출	○ 사업비	193,666	193,666	267,422	73,756	38.1
	- 경상사업비	193,666	193,666	267,422	73,756	38.1
	- 용자사업비	-	-	-	-	-
	○ 기금운영비	3,799	3,799	5,499	1,700	44.7
	- 인건비	-	-	500	500	-
	- 기타운영비	3,799	3,799	4,999	1,200	31.6
	○ 정부내부지출	-	-	-	-	-
	- 기금회계간	-	-	-	-	-
	- 기금간	-	-	-	-	-
	- 계정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보전지출	59,093	59,093	107,501	48,408	81.9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여유자금 운용	59,093	59,093	107,501	48,408	81.9

[참고자료4]

터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1. 출장 목적 :

- ① ENR Top 250기업 내 터키 건설업체 43개사가 진출한 점에 주목하고 중견 규모의 터키 건설사들이 어떻게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하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 현지 면담 실시
- ② 터키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 심사방식 및 Bond 발급 절차 등 조사
- ③ 터키 해외건설 부흥을 위한 기금 혹은 정책적 지원책 여부 조사

2. 기 간 : 2015. 11. 8 ~ 11. 14 (5박7일)

3. 출 장 지 : 터키 이스탄불

4. 출 장 자 : 해건협 정창구 책임연구원, 손준형 연구보조원

5. 출장내용(세부내용 별첨 출장개요 및 주요활동계획 참조)

- 터키 건설기업 : Ant Yapi, Dogus, Kalyon, STFA, Yapi Merkezi
- 터키 금융기관 : Garanti Bankasi, Turkiye Is Bankasi
- 국내 금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연락사무소

■ 주요 활동내용

1. Dogus Insaat (Construction) 면담

- 일 시 : 2015. 11. 9(월) 10:00
- 장 소 : 이스탄불市 Dogus Construction 본사 사무실
- 참석자 : 총 4인
Dogus : Alp Kinay (Chief Finance Officer)
해외건설협회 :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황규인 소장

□ 면담 주요인사



**DOĞUŞ CONSTRUCTION
AND TRADE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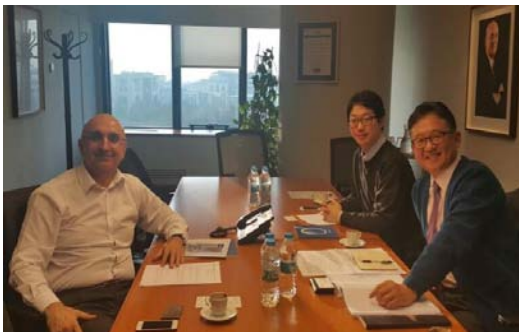
Alp KINAY
Assistant General Manager
CFO

Cumhuriyet Caddesi No: 2
34810 Kavacık - Beykoz - ISTANBUL / TURKEY
Phone : (90-216) 538 15 00
Direct : (90-216) 538 16 46
Fax : (90-216) 331 29 29
E-mail : alpk@dogusinsaat.com.tr
Web : www.dogusinsaat.com.tr



DOĞUŞ GROUP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도우쉬 그룹(Dogus Grubu)은 터키 재계 1위의 종합그룹으로 금융, 자동차, 건설, 미디어, 여행, 부동산, 에너지 총 7개의 분야에 12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음
- 이 그룹은 총 12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임원들 대부분은 그룹 내 기업들의 실질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도우쉬 그룹의 금융 분야에서는 터키 민영은행 중 두 번째로 큰 Garanti Bankasi 및 그 계열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설분야에서는 Dogus Insaat, Teknik Muhendislik ve Musavirlik A.S. 등이 있음
- 도우쉬 건설은 1950년 설립되어 인프라 부문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ENR Top 250 기준 179위에 랭크되어 있음
- 주요 진출국은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사우디임
- 리스크 관리는 그룹 내 Dogus Holding과 Construction Committee의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리스크 헷지가 가능함
- 도우쉬 건설은 Dogus Holding으로부터 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위한 지원받고 있는데, Dogus Holding이 대표로 무

디스나 S&P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신용도를 이용해 해외 진출사업에 대한 대출, 이행성 보증 발급, Equity 투자가 가능함

- 기본적으로 도우쉬 건설은 자국 및 해외 금융기관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Credit line을 형성하고 있음
- 간혹 해외 발주처 은행의 경우, 예금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도우쉬 그룹 내 Garanti Bankasi 현지 지점을 통해 조정하여 해결함
- 도우쉬 건설은 중견건설사이나, 정부의 큰 도움 없이 이행성 보증 발급이 수월했던 이유로 그룹 내 Holding사, Garanti Bankasi, 터키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꼽았음
- 한국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이행성 보증 발급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자 Mr. Kinay(CFO)는 “누구나 처음부터 실적이 나 신용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이 수월한 것은 아니므로 해외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그들을 끌어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함
- 도우쉬 그룹은 2012년 SK그룹과의 1억 달러의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건설사와의 JV나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으므로 터키 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도우쉬와의 협업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2. Kalyon Insaat Group 면담

- 일 시 : 2015. 11. 9 (월) 14:00
- 장 소 : 이스탄불市 Kalyon Insaat Group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4인
Kalyon : Asim Dincer(Vice President, Financial Affairs)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황규인 소장

☐ 면담 주요인사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Kalyon Group은 터키의 중견 그룹으로서 건설 분야에 특화되었으며, 1974년 설립됨

- 주로 인프라 분야인 철도, 고속도로, 항구, 파이프라인 등에 집중하고 있음
- 터키와 비교적 가까운 중동, Gulf만 지역에 진출하고 있었으나, 최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진출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Kalyon은 터키 Cengiz사와 컨소시엄으로 세계 최고 규모의 이스탄불 제3공항을 수주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음
 - 약 100억 유로가 공항 건설 단계에 투입되었으며, 다른 부문에 투입될 22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총 320억 유로가 투입될 계획임
- 반면, 이행성 보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도우쉬 건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터키 건설사들은 신용도가 좋으며, 터키 은행으로부터의 Credit line 형성도 양호함
 - Cashflow도 대부분 양호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제약이 없어 터키 금융기관들이 믿고 이행성 보증을 발급함
 - 신용평가를 위해 터키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Tax statement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 터키 수출입은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이자율로 매우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터키 건설사들이 의지하고 해외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응답함
- Kalyon은 한국 건설사들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다만, 한국기업의 저가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음
- 해외발주처들은 계속 낮은 금액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임

3. Garanti Bankasi 면담

- 일 시 : 2015. 11. 10 (화) 10:00
- 장 소 : 이스탄불市 Garanti Bankasi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7인

Garanti : Taliye Turker (Head of Trade Finance),
Serenad Yalcin Supervisor of Trade Finance),
Seda Pazarli (Supervisor of Correspondent
Banking), Melike Yaka (Associate)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황규인 소장

□ 면담 주요인사

Seda Pazarli
Supervisor
Correspondent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Head Office

Levent, Nispetiye Mahallesi Aydar Caddesi 2,
34340 Beşiktaş, İstanbul - Turkey
Phone: +90 212 318 1718
Facsimile: +90 212 216 6217
sedap@garanti.com.tr



Serenad Yalçın
Supervisor, Trade Finance
Financial Institutions

Head Office

Levent, Nispetiye Mahallesi Aydar Caddesi 2,
34340 Beşiktaş, İstanbul - Turkey
Phone: +90 212 318 1729
Facsimile: +90 212 216 6217
serenada@garanti.com.tr



Melike Yaka

Associate
Correspondent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Head Office

Levent, Nispetiye Mahallesi Aytar Caddesi 2,
34340 Beşiktaş, İstanbul - Turkey
Phone: +90 212 318 1715
Facsimile: +90 212 216 6217
melikaya@garanti.com.tr



Taliye Türker

Head of Trade Finance
Financial Institutions

Head Office

Levent, Nispetiye Mahallesi Aytar Caddesi 2,
34340 Beşiktaş, İstanbul - Turkey
Phone: +90 212 318 1720
Facsimile: +90 212 216 6217
taliyet@garanti.com.tr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Garanti Bankası는 터키 민영은행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으로서 1946년에 설립됨
 - 도우쉬(Dogus) 그룹에 속해 있으며, 자산 규모는 2015년 3월 기준 1,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지점은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몰타에 있음
- 이행성 보증발급 프로세스(자체적 Evaluation system 보유)
 - Branch에서 계약서 등 필요서류 접수 → Operation team → Correspondent team 최종 검토 → 발급 실행

- Garanti Bankası는 터키 건설사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진출 국가의 리스크에 대해 좀 더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있음
 - 단, 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보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는 편임 (협회의 사업성 평가 시스템과 유사)
- 리비아 사태와 같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태까지 Bond calling이 일어난 적은 없음
- 터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리스크가 높은 국가의 해외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신용한도가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음
 - 기업의 Capability가 넘어서는 해외사업은 애초에 추진하지 않으며,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대기업들의 하도급 공사를 맡으면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Cashflow를 개선하며 신용도를 높임 (대기업의 공동성장&상생협력 효과)
- 만약 터키 기업이 Mega project를 추진하는 경우, 은행들이 Share해서 이행성 보증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공동보증제도와 유사)

4. Yapi Merkezi 면담

- 일 시 : 2015. 11. 10 (화) 14:00
- 장 소 : 이스탄불市 Yapi Merkezi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5인
 Yapi Merkezi: Emre Aykar (Board of Director, President of CICA)

SK건설: 서석재 전무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황규인 소장

□ 면담 주요인사

Emre AYKAR
Ortak, Yönetim Kurulu Üyesi
Partner, Board Member



Yapi Merkezi İnşaat ve Sanayi A.Ş.
Burhanıye Mah. Hacı Rüşit Paşa Sok.
No:4/A, Şişli-Üsküdar İstanbul / Türkiye
Tel : (90-212) 321 90 00
Fax : (90-212) 321 90 13
e-mail : emre.aykar@ym.com.tr
http : www.ym.com.tr



Seok Jae Seo
Senior Vice President
President & CEO of ATAS

SK E&C
139-18, Gwanhoo-dong,
Jongno-gu, Seoul 110-300 Korea
mobile +82-10-5415-5569
sjlee@sk.com
www.skcc.com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Yapi Merkezi Group은 1965년에 설립되었고 자회사로 Holding, Construction, Pre-fabrication, Real Estate, Education 등을 가지고 있음
- Yapi Merkezi 건설은 그룹 내 첫 번째 회사였으며, 주로 산업시설을 건설하고 터키 내 주요 인프라 사업을 주도했음
 - 현재는 대규모 종합건설사로서 성장하여 지하철, 교량, 주차장, 주택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사업 중임
 - 적극적인 해외사업 진출은 터키의 금융위기 후인 2003년

- 부터 집중하기 시작함
 - SK건설과 공동으로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50% 지분 투자)
- 주요 진출지역은 북아프리카, 중동, 사하라 지역이며, 최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문제로 진출을 재검토 중
- 금융위기 당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시장 다변화를 추진했기 때문임(한 부분에 집중할수록 리스크가 커짐)
- Yapi Merkezi 또한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이행성 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음
 -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 발급 활성화를 위한 터키 정부나 협회의 정책은 없다고 함
 - 터키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거나, 해외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서 보증을 발급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
- 해외건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금이나 정책은 없으나, 대신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터키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세네갈,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의 저개발 국가에도 대출을 해줄 만큼 자체 가이드라인을 확대한 상태임
- Yapi Merkezi의 Board of Director인 Emre Aykar는 TCA(터키건설협회)의 부사장, FIEC(유럽건설산업연합)의 부사장, CICA(해외건설협회연합)의 회장을 동시에 역임하고 있음

- 이 중 CICA(Confeder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s)는 전 세계 해외건설협회 단체의 연합회이며, 현재 FIEC(유럽건설산업연합), FIIC(라틴아메리카건설협회), OCAJI(일본해외건설협회), CINCA(중국해외건설협회), CCA(캐나다건설협회), TCA(터키건설협회), CBIC(브라질건설산업회) 등이 참여 중임
-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건설금융, PPP, 조달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 토론 및 연구를 진행함

5. Türkiye İş Bankası A.S. 면담

- 일 시 : 2015. 11. 11 (수) 10:00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市 Türkiye İş Bankası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10인

Türkiye İş Bankası : Can Yucel (Manager), Sermin Sosanoglu (Manager), Tulin Inhan (Manager), Pinar Tunalı (Specialist), Gul Aydin (Assistant), Ozgur Taskinoz (Assistant), Senay Demiray (Assistant)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황규인 소장

□ 면담 주요인사



Tulin Inhan
Unit Manager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İş Kuleleri Kule 1
34330 Levent / İstanbul

Phone : +90 (212) 316 28 50
Fax : +90 (212) 316 08 32
tulin.inhan@isbank.com.tr



Pınar Tunalı
Specialist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Corporate Banking
Marketing and Sales Division
İş Kuleleri Kule 1 Kat:29
34330 Levent / İstanbul - Turkey

Phone : +90 (212) 316 42 32
Fax : +90 (212) 316 07 43
pinar.tunali@isbank.com.tr



Can Yücel
Unit Manager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Corporate Loans Underwriting Division
İş Kuleleri Kule 1 Floor:31
34330 Levent / İstanbul - Turkey

Phone : +90 (212) 316 20 71
Fax : +90 (212) 316 08 55 - 56
can.yucel@isbank.com.tr



Gül Aydın
Assistant Specialist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İş Kuleleri Kule 1
34330 Levent / İstanbul - Turkey

Phone : +90 (212) 316 28 22
Fax : +90 (212) 316 09 28
gul.kostu@isbank.com.tr



Şenay Demiray
Assistant Manager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İş Kuleleri Kule 1
34330 Levent / İstanbul

Phone : +90 (212) 316 28 49
Fax : +90 (212) 316 08 32
senay.demiray@isbank.com.tr



Y. Özgür Taşkınöz
Assistant Manager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İş Kuleleri Kule 1
34330 Levent / İstanbul - Turkey

Phone : +90 (212) 316 28 42
Fax : +90 (212) 316 08 32
ozgur.taskinoz@isbank.com.tr



N. Sermin Saraç Sosanoğlu
Unit Manager

Türkiye İş Bankası A.Ş.
Head Office
Corporate Loans
Underwriting Division
İş Kuleleri Floor: 31
34330 Levent / İstanbul - Turkey

Phone : +90 (212) 316 20 48
Fax : +90 (212) 316 09 55 - 56
sermin.sarac@isbank.com.tr

□ 면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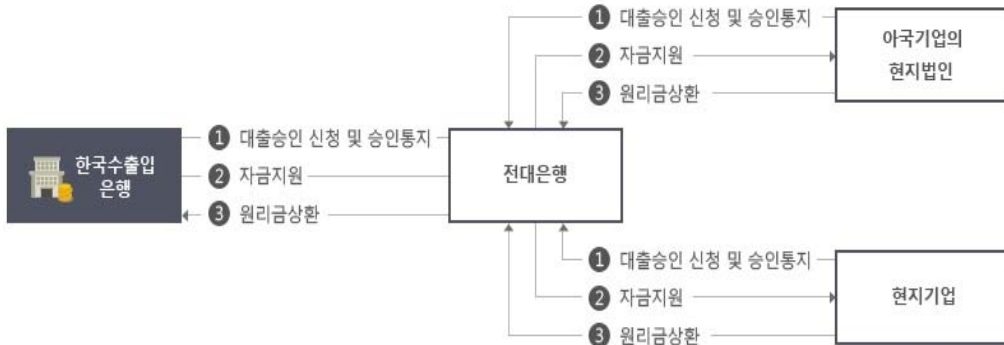


□ 면담 및 회의내용

- Türkiye Is Bankasi는 터키 최대 규모의 민영 은행이며, 1924년 설립됨
- Türkiye Is Bankasi 또한 이행성 보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Garanti Bankasi와 유사한 점을 보임
 - 기본적으로 신용도를 보고 이행성 보증을 발급하며, 터키 수출입은행에 비해 신속한 발급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음
 - 발급 프로세스 : 지점에서 Proposal 접수 → Separate Underwriting Division 검토 → 본사 내 Committee 상정 → 리스크 검토 완료 후 발급
- 일반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Türkiye Is Bankasi는
 - ① 이 회사가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가? ② JV일 경우, 그 기관은 어디인가? ③ 모기업이 있을 경우, 모기업의 구조는 어떠한가?도 함께 검토함
- 중소·중견기업(SME)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없으며, 대부분의 터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행성 보증 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는다고 함
- Garanti Bankasi와 마찬가지로 리비아 사태로 인한 Bond calling 경험이 있었으며, 지금은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검토 수위를 높여 대비하고 있음
- 만약 우리 건설기업이 Türkiye Is Bankasi로부터 이행성 보증 발급을 원할 경우, 터키 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자국기업 우대)

- Türkiye Is Bankası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투스텝복합금융(전대금융)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터키 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이 전대은행인 Türkiye Is Bankası에 설정한 Credit line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현지(터키)법인의 투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현지(터키) 기업의 국내법인 관련 물품·용역 구매 등을 지원하는 상품

<전대금융 구조도>



- 우리 기업 터키 법인이 Türkiye Is Bankası에 대출 상담을 하면, Türkiye Is Bankası가 수출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승인을 통해 Türkiye Is Bankası가 직접 집행하게 됨으로써 유리한 조건의 금융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음
- 해외 PF 조달이 쉽지 않고 정부가 직접 발주공사를 내기엔 재정이 열악한 국가에서 유리하며, PF보다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우리 기업 현지 법인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해외 발주처의 공사대금에 자금지원이 가능함

6. STFA Construction Group 면담

- 일 시 : 2015. 11. 11 (tn) 14:00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市 STFA Group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5인

STFA : Tolga Mut (Manager of Business Development),
Emre Sen (Chief)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황규인 소장

□ 면담 주요인사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STFA Group은 건설, 가스, 시설, 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터키의 대표적인 그룹으로서 1938년에 설립되었으며, 리비아, 사우디, 이집트 등에 처음으로 진출한 터키 건설기업임

(2014년 ENR 192위)

- 주로 해상 공사(컨테이너 터미널, 항구 등)와 교통(도로 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진출지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임
 - 현재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인도, 그리스, 모로코, 알제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 최근 터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춤하였던 PPP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노력 중
 - 터키 건설기업들이 금융을 동반하여 수행하는 해외공사가 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금융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임
- 터키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①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격 ② 목표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 ③ 자국 건설기업과의 상생협력(대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꼽음
- 한국 건설기업이 대규모 해외사업에 입찰할 시, 컨소시엄(JV 등)이 공구마다 나누어 입찰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수주를 하고 난 후임
 - STFA는 한국 건설기업이 수주한 해외 공사를 제3국 건설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음
 -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면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STFA는 Dogus와 Yapi Merkezi와 마찬가지로 이행성 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음
- 자국 은행뿐만 아니라 Credit line이 형성되어 있는 해외 Local 은행에서 발급받기도 하며, 수수료율도 좋은 편
- STFA는 한국의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동반진출을 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맡기는 노력을 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이행성 보증 발급이 수월할 것으로 보았음

7. Ant Yapi Construction 면담

- 일 시 : 2015. 11. 12 (목) 10:00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市 Ant Yapi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4인

Ant Yapi : Senith Kutay (Manager of Business Development), Ali Atay (Manager of Finance & Administration)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 면담 주요인사



Senith KUTAY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Human Resource Manager
Quality&HSE Manager
Architect Engineer DPMG - Urbanist D1SS

Moscow Office
125319 Moscow / Russia,
Kochetovskiy Proezd, Dom 4, Korpus 2
Office 2-2-1A1
Phone: +7 495 941 61 64
Fax : +7 495 941 61 66
e-mail : skutay@antypapi.com

www.antypap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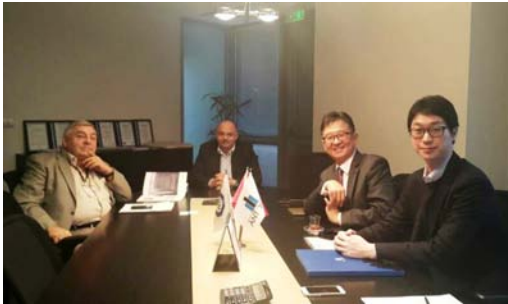


Ali ATAY
Finance and Administrative Manager

Ant Yapi Industry & Trade JSC
Saray Muh. Akpakoca Cad. No:11
34768 Ümraniye / Istanbul / TÜRKİYE
Phone: +90 (216) 630 67 67 / 226
Fax : +90 (216) 632 56 40
e-mail: aliatay@antypapi.com

www.antypapi.com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Ant Yapi는 1991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기업으로 인프라와 건축 사업에 강함
- Ant Yapi는 터키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성장하여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외개발 사업에 집중하여 많은 실적을 쌓음
- 러시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바레인과 같이 터키 기업이 꺼려하는 곳을 오히려 공략하여 진출하였음
 -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아직 단가가 낮은 주택의 수요가 높은 편이며, Ant Yapi만의 전략으로 공략 중
- 터키에서는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중소·중견기업이 자국 내 발주사업, 개발사업, 나아가 해외사업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함
- Ant Yapi가 원도급사일 경우, 최소한 50~60%의 업무(혹은 인력)를 자국 내 기업에 하도급을 맡기고 있음

- 이행성 보증 발급이 어려운 건설사는 처음부터 하도급 해외공사를 맡으려 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경우에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음 (좀 더 작은 규모의 해외사업을 수행하여 내실을 다지려 함)
- 특이한 경우로, 하도급사가 선수금(AP)을 받지 않고 기성으로만 공사대금을 수령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증을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음
- 터키 정부의 정책이나 금융기관이 직접 나서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혹은 이행성 보증 발급을 돕는 것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함 (대기업의 상생협력 등)

8. 수출입은행 터키 연락사무소 방문

- 일 시 : 2015. 11. 13 (금) 10:00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市 수출입은행 터키 연락사무소
- 참석자 : 총 3인
수출입은행 : 정석찬 소장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 손준형 대리

□ 면담 주요인사

YOUR PARTNER FOR GLOBAL BUSINESS

정 석 찬

이스탄불 사무소
소장

K 한국수출입은행

Büyükdere Cad. No. 237, Nispetiye
İs Merkezi 3Kat, D303, Maslak İstanbul
TEL : +90-212-286-5224
Mobile : +90-531-665-4507
E-mail : bdrover@koreaexi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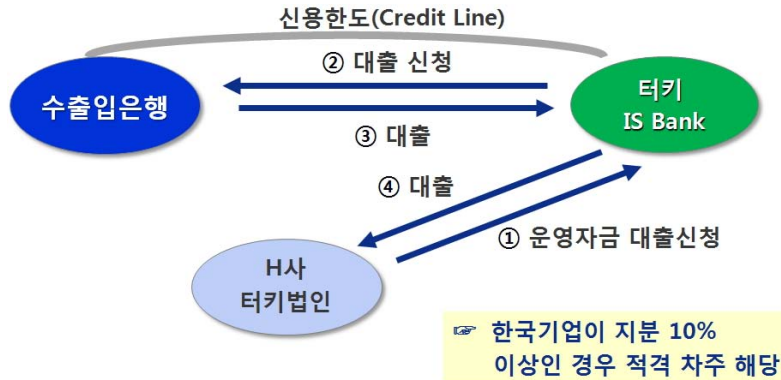
□ 면담 사진



□ 면담 및 회의내용

- 2014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은 터키 이스탄불에 수출입, 해외투자 금융 주선 등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영업 및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였음
- 최근 터키는 발전,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2012년 6월 SK건설의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에 2.8억 달러의 금융을 제공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삼성물산이 EPC 계약자 겸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인 키리칼레 사업에 1.5억 달러의 PF를 제공함
- 또한, 터키 민영은행인 Yapi Kredi Bankasi와 Turkiye Is Bankasi와 각 50백만, 100백만 달러의 투스텝복합금융 공여 계약을 체결했음

<터키 투스텝복합금융 사례>



- 이에 따라 터키의 기업들은 물품 및 용역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할 때 결제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효과적일도 것임
- 앞서 설명한 전대금융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현지법인에 건설공사를 맡겨주는 해외 발주처의 공사대금에 자금지원이 가능함
- 수출입은행은 터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건설기업이 필요로 할 경우, 금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협회의 터키 연락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함

■ 종합평가

- 지난 11월 1일 터키 총선이 있었으며, 예상과 달리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내세웠던 집권당이 압승했음
- 집권당은 터키 건설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과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음

- 또한, 비전 2023의 일환으로 인프라, 의료시설 등의 대규모 사업을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은 터키 진출을 고려할 시, 터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음
- 본 출장과 연구용역의 목적은 ENR Top 250기업 내 터키 건설기업 43개사가 진출한 점에 주목하여 중견 규모의 터키 건설사들이 어떻게 이행성 보증을 발급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었으며, 터키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 발급 절차 등을 조사하고, 터키 해외건설 부흥을 위한 기금 혹은 정책적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음
 - 조사를 위해 현지 건설기업, 금융기관, 국내 건설기업 현장 사무소, 수출입은행 연락사무소를 면담하였고, 현지 기업들의 사업전략 및 관리방법과 이행성 보증 발급 현황 및 견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터키 대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터키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하며 조금씩 내실을 다질 수 있었고,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해외사업 진출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임
 - 터키의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기관과 유사한 이행성 보증 발급 프로세스와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로 자국의 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있었음
 - 터키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우리 대

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제3국 기업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힘

- 우리 해외수주액 중 90%를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해외 하도급 공사마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이들은 해외진출을 시작조차 할 수 없으므로 우리 대기업들은 산업적 약자인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하는 상생협력이 해외수주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이행성 보증 등 터키 내 금융지원과 관련 이미 수출입은행 터키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고, 터키의 1, 2위 규모의 민영은행과 투스텝복합금융 신용공여가 계약되어 있는 만큼 우리 건설기업들이 터키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우리 협회는 터키 현지 연락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터키 진출을 추진하는 회원사를 지원해 나갈 것이며, CICA(해외건설협회연합) 가입을 검토하여 중국(CINCA), 일본(OCAJI)과 같이 전 세계 해외건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해외건설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참고자료5]

설문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해외건설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과제인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 방안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주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행성 보증발급 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주된 동 용역은 **이행성 보증발급 현황, 애로사항 등의 조사를 통해 적합한 지원정책(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 제·개정안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행성 보증발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소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동 설문조사 결과는 이행성 보증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처 : 금융지원처 정종현 팀장, 김효은 대리

(T. 02.3406.1022 / 1023)

§. 제출기한 : ~ 2015년 9월 11일(금)까지

§. 제출처 : E-mail - hekim@icak.or.kr / Fax - 02.3406.1123

§. 설문응답기관 정보

업체명		업체규모*	중소 ()	중견 ()
본부(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엔지니어링은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산업 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3. 귀사의 주된 수주방식에 따라 3-1, 3-2를 택일하여 답변하시되, 귀사가 원도급과 하도급을 함께 수행하신다면 두 문항 모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귀사가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 원도급 형태로 사업참여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주로 거치는 거래 단계는 무엇입니까? ()

- ① 직보증(은행) : 국책은행 or 주거래은행 보증 발급 → 발주처
- ② 직보증(은행)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③ 직보증(부보기관) : 부보기관 보증 발급 → 발주처
- ④ 복보증(은행) : 국내은행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⑤ 복보증(부보기관) : 부보기관(국내지점) → 국내(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⑥ 복보증(부보기관) : 부보기관(해외지점, 해외사무소)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⑦ 복복보증(부보-은행) : 부보기관 → 국내은행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⑧ 발주처와 오랜 거래관계로 보증서 제출 생략

3-2. 귀사가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 하도급 형태로 사업참여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주로 거치는 거래 단계는 무엇입니까? ()

- ① 직보증(은행) : 국책은행 or 주거래은행 보증 발급 → 발주처
- ② 직보증(은행)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③ 직보증(부보기관) : 부보기관 보증 발급 → 발주처
- ④ 복보증(은행) : 국내은행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⑤ 복보증(부보기관) : 부보기관(국내지점) → 국내(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⑥ 복보증(부보기관) : 부보기관(해외지점, 해외사무소)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⑦ 복복보증(부보-은행) : 부보기관 → 국내은행 → 현지로컬은행 → 발주처
- ⑧ 발주처와 오랜 거래관계로 보증서 제출 생략

4. 귀사가 발주처(원도급사) 앞 직보증이 아닌 복보증이나 복복보증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개 선택) ()→()→()

- ① 자사의 신용도 부족 문제로 인한 부보기관의 담보 추가 요구
- ② 현지발주처의 요구 반영(현지로컬은행을 경유하도록 하려는 발주처의 의도 등)
- ③ 은행의 단독발급 기피로 인하여 여러 금융기관을 통한 공동발급 필요
- ④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 기피로 인한 현지로컬은행 혹은 외국계은행 경유
- ⑤ 국내 원도급사의 은행 보증서 요구
- ⑥ 기타 ()

5. 하도급으로 공사수행시 원도급사에게 은행보증서 대신 부보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의 부보서를 대신 제출하신 적이 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부보서 제출한 적 없다. ② 25% 이하 ③ 50% 이하 ④ 75% 이하 ⑤ 75% 이상

6.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개 선택) ()→()→()

- ① 보증한도 부족 ② 워크아웃 등으로 인한 신용취급불가 ③ 현지진출경험 부족
④ 사업성 부족 ⑤ 추가 담보요구에 대해 대응불가 ⑥ 기타 ()

6-1. 보증서 발급거절은 주로 어떤 보증 단계에서 발생하였습니까? ()

- ① 입찰보증(B-bond) ② 이행보증(P-bond) ③ 선수금환급보증(AP-bond)
④ 하자이행(W-bond) ⑤ 유보금환급보증(R-bond) ⑥ Surety bond

6-2.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발급이 거절된 후, 현지로컬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국내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

- ① 국내금융기관보다 낮은 담보요청비율
② 공사수행실적, 사업성으로만 평가
③ 국내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보증한도를 받기 어려웠으나 현지에서는 신용으로 한도 제공
④ 국내금융기관보다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
⑤ 기타 ()

7.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시 가장 많이 요구받는 담보는 어느 것입니까? (기관별로 1개씩 선택)

⇒ 국내시중은행 (), 국책은행 (), 부보기관 ()

- ① 보증(법인, 개인) ② 부동산 ③ 예금담보
④ 보험기관 보증서(부보) ⑤ 신용 ⑥ 기타

8. 향후 귀사의 신용도 개선 및 실적 향상시 보증발급을 희망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 ① 수출입은행 ② 주거래은행(K-Sure, 건공 등 부보율 감소조건)
③ 주한 외국계 은행 ④ 서울보증보험 ⑤ 현지로컬은행

8-1. 8번에서 국내은행(시중, 수은)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 ① 해외건설 메커니즘 이해부족 ② 과도한 담보요구 ③ 과도한 수수료
④ 심사(승인)기간 과다 ⑤ 기타 ()

9. 정책금융기관과 국내시중은행을 병행하시는 경우 수수료를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

(동일한 담보제공 가정, \$1천만 P-Bond: 수은 \$5백만, 시중은행 \$5백만 발급시)

- ① 0.25% 이하 ② 0.25~0.50% ③ 0.50~0.75%
④ 0.75~1.00% ⑤ 1.00% 초과 ⑥ 1.50% 초과

▶ (가칭)해외인프라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칭)해외인프라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기금으로, 만약 조성이 된다면 중소·중견건설업체 보증지원사업, 해외발주처 등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 기금은 정부지원금, 연기금·공제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들의 출연 등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 귀사는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 이행성보증 발급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해외건설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 ② 상대국 Sovereign Risk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므로
- ③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④ 국내 PF 부실 등에 따른 위험분산 차원
- ⑤ On-demand 보증방식으로 인한 본드콜 우려

10-1. 귀사는 국내금융기관의 해외건설 이행성보증 발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업별 신용한도 확대
- ② 보수적으로 설정된 국가별 신용등급 상향 조정
- ③ 본드콜 발생시 자금지원
- ④ 프로젝트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유도
- ⑤ 해외건설 전문 금융인력 양성
- ⑥ 기타 ()

11. 귀사는 이행성 보증 발급시 해외인프라기금 출연액의 10배수까지 담보 제공이 된다면 동 기금에 출연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② 조성 후 운영추이에 따라 결정 ③ 없다.

11-1 만약 출연의사가 있으시다면, 출연금은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 ① 0.5억원 이하 ② 1억원 이하 ③ 5억원 이하 ④ 10억원 이하 ⑤ 10억원 이상

▶ **공동보증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보증제란 해외건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성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사업에 한해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들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도입,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개 사업(Bid, AP, P Bond 등 일체 합산)에 대한 각 기관당 보증 한도는 10억원(총 50억원) 이내이며, 센터 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액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필수요건

- ① 해외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발급 프로젝트
- ② 신용도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보증이 필요한 프로젝트
- ③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
- ④ 지원가능 여부 약식 검토시 거래안정성 평가표상 일정 점수 이상인 프로젝트

12. 공동보증제도의 도입이 보증지원 확대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②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12-1.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부 심사기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② 보증한도가 작아서
- ③ 관계 기관이 많아 심사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 ④ 사업성평가 기준 자체가 높아서
- ⑤ 기타 ()

13. 공동보증제도의 활용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귀사의 공동보증제도 연간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 ()억원

13-1. 현재 공동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관련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증종류	프로젝트명

14. 공동보증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가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기획재정부,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

기획재정부,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

기획재정부, 2014년도 기금현황

기획재정부, 2015년도 기금현황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2015.03.11)

이원희, 나경덕, 정아름, 회계기금간 여유재원 통합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정용혁·지정준,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실무가이드, 한국금융연수원, 2014

주택도시보증공사, 2015년 반기검토보고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